

현안연구

2023

OECD 주요국가 문화재정 비교분석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n OECD Countries' Public
Cultural Expenditure

황아람

OECD 주요국가 문화재정 비교분석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n OECD Countries' Public Cultural
Expenditure

황아람

연구책임

황아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연구방법	8
	3. 연구의 흐름	9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 검토	10
	2.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OECD 국가의 문화재정 현황	13
	제1절 문화재정 개념 및 구조	15
	1. 재정의 개념	15
	2. 재정의 구조	16
	제2절 OECD 국가의 문화재정 분석	18
	1. 분석 목적	18
	2. 분석 대상	19
	3. 분석 방법	19
	제3절 OECD 국가의 문화재정 변화	22
	1. GDP 대비 정부총지출	22
	2. 정부총지출 대비 여가·문화·종교	30
	3. 여가·문화·종교의 중앙-지방정부 분담	39

	제4절 소결	42
제3장	주요국가 문화재정운용 사례 분석	45
	제1절 분석 개요	47
	1. 분석 목적	47
	2. 분석 대상	48
	3. 분석 방법	49
	제2절 한국	50
	1. 문화행정체계	50
	2. 문화재정 운용	50
	3. 소결	56
	제3절 영국	58
	1. 문화행정체계	58
	2. 문화재정 운용	59
	3. 소결	67
	제4절 프랑스	69
	1. 문화행정체계	69
	2. 문화재정 운용	70
	3. 소결	77
	제5절 독일	80
	1. 문화행정체계	80
	2. 문화재정 운용	81
	3. 소결	87
	제6절 일본	89
	1. 문화행정체계	89
	2. 문화재정 운용	90
	3. 소결	97
제4장	결론	99
	제1절 주요 결과	101

1. OECD 국가의 문화재정 현황	101
2. 주요국가의 문화재정 현황	102
3. 주요국가 문화재정의 중점 투자 방향	104
제2절 시사점	106
참고문헌	109

표 목차

〈표 2-1〉 재원배분 분류체계 비교	17
〈표 2-2〉 정부기능별분류(COFOG) 분류체계	20
〈표 2-3〉 정부기능별분류(COFOG) 여가·문화·종교 세부부문	21
〈표 2-4〉 OECD 국가의 정부규모(일반정부 기준)	23
〈표 2-5〉 OECD 평균 GDP 대비 기능별 정부지출 추이(일반정부 기준)	24
〈표 2-6〉 OECD 국가의 GDP 대비 여가·문화·종교 정부지출 추이(일반정부 기준)	25
〈표 2-7〉 OECD 국가의 정부규모(중앙정부 기준)	26
〈표 2-8〉 OECD 평균 GDP 대비 기능별 정부지출 추이(중앙정부 기준)	28
〈표 2-9〉 OECD 국가의 GDP 대비 여가·문화·종교 정부지출 추이(중앙정부 기준)	29
〈표 2-10〉 OECD 평균 정부총지출 대비 기능별 정부지출 추이(일반정부 기준)	31
〈표 2-11〉 OECD 국가의 정부총지출 대비 여가·문화·종교 지출 추이(일반정부 기준)	32
〈표 2-12〉 OECD 국가의 10대 기능별 지출 중 여가·문화·종교 지출 순위(일반정부/2021년 기준)	33
〈표 2-13〉 OECD 평균 정부총지출 대비 기능별 정부지출 추이(중앙정부 기준)	34
〈표 2-14〉 OECD 국가의 정부총지출 대비 여가·문화·종교 지출 추이(중앙정부)	35
〈표 2-15〉 OECD 국가의 10대 기능별 지출 중 여가·문화·종교 지출 순위(중앙정부/2021년 기준)	36
〈표 2-16〉 OECD 국가의 여가·문화·종교 세부부문별 지출 현황(일반정부 기준)	37
〈표 2-17〉 OECD 국가의 여가·문화·종교 세부부문별 지출 현황(중앙정부 기준)	38
〈표 2-18〉 OECD 중앙정부-지방정부 여가·문화·종교 재정지출 부담비율	41
〈표 2-19〉 OECD 및 한국의 여가·문화·종교 정부지출 현황	42
〈표 2-20〉 OECD 국가의 1인당 GDP	43
〈표 2-21〉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국가 문화재정 현황	44
〈표 3-1〉 16대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51
〈표 3-2〉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52
〈표 3-3〉 문화 및 관광 소관부처별 추이	53
〈표 3-4〉 문화 및 관광 프로그램 예산 추이	54

〈표 3-5〉 문화 및 관광 세부부문 지출 추이	55
〈표 3-6〉 한국 문화재정의 세부부문별 구성비	55
〈표 3-7〉 문화·체육·관광 분야 투자계획	56
〈표 3-8〉 문화체육관광부 자원배분 계획	57
〈표 3-9〉 영국의 기능별 세출 추이(2018/19~2022/23 회계연도)	60
〈표 3-10〉 영국 부처별 경상지출 예산 추이(2018/19~2022/23 회계연도)	61
〈표 3-11〉 영국 부처별 자본지출 예산 추이(2018/19~2022/23 회계연도)	63
〈표 3-12〉 영국의 부처총예산 대비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예산(DEL)	64
〈표 3-13〉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세부 지출항목별 구성(2018/19~2022/23 회계연도)	65
〈표 3-14〉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세부부문별 분류 기준	66
〈표 3-15〉 영국 문화재정의 세부부문별 구성비	66
〈표 3-16〉 프랑스 미션별 세출예산 추이(2019~2023)	71
〈표 3-17〉 프랑스 미션별 문화 관련 세출예산 추이(2019~2023)	72
〈표 3-18〉 프랑스 정부부처 예산 추이(2019~2023)	73
〈표 3-19〉 프랑스 문화부 재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타부처 예산	74
〈표 3-20〉 프랑스 문화부의 프로그램 단위 예산편성 현황(2019~2023)	75
〈표 3-21〉 프랑스 문화부 및 타 부처의 프로그램 단위 예산편성 현황(2019~2023)	76
〈표 3-22〉 프랑스 문화재정의 세부부문별 분류 기준	76
〈표 3-23〉 프랑스 문화재정의 세부부문별 구성비	77
〈표 3-24〉 독일의 기능별 세출 추이(2019~2023)	82
〈표 3-25〉 독일의 부처별 예산 추이(2019~2023)	83
〈표 3-26〉 독일의 총리실 예산 편성 추이(2019~2023)	84
〈표 3-27〉 독일 문화재정의 세부 지출항목별 편성 추이(2019~2023)	85
〈표 3-28〉 독일 문화재정의 세부부문별 분류 기준	86
〈표 3-29〉 독일 문화재정의 세부부문별 구성비	87
〈표 3-30〉 일본의 기능별 세출 예산 추이(2019~2023)	91
〈표 3-31〉 일본의 문교 및 과학진흥비 구성	92
〈표 3-32〉 일본의 소관별(부처별) 예산 추이(2019~2023)	92
〈표 3-33〉 일본의 문부과학성 및 국토교통성 세부 예산 내역	93
〈표 3-34〉 일본의 문화청·스포츠청·관광청 예산 세부항목	94

〈표 3-35〉 일본 문화재정의 세부부문별 분류 기준	96
〈표 3-36〉 일본 문화재정의 세부부문별 구성비	96
〈표 3-37〉 제1기 문화예술추진 기본계획(2018-2022) 4대 목표	97
〈표 3-38〉 제2기 문화예술추진 기본계획(2023-2026) 7대 목표	98
〈표 4-1〉 주요국가의 국가재정 일반현황	102
〈표 4-2〉 주요국가의 문화재정 운용사례 결과 요약	103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9
[그림 2-1] 우리나라 재정의 분류	15
[그림 2-2] OECD 중앙정부-지방정부 여가·문화·종교 재정지출 부담비율	40
[그림 3-1]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부처별 지출한도(DEL)와 연간관리지출(AME) 예산 추이	6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1)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재정위험 요인 증가로 정부역할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3년(2020~2023년) 동안의 정부 재정지출 확대는 세계 각국의 재정적자를 야기하였고, 일상회복단계에 도입한 현재 공공지출의 재정건전성 관리와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등 강력한 긴축재정을 단행하는 상황임(윤소영·정보람 외, 2021)
 - 한국의 2023년 통합재정수지는 13.1조원 적자이고(GDP 대비 0.6% 감소), 국가채무는 1,134.4조원으로 GDP 대비 50.4% 수준으로 전망됨(국회예산정책처, 2003)
 - GDP 대비 50% 수준의 국가채무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지만, 채무비율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할 때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방안 모색이 요구됨(김재진, 2023)
- 한국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국가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핵심 영역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는 한편,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지출구조조정과 코로나19로 발생한 한시적 지원금 감축 등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거시적인 관점의 국가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지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긴축재정 시기 전후의 재정지출 구조를 비교하는 것은 정부가 집중 투자하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파악할 수 있음
 - 분야별 재정지출의 구조는 정부가 집중하는 정책활동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시대별 정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임
 - 한국의 경우 경제발전이 중요하던 과거에 경제와 국방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이 집중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국민의 행복수준과 삶의 질이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하며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지출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임(박기백, 2008; 정보람, 2016; 정보람·이학준, 2020)

2) 정부의 강력한 재정개혁 표방

-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국내 세입여건의 악화 및 복지지출 확충 전망 등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하여 강력한 재정개혁이 필요함을 제시함
 - 대외여건의 악화로 정부지출의 감축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지출의 자연증가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운용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증가시킴
 -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동시에 복지지출의 확충 필요로 인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임
- 국정과제의 하나로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채택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국무회의와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재정정상화를 위한 범부처 노력의 필요성을 지속 강조함
 -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은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법제화), 보조사업 및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재정지출 등 지출구조조정, 민간투자 활성화 등 재원조달 다양화 및 재정성과 관리체계 정비 등임
-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가 당면한 재정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지출의 효율화를 확보하기 위해 2070년까지의 중장기 재정전략인 「재정비전 2050」 수립하는 등 재정정책의 방향이 투입에서 재정지출의 관리로 변화하고 있음
- 지난 1년 간 정부가 표방한 재정정책 방향을 요약하면 거시적 관점에서의 예산총량관리, 보조사업 정비,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등으로 재량지출과 보조사업 비율이 높고 성과지표가 많은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3) 문화재정 편성 감소와 미래 대응전략 마련 필요

- 2023년도 정부 총수입은 625.7조원으로 전년(추경 609.1조원) 대비 16.6조원 증가하였고, 총지출은 638.7조원으로 전년 대비(추경 679.5조원) 40.8조원이 감소함
 - 2023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재정지출계획으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총지출 관리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됨
- 총지출이 감소한 와중에도 교육,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14.40%, 14.43% 증가한 96.3조원, 112.2조원으로 확대 편성되었고 이 외에도 통일·외교, 사회복지, 국방, 과학기술, 농림수산,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 예산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함
- 반면, 문화 및 관광을 포함한 6개 정책 분야의 예산은 감소하였는데,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18.5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6.99%), 보건(-11.82%), 교통 및 물류(-8.88%), 문화 및 관광(-5.40%), 통신(-0.07%) 순임
- 문화분야는 공공지출에 대한 효과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여타 사회보장 분야에 비해 정부의 재정투자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지속되어 왔는데(윤소영·정보람, 2018), 국가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문화분야 재정지출¹⁾은 정부총지출 대비 1.3% 내외의 소규모이긴 하지만, 건전재정기조 속에서 문화분야에 대한 예산 확보와 공공투자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함

2. 연구목적

1) 국제비교를 통한 재정규모 검토

- 한국의 문화재정 규모가 적절한 수준인지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한 OECD 국가들의 재원배분 현황과 문화재정 비율, 운용 사례분석 등이 필요함
- 국가별로 정치적(예. 집권정부의 성향), 경제적(예. 국민소득 및 산업구조), 사회적(예. 인구구조의 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분야별 적절한 재정지출 규모가 존재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재정규모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통해 분야별 재원배분의 수준이 과소한지 과대한지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함(박형수, 2005; 박기백, 2008)
 - 예컨대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중앙정부 총지출 기준으로 2005년 209.6조원에서 2023년 638.7조원으로 확대되어 20여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국회예산정책처, 2023), OECD 국가를 비롯한 국가간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함
 - 재정지출의 구성 또한 보건·복지·고용에 대한 지출 비중이 2013년 28.5%(99.3조원)에서 2023년 34.8%(226.0조원)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다른 나라의 사회보장 분야 지출에 비하면 낮은 수준임
- 더욱이 국가재정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에 있어 문화분야는 규모가 작고 해석상의 특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별도의 연구로 활발히 추진되지 않는 실정임
 - OECD 통계를 활용한 OECD 국가의 정부재정 규모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여가·문화·종교 예산의 비율은 정부총지출 대비 1%대에 불과하고, 국가별 성격에 따른 여가·문화·종교 지출의 특징을 유형화하기 어렵다고 지적됨(윤광재, 2008)
-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에서 OECD 국가의 문화재정 규모(여가·문화·종교 분야 정부지출)가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양혜원, 2013; 박승규, 2019; 신현재·김병섭, 2019; 정보람·이학준, 2021), 팬데믹 이후의 문화재정 운용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는 부족한 상황임

1)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정을 문맥에 따라 문화재정, 문화분야 재정지출, 문화 및 관광(16대 분야 기준), 문화체육관광(12대 분야 기준), 여가·문화·종교(COFOG 기준 용어) 등을 함께 사용함

2) 주요국의 재정운용 사례 분석

- 정부 재정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국제비교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분야별 지출 총량의 추이만을 알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재정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책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정부재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국가의 정책기조와 공공투자 방향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고, 특히 문화는 국가마다 규정하는 범위가 상이함으로 국가별 세출의 '문화' 분야 지출규모를 단순비교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따라서 OECD 통계자료를 토대로 회원국의 문화재정 변화 추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제2장), 정치적·경제적·사회적·역사적 맥락에 따라 상이한 목적과 전략을 갖고 추진되는 국가별 문화정책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례분석을 병행함(제3장)
- 분석대상 국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4개 국가로 선별하였으며 이는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이며 한국과 유사한 정부조직 유형(집중형 조직)을 채택하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임
 - 4개 국가에 대한 사례분석은 문화전담부처(행정체계), 문화정책 기조, 국가별 세출 기준에 따른 문화분야 지출 규모를 살펴본 뒤, 문화재정을 구성하는 세부부문을 재편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살펴보고자 함
 - 예컨대, 영국의 문화전담부처인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체육, 관광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유사한 업무 범위를 관장하고 있지만, 프랑스나 독일, 일본은 문화와 체육,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혹은 조직이 분리되어 있어 각각의 예산을 추출 및 재편해야 함
 - 국가별 세출 기준에 있어서도 문화와 체육의 기능이 나뉘어져 있거나 분산되어 있고, 관광 예산은 세출 기능의 하위인 프로그램 단위에 편성되어 있는 등 우리나라 재정구조와 차이를 보임
- 한편, 정부의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국가의 공공지출 투자방향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재정의 구성과 세부지출 항목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문화정책 기조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국가별 문화재정의 세부지출 항목 분석을 병행하였음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1) 시간적 범위

- 2023년을 기준으로 하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5년 단위 분석을 시도함
 - OECD 회원국 재정현황은 2017~2021년을 기준으로 함²⁾
 - 주요국 재정운용 사례분석은 2019~2023년을 기준으로 함

2) 대상적 범위

- OECD 회원국의 문화재정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
 - OECD 통계의 정부기능별분류(COFOG) '여가·문화·종교' 데이터 대상으로 분석함
- OECD 회원국 중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 실시
 - 국가별 문화행정체제와 문화재정운용 사례를 분석함

3) 내용적 범위

- 우리나라 문화재정의 현황과 전망
 - 국가재정의 개념과 범위, 재정정책의 주요 기조 분석
 - 문화재정의 주요 현황 및 정부 재정기조를 반영한 전망 제시
- OECD 국가의 문화재정 현황
 - GDP 대비 정부총지출
 - GDP 대비 기능별 지출 및 여가문화종교 지출
 - 정부총지출 대비 기능별 지출 및 여가문화종교 지출
 -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여가문화종교 지출 분담비율

2) OECD 통계의 회원국 정부지출 데이터는 2021년 기준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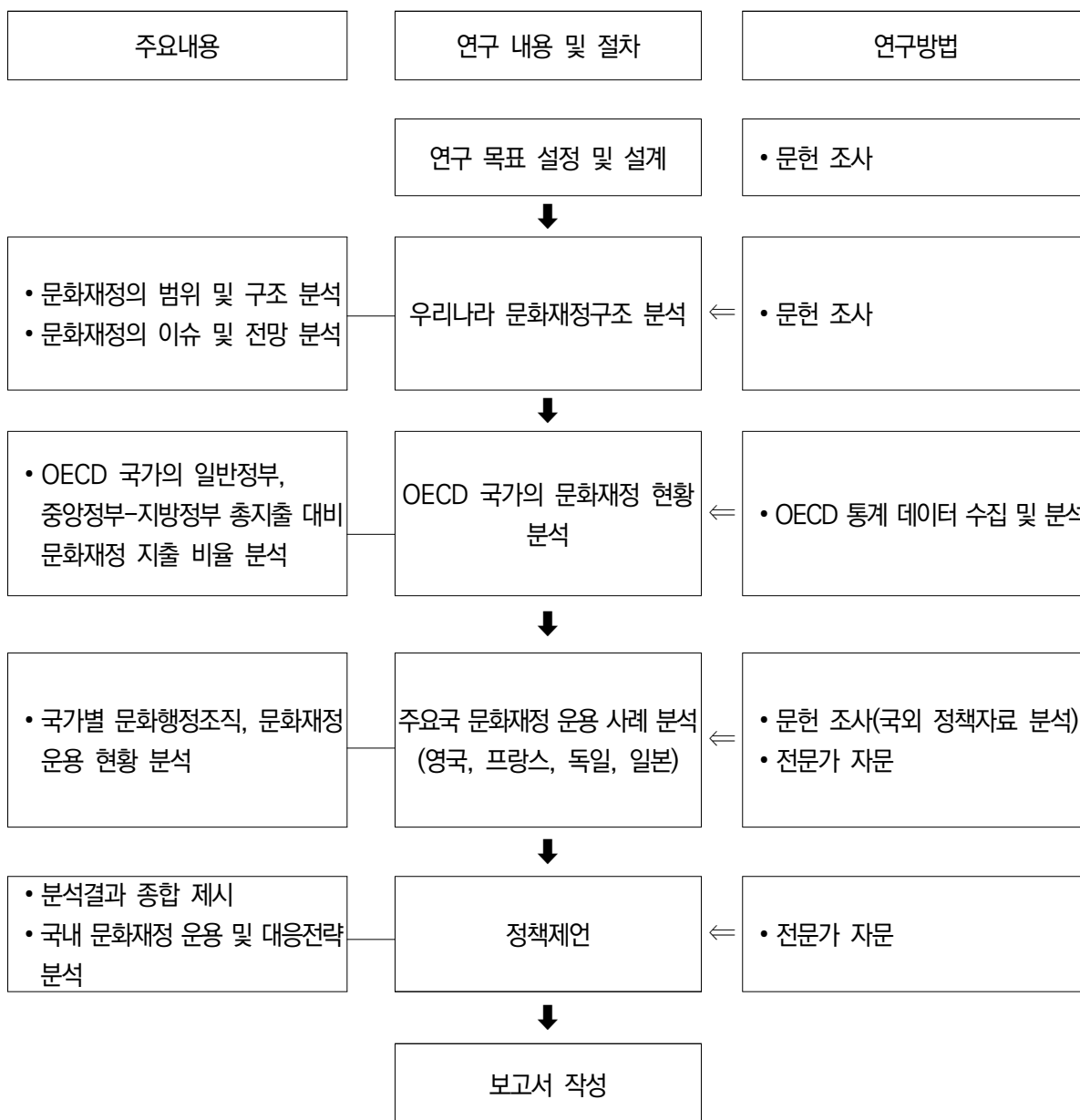
- 주요국가 문화재정운용 사례
 - 국가별 문화행정체계
 - 국가별 국가재정체계 및 문화재정운용 현황
 - 문화정책 방향 및 시사점 도출
- 정책제언

2. 연구방법

- 문헌검토 및 자료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
 - 재정분야 및 국제비교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정부발표자료, 보도자료 등을 통한 우리나라 재정정책 이슈 분석
- OECD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현황 분석
 - OECD 회원국의 정부총지출 및 GDP 대비 문화재정 현황 분석
- 주요국 정부보고서 등을 활용한 사례 분석
 - 주요국 문화전담부처 정부보고서(백서) 및 보도자료, 재무부 예산안 자료 등 검토
- 전문가 자문
 - 주요국의 사회, 문화, 역사에 대한 전문가 원고자문

3. 연구의 흐름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 한국의 문화재정(16대 분야 기준)은 정부총지출 대비 1.35% 내외로 규모가 작다보니 주류 재정학 연구에서 심도있게 다뤄지지 않는 편은 아니며, OECD 통계를 활용한 정부재정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에 있어서도 여가·문화·종교의 예산 비율이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함
- 그러나 문화분야에서는 일반회계 기준 문화재정 비율이 1%를 달성한 2000년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문화재정 규모와 지출구조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김세훈(2003), 윤주(2008) 등이 대표적임
 - 김세훈(2003)은 영국, 프랑스, 일본, 대만, 미국, 독일 및 스웨덴 7개 국가의 재무부, 문화부의 예산서와 정책자료를 참고하여 정부총지출 대비 문화재정 범위를 파악하였고, 문화재정의 범위를 문화분야 부처 예산 중 체육, 청소년 예산을 제외하고 문화재청 예산을 합한 값으로 설정함(기금 제외)
 - 윤주(2008)는 김세훈(2003) 연구에서 정의한 문화재정의 범위에 체육 예산을 포함한 값으로 문화재정을 재정의하였고 선행연구의 예산을 '문화예산 I'로, 자신의 문화예산 범위를 '문화예산 II'로 구분, 영국, 프랑스, 일본, 대만, 미국, 스웨덴, 이탈리아의 사례를 중점 분석하는 한편, 중국, 스페인, 캐나다, 폴란드, 노르웨이의 예산도 함께 검토함
- OECD 국가의 문화재정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국가별 정부의 공식 발표자료를 참고하여 문화예산을 분석하였으나, 분석 대상 국가의 예산을 동일한 기준에서 산출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보임
- 이에 양혜원(2011), 정보람(2016)의 연구에서부터 OECD 통계의 정부 재정지출 데이터를 활용한 계량적 분석이 시도되었고, 동시에 재정의 규모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없는 국가별 특성은 사례분석을 통해 보완함
 - 양혜원(2011)은 OECD 통계에서 가용한 28개 국가에 대한 재정규모를 분석한 뒤, 영국, 프랑스, 일본, 대만, 이탈리아 및 스페인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함
 - 정보람(2016) 역시 OECD 통계를 기반으로 30개 국가의 문화재정 규모를 분석한 후 영국, 프랑스, 일본, 대만 및 중국의 문화재정 운용 사례를 분석함
 - 본 연구도 OECD 통계의 정부 재정지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OECD 회원국 32개국의 문화재정을 분석함

- 문화재정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 OECD 통계의 데이터를 활용해 문화재정의 규모를 변수로 설정하고 국가별 국민의 행복수준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발표되기도 하였으나(양혜원, 2013; 박승규, 2019; 신현재·김병섭, 2019; 정보람·이학준, 2021), 국가별 정책형성 맥락을 고려한 질적 연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음

2. 연구의 차별성

-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문화재정을 비교분석한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국가간 문화재정 규모를 동일한 기준에서 산출되는 OECD 통계에 기반해 분석하고 양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으며, 연구목적 및 내용상에서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확보함
- 연구목적 측면에서는 OECD 국가의 문화재정과 비교를 통해 한국 문화재정의 상대적 규모를 파악한다는 기존의 연구목적을 유지하되, 주요국가의 문화재정 세부지출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문화정책의 방향 및 집중 투자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음
 - 이는 한국 문화재정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소한지 과대한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문화재정 운용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임
- 이에 따라 연구내용 측면에서는 문화행정체제와 문화예술, 문화재, 체육, 관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 조직의 예산을 각각 합산하여 세부부문별 규모를 산출하는 국가별 사례분석과 더불어, 분석 대상 국가의 재정정책 및 문화정책 방향이라는 큰 틀 속에서의 중점 지출방향을 분석함
 - 한 국가의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가 해당 정부활동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재정의 세부 지출항목 역시 국가가 추진하는 문화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례연구 수행 시 절대적인 재정규모 외에도 국가별 재정 및 문화정책 관련 정부자료를 참고하여 정책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음
 - 이러한 분석의 결과,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디지털 혁신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2022년 6월 「영국 디지털 전략(UK's Digital Strategy)」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 2022/23 회계연도부터 부처 예산항목에 '디지털 UK'을 새롭게 신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독일의 연방 문화미디어청(BKM)은 문화와 지속가능성 부서를 신설하고 문화와 기후에 관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10% 증액 편성하였고 다양성, 성평등, 기후위기, 예술인 지원 강화(망명예술인 포함) 등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함
- 다만 연구방법의 측면에서는 OECD 통계의 정부지출 데이터를 활용하고 주요국가 사례분석 시 국가재정 및 문화에 관한 국가별 정부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하는 등 선행연구의 방법을 유지하였음

제2장 OECD 국가의 문화재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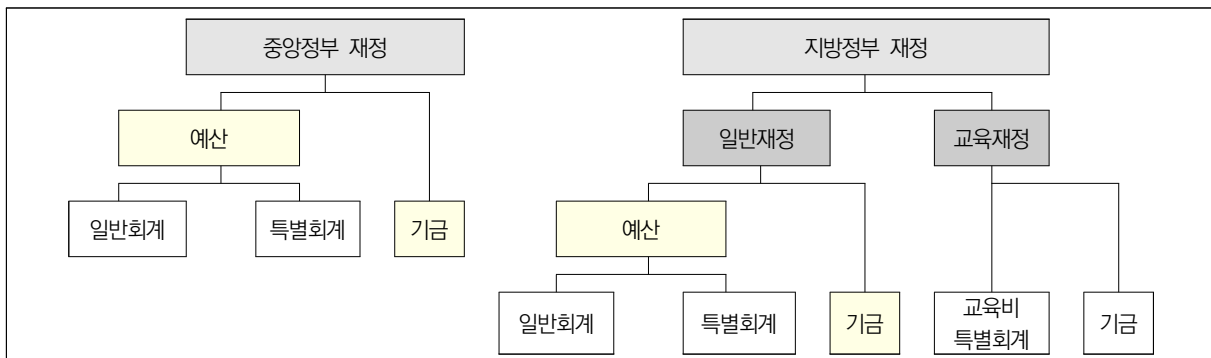
제1절 문화재정 개념 및 구조

1. 재정의 개념

1) 국가재정

- 재정(public finance)이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정부의 재정활동을 의미하며 운용의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으로 구분되고, 수단에 따라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함
-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는 재정지출계획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기금은 예산과 별도로 운용되는 재정수단으로 성질에 따라 그 유형이 구분됨
 - 기금의 유형은 사업성기금, 사회보험성기금, 금융성기금 및 계정성기금으로 구분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은 모두 사업성기금에 해당함
- 통상적으로 국가재정 또는 정부재정이라 함은 중앙정부 재정을 의미하며, 중앙정부 재정은 일반회계와 20개의 특별회계, 68개의 기금으로 구성됨³⁾
- 지방정부 재정은 일반재정(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과 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됨
 - 본 연구의 중점 분석대상은 중앙정부 재정이며 필요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을 함께 검토하고자 함

[그림 2-1] 우리나라 재정의 분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3 대한민국 재정」에서 인용

3) 특별회계는 5개의 기업특별회계와 16개의 기타특별회계로 구분, 기금은 사업성기금(49개), 사회보험성기금(6개), 금융성기금(8개), 계정성기금(5개)으로 구분함

2) 문화재정

- 문화재정이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활동으로 통합재정 관점에서 예산과 기금을 모두 포괄하며, 기능별 세출 상의 ‘문화 및 관광’ 또는 ‘문화·체육·관광’을 의미함⁴⁾
 - 국가재정구조 상 16대 분야에서는 ‘문화 및 관광’이고 12대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에 해당함
- 문화재정은 정부지출의 세출 기준에 따른 분야(문화 및 관광, 문화·체육·관광)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보다 넓은 개념이고, ‘문화 재정으로 불리긴 하나 문화예술 활동 외에도 체육, 관광 등이 포함되는 특징이 있음
 - 한국의 문화재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외에도 문화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소관하고 있음
- 한국에서 문화재정에 대한 관심은 정부총지출의 1%(일반회계 기준)가 넘어선 2000년대 이후부터 확대되어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기조에 따라 ‘문화재정 2%’ 달성을 목표로 2017년 1.72%까지 꾸준히 증가해오기도 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2. 재정의 구조

- 국가재정은 수입과 지출로 이뤄지며 재정수입을 하나의 계정으로 모은 후에 기능별 세출 기준에 따라 재정지출계획에 기반하여 집행이 이뤄짐
 - 우리나라의 재정수입은 예산수입과 기금수입으로 나뉘며 예산수입은 다시 일반회계(국세수입, 세외수입), 특별회계(국세수입, 자체세입)로 구분,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융자원금회수, 기타로 구분함
 -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산의 수입을 세입으로, 지출은 세출로 명시하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활동과 구분함
-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기능별 세출은 16대 분야와 12대 분야의 두 가지 기준이며, 목적에 따라 쓰임이 달라짐
- 16대 분야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도입으로 기존의 ‘장-관-항’에서 ‘분야-부문-프로그램’으로 전환된 예산체계이며 「국가재정법」이 시행된 2007년도 예산안부터 도입됨
 - 해당 기준은 연도별 재정지출계획을 수립할 때 사용되며 16대 분야의 총지출 합계는 정부가 발표하는 총지출 금액과 일치함(국회예산정책처, 2023)
 - 16개 분야 하위에는 69개 부문이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재정은 ‘문화 및 관광’ 분야 하위의 문화예술, 체육, 관광, 문화재, 문화 및 관광 일반의 5개 부문으로 구분됨
- 12대 분야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분야별 자원배분의 거시적인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체계로 UN의 정부기능별분류(COFOG)와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4) 문맥에 따라 ‘문화재정’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12대 기능의 ‘문화·체육·관광’,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예산과목구조 16대 기능의 ‘문화 및 관광’,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정부기능별분류(COFOG)의 ‘여가·문화·종교’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함

GFSM) 등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며 2006년 예산안부터 적용함

- 해당 기준은 중장기 시계열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용되며, 문화재정은 ‘문화·체육·관광’ 기능에 해당하고 세부부문은 16대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체육, 관광, 문화재, 문화 및 관광 일반으로 구성됨
- 12대 분야는 대체로 16개 분야와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일부 분야(R&D 분야, 국방 분야 등)에서는 별도의 집계 방식을 채택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12대 분야별 지출의 합계가 정부가 발표하는 총지출 금액과 일치하지는 않음(국회예산정책처, 2023)

〈표 2-1〉 재원배분 분류체계 비교

구분	12대 분야		16대 분야	
도입 배경	예산분류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체계 개편 (장관·항→분야·부문)	
도입 시점	2006년도 예산		2007년도 예산	
특징(장점)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만든 체계로서 국가간 비교 용이		실제 예산편성체계(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일치하여 산출직업 용이	
분야	연번	분야	연번	[코드번호] 분야
	1	보건·복지·고용	1	[080] 사회복지
			2	[090] 보건
	2	교육	3	[050] 교육
	3	문화·체육·관광	4	[060] 문화 및 관광
	4	R&D(별도통계) ¹⁾	5	[150] 과학기술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6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	SOC	7	[120] 교통 및 물류
			8	[140] 국토 및 지역개발
	7	농림·수산·식품	9	[100] 농림수산
	8	환경	10	[070] 환경
	9	국방(일반회계 총계) ²⁾	11	[040] 국방
	10	외교·통일	12	[030] 통일·외교
	11	공공질서·안전	13	[020] 공공질서 및 안전
12	일반·지방행정	14	[010] 일반·지방행정	
		15	[130] 통신	
		16	[160] 예비비	

주 1) 과학기술 분야 외에, 여타 분야 중 R&D 관련 사업예산을 중복 계상

2) 국방분야 중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관(병무청 제외) 일반회계 총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3 대한민국 재정, p. 83

제2절 OECD 국가의 문화재정 분석

1. 분석 목적

1) 문화재정 규모의 적정성 검토

- 2023년 기준 한국의 문화재정(16대 분야 기준)은 정부총지출 대비 1.35%로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으나, 객관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문화재정 규모가 과소한지 과대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 검토가 필요함
- 국가별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수준, 역사적 맥락에 따라 정부총지출 규모와 분야별 우선순위가 상이하므로 분야별 지출에 대한 적절한 규모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간 비교분석을 통해 재정의 상대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 국가재정에 대한 비교연구는 국가간 국제협력의 확산, 국가경제의 세계화, 개방경제체제의 확산 등 세계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대응과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온 바 있으며, 세계금융 위기와 코로나19 등의 위기를 겪으며 범세계적인 관점에서의 재정관리 필요성이 커지며 강조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한 OECD 국가와 한국의 문화재정을 비교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문화재정 정책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GDP 및 국가별 총지출 대비 문화재정 규모 등 분석

- GDP 대비 정부총지출, GDP 대비 여가문화종교 지출을 살펴봄으로써 국가별 경제발전수준 및 정부규모에 따른 여가·문화·종교 지출 수준을 파악함
- 정부총지출 대비 기능별 지출 및 여가문화종교 지출을 통해 국가별 정책 우선순위와 문화분야에 대한 OECD 국가의 공공지출 수준을 파악함
-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여가·문화·종교 지출 분담 비율을 검토함으로써 국가별 문화정책의 중앙집권화 혹은 지방분권화 수준을 파악함

2. 분석 대상

- OECD는 회원국이 경제성장과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전망, 교육, 고용, 환경, 보건, 관광 등 다양한 주제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명확한 통계 생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개별 국가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OECD 회원국은 통계 생산 가이드라인에 맞춰 통계를 제출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임(도세록, 2009)
 - 또한, OECD 통계는 동일한 기준으로 데이터를 산출하기 때문에 국제비교 분석에 용이하며, OECD Library 및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OECD 통계를 통해 접근가능한 회원국의 정부지출 데이터를 분석하며, 2023년 현재 OECD 회원국 38개 중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32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 32개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임

3. 분석 방법

1) 국민계정(SNA) 데이터 분석

- 국제비교를 위한 국가재정통계 기준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의 통합재무제표를 산출하는 GFS,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세부정보를 측정하는 PSDS, 국민계정인 SNA 등이 있음⁵⁾
- 여기서는 UN의 국민계정체계(SNA) 상의 정부기능별분류(COFOG)를 활용하여 문화재정(여가·문화·종교)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실시함
- 정부기능별분류(COFOG)는 경제, 국방, 교육, 보건, 문화 등 정부활동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 지출을 분류하는 체계로 OECD에서 국가간 재정지출 현황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임
 - UN은 정부기능별분류(COFOG)를 목적에 따른 개별 소비의 분류(COICOP), 가계지원 비영리기관 목적의 분류(COPNI), 목적에 따른 생산자 지출의 분류(COPP)와 함께 「목적에 따른 지출분류(2000)로 출판함(정성호, 2016)
- 정부기능별분류(COFOG)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나누어 집계하기 때문에 정부수준별 비교가 가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내부거래를 차감한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기준의 활용도 가능함
- 또한 정부지출의 기능을 10개 분야(division)와 하위의 69개 부문(group)으로 구분하여 분야별 비교도 용이함
 - 10개 분야는 ①일반공공행정, ②국방, ③공공질서 및 안전, ④경제활동, ⑤환경보호, ⑥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⑦보건, ⑧여가·문화·종교, ⑨교육, ⑩사회보호로 구분됨⁶⁾

5) GFSM 2001은 일반정부의 재정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재정통계 매뉴얼, PSDS는 공공부문 부채통계 작성자를 위한 지침, SNA2008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을 측정하기 위해 UN에서 발표한 국제통계 매뉴얼임(1953 제정 및 1963, 1993, 2008년 개정)

〈표 2-2〉 정부기능별분류(COFOG) 분류체계

기능별 분류체계	기능별 분류체계
701. 일반공공행정	70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7011. 행정 및 입법기관, 금융 및 재정, 국외 업무	7061. 주거시설 개발
7012. 해외 경제원조	7062. 지역사회시설 개발
7013. 일반 서비스	7063. 수도공급
7014. 기초연구	7064. 가로등
7015. 일반공공행정 R&D	7065.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R&D
7016. 기타 미분류 일반 공공행정	7066. 기타 미분류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7017. 공공채무거래	707. 보건
7018. 정부 간 일반 이전	7071. 의료제품, 기기, 장비
702. 국방	7072. 외래 환자서비스
7021. 군사방어	7073. 병원서비스
7022. 민방위	7074. 공공보건서비스
7023. 해외군사원조	7075. 보건 R&D
7024. 국방 R&D	7076. 기타 미분류 보건
7025. 기타 미분류 국방	708. 여가·문화·종교
703. 공공질서 및 안전	7081. 여가 및 스포츠서비스
7031. 경찰서비스	7082. 문화서비스
7032. 소방서비스	7083. 방송 및 출판서비스
7033. 법원	7084. 종교 및 기타 공동체서비스
7034. 교도소	7085. 여가·문화·종교 R&D
7035. 공공질서 및 안전 R&D	7086. 기타 미분류 여가·문화·종교
7036. 기타 미분류 공공질서 및 안전	709. 교육
704. 경제활동	7091. 유아 및 초등교육
7041. 일반경제, 상업, 노동	7092. 중등교육
7042.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7093. 2차 중등교육
7043. 연료 및 에너지	7094. 고등교육
7044. 광업, 제조, 건설	7095. 등급 외 교육
7045. 운송	7096. 교육 보조 서비스
7046. 통신	7097. 교육 R&D
7047. 기타 산업	7098. 기타 미분류 교육
7048. 경제 R&D	7010. 사회보호
7049. 기타 미분류 경제	70101. 질병 및 장애
705. 환경보호	70102. 노령
7051. 폐기물 관리	70103. 유족
7052. 폐수 관리	70104. 가족 및 자녀
7053. 공해 방지	70105. 실업
7054. 생물다양성 및 경관 보호	70106. 주거
7055. 환경보호 R&D	70107.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
7056. 기타 미분류 환경보호	70108. 사회보호 R&D
	70109.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

자료: IMF(2014), GFSM 2014

6) IMF의 GFSM 2014에서는 정부기능별분류(COFOG)를 〈표 2-2〉와 같이 분류하는데, 코드 번호의 첫 번째 자리 '7'은 다른 통계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자리는 분야, 세 번째 자리는 부문, 네 번째 자리는 등급을 표시한 것임

2) 여가·문화·종교(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지출 분석

- 정부기능별분류(COFOG)의 10개 기능 중 문화재정으로 간주할 수 있는 계정은 ‘여가·문화·종교(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이며, 이는 다시 6개의 세부부문으로 구성됨
 - 세부부문은 여가·스포츠 서비스(Recreational and sporting services), 문화서비스(Cultural services), 방송·출판 서비스(Broadcasting and publishing services), 종교·기타 공동체 서비스(Religious and other community services), 여가·문화·종교 R&D(R&D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기타 여가·문화·종교(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N.E.C.)임

〈표 2-3〉 정부기능별분류(COFOG) 여가·문화·종교 세부부문

708. 여가·문화·종교 세부부문	내용
7081. 여가·스포츠 서비스	스포츠활동 및 행사를 위한 시설 운영 및 지원 팀 또는 개인 선수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용자·보조 국가 및 지역 대표선수단의 스포츠 대회 참여
7082. 문화서비스	문화시설의 운영 및 지원, 문화행사 개최의 운영 및 지원 예술가 지원을 위한 출연·용자·보조 및 문화활동 진흥기관에 대한 출연·용자·보조 국가 및 지역의 축제 지원
7083. 방송·출판 서비스	방송 및 출판서비스의 지원 방송, 뉴스, 출판물 유통 지원을 위한 출연·용자·보조
7084. 종교·기타 공동체 서비스	종교 및 공동체 관련 활동의 관리
7085. 여가·문화·종교 R&D	여가·문화·종교 관련 연구의 관리 및 운영 연구 지원을 위한 출연·용자·보조
7086. 기타 여가·문화·종교	기타 미분류 여가·문화·종교 관련 활동

자료: IMF(2014). GFSM 2014

- 유네스코는 제21차 총회에서 채택한 「문화활동의 공공 재정에 관한 통계의 국제 표준화에 관한 권고⁷⁾」(1980)에서 문화분야 공공재정 산출의 국제표준화를 강조하였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공재정 분류체계에서 문화분야 공공재정에 해당하는 계정과 코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UNESCO, 2009)
 - 정부기능별분류(COFOG)에서는 여가·스포츠 서비스(08.1.0), 문화서비스(08.2.0), 방송·출판 서비스(08.3.0), 여가·문화·종교 R&D(08.5.0), 기타 여가·문화·종교(08.6.0)가 해당됨
 - 목적에 따른 개별 소비의 분류(COICOP)에서는 비영리 기관의 개인소비지출(NPISH) 중 여가·문화(13.3), 일반정부의 개인소비지출 중 여가·문화(43.3)가 해당됨
 - 가계지원 비영리기관 목적의 분류(COPNI)에서는 여가·문화(03) 계정의 여가·스포츠 서비스(03.1), 문화서비스(03.2)가 해당됨
- 이러한 국제적 권고에 따라 정부의 문화재정 규모를 정부기능별분류(COFOG)의 여가·문화·종교 계정으로 파악하였음

7) 원문은 다음과 같음.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Statistics in the Public Financing of Cultural Activities

제3절 OECD 국가의 문화재정 변화

1. GDP 대비 정부총지출

1)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 OECD 국가의 문화재정 규모를 살펴보기에 앞서 국가별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정부규모를 살펴보고자 함
 - 정부규모를 파악할 때는 통상적으로 경제발전 수준 대비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⁸⁾의 정부지출 비율, 즉 GDP 대비 정부총지출 비율을 통해 파악하므로(Berry & Lowery, 1984; 윤광재, 2008), 여기서도 해당 기준에 따르고자 함
- 2021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규모는 43.81%이며 정부총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59.05%),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일랜드(24.38%)임
-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총지출 규모가 47.35%까지 확대되었으나 2021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
 - 특히 2020년 프랑스의 정부지출이 61.50%로 크게 확대되어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통상 GDP 대비 정부총지출이 50% 이상이면 큰 정부로 간주하는데⁹⁾, 이에 따르면 프랑스(59.05%), 그리스(57.45%), 오스트리아(55.96%), 핀란드(55.77%), 벨기에(55.47%), 이탈리아(55.16%), 독일(51.25%), 스페인(50.62%) 등이 큰 정부에 해당함
- 중간정부 수준인 40~50% 국가로는 덴마크(49.88%), 아이슬란드(49.33%), 슬로베니아(각 49.29%), 스웨덴(49.20%), 영국(48.41%) 등 19개 국가로 대부분을 차지함
- 반면 작은 정부에 해당하는 40% 미만의 국가로는 한국(38.13%), 리투아니아(37.52%), 스위스(36.47%), 콜롬비아(33.94%), 아일랜드(24.38%)가 있으며, 한국은 전체 32개국 중 28위로 정부규모가 작은 편임¹⁰⁾

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내부거래를 차감한 순계 기준임

9) Tanzi·Schuknecht(2000)는 GDP 대비 정부총지출의 비율이 50% 이상이면 큰 정부, 40~50%는 중간정부(median-sized), 40% 이하는 작은 정부로 구분함

10) 한국은 2020년 데이터이며, OECD 분석 대상국가 32개 중 칠레는 제외하고 분석함

〈표 2-4〉 OECD 국가의 정부규모(일반정부 기준)

(단위: %, GDP 대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규모	순위	
프랑스	56.50	55.64	55.35	61.50	59.05	1	1.11
그리스	48.54	48.53	47.82	59.69	57.45	2	4.30
오스트리아	49.30	48.76	48.63	56.74	55.96	3	3.22
핀란드	53.63	53.38	53.34	57.19	55.77	4	0.98
벨기에	52.03	52.27	51.85	58.90	55.47	5	1.61
이탈리아	48.76	48.39	48.47	56.80	55.16	6	3.13
독일	44.18	44.32	44.99	50.41	51.25	7	3.79
스페인	41.31	41.81	42.28	51.95	50.62	8	5.21
덴마크	50.55	50.55	49.67	53.61	49.88	9	-0.33
아이슬란드	44.41	43.85	43.61	51.18	49.33	10	2.66
슬로베니아	44.07	43.47	43.18	51.16	49.29	10	2.84
스웨덴	49.23	49.85	49.14	52.07	49.20	12	-0.02
영국	41.08	40.81	40.80	52.40	48.41	13	4.19
헝가리	46.72	46.15	46.04	51.07	48.30	14	0.84
노르웨이	50.06	48.51	51.07	57.62	48.29	14	-0.89
포르투갈	45.37	43.24	42.45	49.24	47.75	16	1.29
체코	38.98	40.59	41.05	47.22	46.51	17	4.52
네덜란드	42.46	42.28	42.12	47.83	45.84	18	1.93
슬로바키아	39.49	39.67	40.53	44.75	45.51	19	3.61
미국	38.06	37.96	38.45	47.31	44.93	20	4.24
일본	38.34	38.30	38.94	47.15	44.46	21	3.77
라트비아	38.67	39.38	38.15	42.15	44.11	22	3.34
폴란드	41.42	41.45	41.88	48.25	44.09	22	1.57
OECD	41.11	41.10	41.38	47.35	43.81	-	1.60
룩셈부르크	41.28	42.30	43.13	46.73	42.89	24	0.96
호주	38.89	38.88	44.05	46.15	41.48	25	1.63
에스토니아	39.24	39.27	39.39	44.87	41.47	25	1.39
이스라엘	38.98	39.76	39.15	45.40	40.85	27	1.18
한국	30.27	31.15	33.87	38.13	38.13	28	5.94
리투아니아	33.23	34.01	34.73	42.63	37.52	29	3.08
스위스	33.71	32.99	33.26	38.45	36.47	30	1.99
콜롬비아	31.80	33.47	33.72	36.80	33.94	31	1.65
아일랜드	26.09	25.28	24.28	27.17	24.38	32	-1.68

주) 한국은 2021년도 정부지출 데이터가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함
 자료: OECD 통계(2023년 7월 추출)

2) 일반정부의 GDP 대비 기능별 지출

- 다음으로는 OECD 국가의 GDP 대비 정부기능별분류(COFOG)에 따른 기능별 지출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큰 정부일수록 기능별 지출이 크고 작은 정부일수록 기능별 지출이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규모(큰 정부-중간정부-작은 정부)에 따른 정부지출의 절대적 규모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GDP 대비 기능별 지출현황은 개별 국가의 현황보다는 OECD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21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기능별 지출은 사회보호(16.57%)가 가장 높고, 보건(7.47%), 경제활동(6.00%) 일반공공행정(5.35%), 교육(5.17%), 공공질서 및 안전(1.68%), 국방(1.51%), 여가·문화·종교(1.25%), 환경보호(0.74%),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0.54%)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시기(2019~2020년)를 겪으며 정부지출이 크게 확대된 분야는 사회보호(2.17%p ↑), 경제(2.15%p ↑), 보건(0.90%p ↑)이며, 여가·문화·종교는 0.06%p로 소폭 증가함
- 같은 기간 한국은 사회보호(8.70%), 교육(4.87%), 경제활동(5.43%), 보건(5.24%), 일반공공행정(4.43%), 국방(2.62%), 공공질서 및 안전(1.28%), 주거 및 지역사회(1.13%), 환경보호(1.04%), 여가·문화·종교(0.99%) 순으로 나타남
 - 2019년~2020년 코로나19 시기동안 한국은 사회보호(1.66%p ↑), 경제(0.90%p ↑), 일반공공행정(0.55%p ↑) 분야의 정부지출이 크게 늘었고, 여가·문화·종교는 0.03%p 증가함

〈표 2-5〉 OECD 평균 GDP 대비 기능별 정부지출 추이(일반정부 기준)

(단위: %, GDP 대비)

구분	OECD 평균 ¹⁾					한국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²⁾
일반공공행정	5.54	5.46	5.31	5.54	5.35 (4)	3.99	4.03	4.18	4.73 (0.55p ↑)	4.43 (5)
국방	1.42	1.43	1.44	1.60	1.51 (7)	2.24	2.43	2.56	2.80	2.62 (6)
공공질서 및 안전	1.65	1.65	1.66	1.78	1.68 (6)	1.20	1.18	1.28	1.36	1.28 (7)
경제활동	4.44	4.46	4.55	6.70 (0.09p ↑)	6.00 (3)	4.47	4.38	4.89	5.79 (0.90p ↑)	5.43 (2)
환경보호	0.69	0.70	0.72	0.78	0.74 (9)	0.89	0.80	0.89	1.11	1.04 (9)
주거 및 지역사회	0.50	0.54	0.54	0.58	0.54 (10)	0.99	0.98	1.11	1.20	1.13 (8)
보건	6.31	6.38	6.50	7.41 (2.15p ↑)	7.47 (2)	4.32	4.69	5.19	5.60	5.24 (3)
여가·문화·종교	1.25	1.27	1.27	1.33 (0.06p ↑)	1.25 (8)	0.86	0.95	1.03	1.06 (0.03p ↑)	0.99 (10)
교육	5.06	5.10	5.13	5.40	5.17 (5)	4.58	4.78	5.13	5.20	4.87 (4)
사회보호	15.52	15.39	15.54	17.71 (2.17p ↑)	16.57 (1)	6.74	6.91	7.62	9.29 (1.66p ↑)	8.70 (1)

주 1) 32개 국가의 GDP 대비 분야별 정부지출 비율의 평균값임

2) 한국은 2021년도 정부지출 데이터가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함(GDP는 2021년도 적용)

3) 볼드 처리된 데이터는 2019년~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2020년도 데이터 내 괄호()는 증가폭을 나타낸 것임

4) 2021년도 데이터 내 괄호()는 분야별 정부지출 순위임

자료: OECD 통계(2023년 7월 추출)

- 일반정부의 GDP 대비 여가·문화·종교 지출은 아이슬란드(3.27%, 1위), 헝가리(2.99%, 2위), 에스토니아(2.05%, 3위)가 가장 높고, 미국이 0.27%, 아일랜드와 일본이 각각 0.45%, 콜롬비아 0.61% 수준으로 낮은 편에 속함
- 한국의 여가·문화·종교 지출은 0.99%로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3.61%의 증가율을 보였음에도 여전히 OECD 평균인 1.25%에 근접하지 못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다만 한국의 2021년도 정부지출 데이터는 갱신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2020년도 정부지출 데이터에 2021년도 GDP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이며 향후 변경될 여지가 있음
- 지난 5년 동안 OECD 평균 여가·문화·종교 지출 증가율이 0.06%인데 반해 한국의 증가율은 3.61%라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앞으로도 OECD 평균에 맞게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음

〈표 2-6〉 OECD 국가의 GDP 대비 여가·문화·종교 정부지출 추이(일반정부 기준)

(단위: %, GDP 대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규모	순위	
아이슬란드	2.99	3.15	3.12	3.48	3.27	1	2.27
헝가리	3.34	3.13	3.00	3.93	2.99	2	-2.71
에스토니아	2.14	1.96	2.03	2.02	2.05	3	-1.11
노르웨이	1.75	1.69	1.82	1.96	1.69	4	-0.79
덴마크	1.69	1.62	1.61	1.69	1.59	5	-1.55
핀란드	1.46	1.52	1.49	1.50	1.49	6	0.52
라트비아	1.69	1.64	1.46	1.38	1.44	7	-3.80
슬로베니아	1.38	1.41	1.39	1.45	1.43	8	0.89
프랑스	1.41	1.40	1.43	1.42	1.41	9	-0.07
스웨덴	1.25	1.26	1.29	1.41	1.37	10	2.46
체코	1.31	1.47	1.43	1.44	1.35	11	0.72
이스라엘	1.61	1.60	1.54	1.33	1.26	12	-6.06
OECD	1.25	1.27	1.27	1.33	1.25	-	0.06
네덜란드	1.25	1.28	1.22	1.30	1.24	13	-0.18
오스트리아	1.19	1.16	1.16	1.19	1.20	14	0.27
벨기에	1.25	1.30	1.25	1.26	1.20	14	-1.00
리투아니아	1.07	1.10	1.17	1.41	1.19	16	2.70
스페인	1.10	1.12	1.16	1.20	1.18	17	1.78
폴란드	1.21	1.33	1.37	1.28	1.17	18	-0.83
룩셈부르크	1.20	1.27	1.27	1.21	1.17	18	-0.64
독일	1.03	1.03	1.04	1.14	1.11	20	1.94
그리스	0.90	0.96	0.94	1.10	1.10	21	5.12
스위스	1.03	1.00	1.01	1.08	1.09	22	1.53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규모	순위	
슬로바키아	0.82	1.06	1.15	1.03	1.02	23	5.85
한국	0.86	0.95	1.03	1.06	0.99	24	3.61
포르투갈	0.84	0.86	0.87	0.94	0.97	25	3.66
호주	0.98	0.94	0.98	0.97	0.92	26	-1.56
이탈리아	0.75	0.78	0.78	0.81	0.83	27	2.39
영국	0.64	0.61	0.60	0.63	0.62	28	-0.95
콜롬비아	0.71	0.73	0.80	0.59	0.61	29	-3.64
아일랜드	0.54	0.56	0.53	0.51	0.45	30	-4.61
일본	0.37	0.38	0.42	0.41	0.45	31	4.69
미국	0.28	0.27	0.28	0.28	0.27	32	-0.63

주) 한국은 2021년도 정부지출 데이터가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함(GDP는 2021년도 적용)

자료: OECD 통계(2023년 7월 추출)

3) 중앙정부의 GDP 대비 총지출

- OECD 국가의 중앙정부 규모(GDP 대비 중앙정부 총지출)는 앞서 살펴본 일반정부 규모와 차이를 보이는 데, 아래의 <표 2-7>과 같이 2021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중앙정부 총지출은 28.32%임 - <표 2-4>의 일반정부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1.60%)에 비해 중앙정부 규모의 증가율(2.67%)이 더 높음
- 중앙정부의 GDP 대비 총지출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영국이 45.50%로 가장 높고 스위스가 12.6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7> OECD 국가의 정부규모(중앙정부 기준)

(단위: %, GDP 대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규모	순위	
영국	37.54	37.36	37.17	49.06	45.50	1	4.92
그리스	36.86	37.00	34.91	45.49	43.76	2	4.38
노르웨이	40.62	39.06	40.80	47.37	39.26	3	-0.85
헝가리	33.99	33.43	33.04	38.72	38.56	4	3.21
오스트리아	32.32	31.60	31.15	37.65	37.41	5	3.72
덴마크	37.23	37.12	36.21	40.00	37.41	5	0.12
아이슬란드	31.85	32.06	31.91	38.08	36.42	7	3.41
에스토니아	33.53	34.11	33.85	38.27	36.40	7	2.07
이탈리아	30.46	29.79	29.33	37.28	35.94	9	4.23
이스라엘	33.62	34.46	33.72	38.80	35.77	10	1.56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규모	순위	
포르투갈	34.17	31.69	31.03	36.41	34.59	11	0.30
체코	28.37	29.10	29.69	35.02	34.41	12	4.94
미국	22.54	22.62	23.08	32.72	31.76	13	8.94
슬로베니아	26.43	25.61	25.53	32.73	31.26	14	4.29
슬로바키아	25.34	25.58	26.14	30.72	31.17	15	5.32
스웨덴	29.35	29.53	29.12	32.78	31.08	16	1.45
룩셈부르크	29.57	30.39	31.09	34.10	30.83	17	1.05
네덜란드	25.36	25.48	25.89	31.15	30.73	18	4.92
벨기에	26.72	26.57	26.49	30.91	29.10	19	2.16
리투아니아	21.85	30.26	25.80	32.86	28.97	20	7.30
라트비아	22.51	23.37	23.07	26.45	28.89	21	6.43
호주	27.07	27.10	31.20	33.53	28.62	22	1.40
OECD	25.49	25.54	25.49	30.53	28.32	-	2.67
핀란드	26.31	25.94	25.71	29.35	27.79	23	1.37
폴란드	25.16	22.52	23.03	30.10	26.03	24	0.85
스페인	18.90	19.16	18.91	25.12	25.49	25	7.77
프랑스	23.41	22.64	22.41	25.49	24.52	26	1.16
일본	16.75	16.64	17.02	24.28	22.35	27	7.47
한국	17.90	18.50	20.51	22.31	22.31	28	5.66
아일랜드	22.02	21.40	20.39	22.71	20.80	29	-1.41
독일	12.70	12.51	12.54	14.96	17.13	30	7.78
스위스	10.65	10.30	10.37	13.20	12.66	31	4.43

주 1) 한국은 2021년도 정부지출 데이터가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함(GDP는 2021년도 적용)

2) 콜롬비아는 중앙정부의 지출데이터가 부재하므로 포함하지 않음

3) OECD 국가 평균은 콜롬비아를 제외한 31개 국가를 포함함

자료: OECD 통계(2023년 7월 추출)

4) 중앙정부의 GDP 대비 기능별 지출

- 2021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중앙정부 기능별 지출은 일반공공행정(7.95%)이 가장 높았고, 사회보호(7.70%), 경제활동(4.52%), 보건(3.82%), 교육(2.98%), 국방(1.87%), 공공질서 및 안전(1.27%), 여가·문화·종교(0.60%), 환경보호(0.27%), 주거 및 지역사회(0.20%) 순으로 나타나, 일반정부 대비 중앙정부 지출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코로나19 시기(2019년~2020년)에는 경제활동(2.05%p)과 사회보호(1.31%p), 일반공공행정(0.80%) 분야에 대한 지출이 타 분야에 비해 크게 확대됨
- 한국의 GDP 대비 중앙정부 지출 역시 일반공공행정(4.72%)이 가장 높았고, 교육(3.78%), 경제활동(3.46%), 사회보호(3.31%), 국방(2.50%), 공공질서 및 안전(1.10%), 보건(0.82%), 여가·문화·종교(0.43%),

환경보호(0.47%), 주거 및 지역사회(0.30%) 순임

- OECD 국가 평균 및 한국 모두 일반공공행정에 대한 중앙정부 지출이 일반정부 기준보다 높았고 전체 10개의 정부 기능 중 여가·문화·종교 지출은 각각 8번째, 9번째 순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2-8〉 OECD 평균 GDP 대비 기능별 정부지출 추이(중앙정부 기준)

(단위: %, GDP 대비)

구분	OECD 평균 ¹⁾					한국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²⁾
일반공공행정	7.41	7.61	7.46	8.26 (0.80%p ↑)	7.95 (1)	4.20	4.14	4.63	5.04 (0.41%p ↑)	4.72 (1)
국방	1.43	1.44	1.45	1.60	1.87 (6)	2.26	2.44	2.57	2.67	2.50 (5)
공공질서 및 안전	1.25	1.25	1.25	1.35	1.27 (7)	1.06	1.04	1.13	1.18	1.10 (6)
경제활동	3.10	3.05	3.13	5.18 (2.05%p ↑)	4.52 (3)	2.80	2.99	3.24	3.69 (0.45%p ↑)	3.46 (3)
환경보호	0.24	0.24	0.25	0.28	0.27 (9)	0.38	0.38	0.48	0.50	0.47 (8)
주거 및 지역사회	0.19	0.20	0.21	0.24	0.20 (10)	0.22	0.25	0.30	0.32	0.30 (10)
보건	2.98	3.06	2.98	3.62	3.82 (4)	0.54	0.57	0.67	0.88	0.82 (7)
여가·문화·종교	0.59	0.58	0.57	0.65	0.60 (8)	0.40	0.40	0.45	0.46	0.43 (9)
교육	2.87	2.90	2.91	3.09	2.98 (5)	3.62	3.81	4.20	4.03	3.78 (2)
사회보호	7.08	6.87	6.93	8.24 (1.31%p ↑)	7.70 (2)	2.44	2.48	2.84	3.54 (0.69%p ↑)	3.31 (4)

주 1) 31개 국가의 GDP 대비 분야별 재정지출 비율의 평균값임(콜롬비아 제외)

2) 한국은 2021년도 정부지출 데이터가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함(GDP는 2021년도 적용)

3) 볼드 처리된 데이터는 2019년-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2020년도 데이터 내 괄호()는 증가폭을 나타낸 것임

4) 2021년도 데이터 내 괄호()는 분야별 정부지출 순위임

자료: OECD 통계(2023년 7월 추출)

- 중앙정부의 GDP 대비 여가·문화·종교 지출은 OECD 국가 평균 0.60% 수준이며 지난 5년간 0.59%의 성장률을 보였음
- 국가별로 살펴보면 헝가리(2.57%, 1순위), 에스토니아(1.20%, 2순위), 아이슬란드(1.02%, 3순위)가 높았고 미국(0.03%, 31순위), 일본(0.05%, 30순위), 벨기에(0.07%, 29순위) 순으로 낮아 일반정부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여가·문화·종교에 대한 지출이 높은 헝가리,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는 일반정부 및 중앙정부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모두 1~3순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역시 일반정부 및 중앙정부 기준 모두에서 하위 1~2순위라는 점에서 동일함

- 다만 벨기에의 경우 일반정부의 GDP 대비 여가·문화·종교 지출에서는 전체 32개국 중 14순위였으나 중앙정부 기준에서는 31개국 중 29순위로 변동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의 GDP 대비 여가·문화·종교 지출은 0.43%로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2.18%의 증가율을 보였음에도 OECD 평균인 0.60%에 근접하지 못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지난 5년 동안 OECD 평균 여가·문화·종교 지출 증가율이 0.59% 오르는 동안 한국은 2.18%로 큰 성장률을 보였으나, 중앙정부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한국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9〉 OECD 국가의 GDP 대비 여가·문화·종교 정부지출 추이(중앙정부 기준)

(단위: %, GDP 대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규모	순위	
헝가리	2.86	2.60	2.39	3.47	2.57	1	-2.71
에스토니아	1.33	1.14	1.15	1.16	1.20	2	-2.52
아이슬란드	0.99	1.05	1.06	1.17	1.02	3	0.96
노르웨이	0.91	0.87	0.91	1.05	0.96	4	1.25
덴마크	0.93	0.91	0.91	0.98	0.92	5	-0.27
슬로바키아	0.53	0.62	0.69	0.75	0.87	6	12.83
슬로베니아	0.80	0.78	0.79	0.85	0.85	7	1.56
라트비아	0.77	0.75	0.64	0.77	0.82	8	1.80
이스라엘	1.07	1.02	1.01	0.83	0.78	9	-7.59
핀란드	0.67	0.67	0.63	0.72	0.76	10	2.92
이탈리아	0.53	0.56	0.57	0.59	0.62	11	4.09
오스트리아	0.57	0.55	0.54	0.59	0.60	12	1.61
OECD	0.59	0.58	0.57	0.65	0.60	-	0.59
스웨덴	0.51	0.53	0.52	0.60	0.60	13	3.96
체코	0.56	0.60	0.61	0.61	0.59	14	1.36
리투아니아	0.59	0.55	0.58	0.72	0.58	15	-0.29
룩셈부르크	0.54	0.60	0.62	0.65	0.53	16	-0.13
그리스	0.45	0.47	0.45	0.52	0.51	17	3.21
프랑스	0.41	0.41	0.40	0.41	0.44	18	1.93
영국	0.44	0.40	0.38	0.41	0.44	18	0.33
한국	0.40	0.40	0.45	0.46	0.43	20	2.18
네덜란드	0.38	0.39	0.37	0.44	0.43	20	3.22
폴란드	0.35	0.33	0.43	0.47	0.40	22	3.38
포르투갈	0.36	0.36	0.36	0.40	0.40	22	2.50
스위스	0.28	0.27	0.26	0.31	0.34	24	5.31
아일랜드	0.39	0.40	0.38	0.36	0.31	25	-5.52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규모	순위	
스페인	0.18	0.19	0.19	0.22	0.21	26	3.49
호주	0.20	0.20	0.20	0.21	0.19	27	-1.69
독일	0.10	0.10	0.10	0.14	0.13	28	6.67
벨기에	0.06	0.07	0.07	0.07	0.07	29	1.79
일본	0.04	0.04	0.04	0.06	0.05	30	8.91
미국	0.03	0.03	0.03	0.03	0.03	31	0.29

주 1) 한국은 2021년도 정부지출 데이터가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함(GDP는 2021년도 적용)

2) 콜롬비아는 중앙정부의 지출데이터가 부재하므로 포함하지 않음

3) OECD 국가 평균은 콜롬비아를 제외한 31개 국가를 포함함

자료: OECD 통계(2023년 7월 추출)

2. 정부총지출 대비 여가·문화·종교

1) 정부총지출 대비 일반정부 기능별 지출

- GDP 대비 정부총지출은 국가별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정부지출 규모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별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큰 정부일수록 기능별 정부지출이 높고 작은 정부일수록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큰 정부인 핀란드(1.49%), 프랑스(1.41%), 오스트리아 및 벨기에(1.20%), 스페인(1.18%)의 GDP 대비 여가·문화·종교 지출 비율이 높고 작은 정부인 콜롬비아(0.61%), 아일랜드(0.45%)가 낮은 것은 타당한 결과임
 - 물론 큰 정부임에도 GDP 대비 여가·문화·종교 지출 비율이 작은 이탈리아(0.83%), 작은 정부임에도 비율이 높은 리투아니아(1.19%) 같은 경우도 존재함
- 정부총지출의 기능별 지출 비중은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국가별 집중하고자 하는 정부정책 활동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정부총지출 대비 분야 간 상대적 규모를 파악하고자 함
- 먼저 OECD 국가 평균과 한국의 정부총지출 대비 기능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2021년 OECD 국가 평균 가장 많은 지출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사회보호(35.41%, 1순위)였으며, 보건(16.21%, 2순위), 경제활동(12.95%, 3순위) 순으로 나타났고 여가·문화·종교는 총지출 대비 2.71%로 8번째 순위에 위치함
 - 코로나19 시기인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OECD 국가의 지출이 확대된 분야는 경제활동으로 2019년 10.67%에서 2020년 13.74%로 3.07%p 증가하였고, 나머지 9개 분야의 지출 비중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의 정부총지출 대비 기능별 지출에서 역시 사회보호(24.35%, 1순위)가 가장 높았고, 경제활동(15.19%, 2순위), 보건(14.68%, 3순위), 교육(13.63%, 4순위), 일반공공행정(12.40%, 5순위)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OECD 평균 대비 경제활동에 대한 지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한국은 코로나19 시기 동안 사회보호(1.85%p ↑), 경제활동(0.76%p ↑), 환경보호(0.29%p ↑), 일반

- 공공행정(0.06%p ↑)에 대한 지출이 소폭 증가하였고, 나머지 6개 분야에 대한 지출 비중은 감소함
- OECD 국가 평균 대비 한국의 지출이 큰 기능은 국방, 경제활동, 주거 및 지역사회, 교육 등이며 사회보호에 대한 지출은 OECD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한국의 기능별 지출은 국방 7.33%(6순위), 경제활동 15.19%(2순위), 주거 및 지역사회 3.15%(8순위), 교육 13.63%(4순위)로 OECD의 국방 3.36%(7순위), 경제활동 12.95%(3순위), 주거 및 지역사회 1.21%(10순위), 교육 11.38%(5순위)과 큰 차이를 보임
 - 반면 사회보호에 대한 지출은 OECD 평균 35.41%인데 반해 한국은 24.35%로 매우 작은 규모임
 - 한국의 여가·문화·종교 지출 규모는 총지출 대비 2.78%로 OECD 국가 평균(2.71%) 대비 크지만, 기능별 지출 순위를 살펴보면 OECD 국가는 8번째, 한국은 10번째로 지출 우선순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19년과 2020년 사이 여가·문화·종교에 대한 지출 비중은 모두 감소하였는데 OECD 국가 평균은 -0.09%이고 한국은 -0.12%로 한국의 감소폭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2-10〉 OECD 평균 정부총지출 대비 기능별 정부지출 추이(일반정부 기준)

(단위: %, 총지출 대비)

구분	OECD 평균 ¹⁾					한국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²⁾
일반공공행정	13.02	12.82	12.39	11.28	11.47 (4)	13.18	12.95	12.34	12.40 (0.06p ↑)	12.40 (5)
국방	3.46	3.50	3.47	3.35	3.36 (7)	7.39	7.82	7.55	7.33	7.33 (6)
공공질서 및 안전	4.00	3.99	3.98	3.71	3.69 (6)	3.95	3.79	3.78	3.57	3.57 (7)
경제활동	10.55	10.59	10.67	13.74 (3.07p ↑)	12.95 (3)	14.78	14.07	14.43	15.19 (0.76p ↑)	15.19 (2)
환경보호	1.66	1.68	1.70	1.61	1.61 (9)	2.94	2.56	2.63	2.92 (0.29p ↑)	2.92 (9)
주거 및 지역사회	1.23	1.31	1.31	1.24	1.21 (10)	3.27	3.16	3.27	3.15	3.15 (8)
보건	14.95	15.13	15.31	15.21	16.21 (2)	14.26	15.06	15.32	14.68	14.68 (3)
여가·문화·종교	2.94	2.98	2.97	2.71	2.71 (8)	2.85	3.07	3.04	2.78	2.78 (10)
교육	12.13	12.22	12.21	11.23	11.38 (5)	15.13	15.35	15.14	13.63	13.63 (4)
사회보호	36.06	35.79	35.99	35.92	35.41 (1)	22.26	22.18	22.51	24.35 (1.85p ↑)	24.35 (1)

주 1) 32개 국가의 정부총지출 대비 분야별 정부지출 비율의 평균값임

2) 한국은 2021년도 정부지출 데이터가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함

3) 볼드 처리된 데이터는 2019년-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2020년도 데이터 내 괄호()는 증가폭을 나타낸 것임

4) 2021년도 데이터 내 괄호()는 분야별 정부지출 순위임

자료: OECD 통계(2023년 7월 추출)

2) 일반정부의 총지출 대비 여가·문화·종교 지출

- OECD 국가 평균 일반정부의 정부총지출 대비 여가·문화·종교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3.02%에서 2021년 2.71%로 감소하였고, 한국 역시 2017년 2.85%에서 2.78%로 감소함
 - 지난 5년 간 OECD 국가 평균 여가·문화·종교 지출 비중의 감소율이 -2.68%인데 반해 한국은 -0.59%로 감소율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32개 국가 중 일반정부의 총지출 대비 여가·문화·종교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 6.63%(1순위)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 0.60%(32순위)로 약 10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전체의 13순위에 위치하고 있음
 - OECD 국가의 2014년 기준 데이터로 분석한 정보(2016)의 연구에서도 아이슬란드가 6.74%로 가장 높고 미국은 0.6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율의 차이가 있긴 하나 순위 간 변화가 크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 다만 우리나라의 여가·문화·종교 분야 지출 수준은 2014년 기준 전체 30개 나라 중 19위로 하위권에 속하였으나, 2021년 32개 나라 중 13위로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표 2-11〉 OECD 국가의 정부총지출 대비 여가·문화·종교 지출 추이(일반정부 기준)

(단위: %, 총지출 대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규모	순위	
아이슬란드	6.73	7.19	7.15	6.79	6.63	1	-0.38
헝가리	7.15	6.77	6.52	7.69	6.20	2	-3.52
에스토니아	5.47	5.00	5.16	4.50	4.95	3	-2.47
노르웨이	3.49	3.49	3.57	3.41	3.50	4	0.10
라트비아	4.36	4.17	3.82	3.28	3.27	5	-6.91
리투아니아	3.23	3.23	3.36	3.30	3.18	6	-0.37
덴마크	3.34	3.21	3.24	3.16	3.18	7	-1.22
이스라엘	4.14	4.03	3.94	2.93	3.07	8	-7.15
스위스	3.05	3.04	3.03	2.81	3.00	9	-0.45
슬로베니아	3.14	3.25	3.21	2.84	2.91	10	-1.89
체코	6.03	3.63	3.47	3.05	2.89	11	-16.77
스웨덴	2.53	2.53	2.62	2.70	2.79	12	2.48
한국	2.85	3.07	3.04	2.78	2.78	13	-0.59
룩셈부르크	2.90	2.99	2.95	2.59	2.72	14	-1.58
네덜란드	2.95	3.02	2.90	2.72	2.71	15	-2.08
OECD	3.02	2.98	2.97	2.71	2.71	-	-2.68
핀란드	2.73	2.84	2.79	2.63	2.68	16	-0.46
폴란드	2.92	3.21	3.27	2.66	2.65	17	-2.37
프랑스	2.50	2.52	2.58	2.31	2.39	18	-1.16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규모	순위	
스페인	2.67	2.69	2.74	2.30	2.33	19	-3.26
슬로바키아	2.07	2.66	2.83	2.29	2.25	20	2.16
호주	2.53	2.43	2.22	2.11	2.22	21	-3.14
독일	2.32	2.33	2.32	2.26	2.16	22	-1.78
벨기에	2.39	2.49	2.42	2.13	2.16	23	-2.57
오스트리아	2.41	2.38	2.39	2.10	2.15	24	-2.85
포르투갈	1.85	2.00	2.04	1.91	2.03	25	2.34
그리스	1.86	1.99	1.96	1.84	1.92	26	0.79
아일랜드	2.08	2.20	2.18	1.89	1.85	27	-2.97
콜롬비아	2.23	2.18	2.38	1.61	1.80	28	-5.20
이탈리아	1.54	1.61	1.62	1.42	1.50	29	-0.72
영국	1.57	1.49	1.46	1.21	1.28	30	-4.93
일본	0.98	1.00	1.08	0.87	1.01	31	0.88
미국	0.72	0.72	0.72	0.59	0.60	32	-4.67

주) 한국은 2021년도 정부지출 데이터가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함
 자료: OECD 통계(2023년 7월 추출)

- <표 2-11>에서 살펴본 국가별 여가·문화·종교 지출 비중은 절대적 규모에 대한 비교로서 각 국가별 우선순위가 반영된 결과는 아니므로 <표 2-12>와 같이 전체 10개의 정부활동 기능 중 여가문화종교에 대한 지출 순위를 살펴보고자 함
- 이에 따르면 여가·문화·종교에 대한 지출 순위가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로 모두 10개의 정부 기능 중 6위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한국, 영국, 일본으로 전체 정부 기능 중 10위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여가·문화·종교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일 필요가 있음

<표 2-12> OECD 국가의 10대 기능별 지출 중 여가문화종교 지출 순위(일반정부/2021년 기준)

순위 구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국가 구분	아이슬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슬로베니아 체코 룩셈부르크 스페인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스라엘 폴란드 프랑스 슬로바키아 호주 독일 벨기에 아일랜드 콜롬비아	네덜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미국	한국 영국 일본

주 1) 국가별 여가문화종교 규모는 <표 2-11> 참고

2) 국가별 정부총지출 대비 10대 기능별 지출의 순위 중 여가문화종교 지출 순위를 의미

3) 중앙정부의 총지출 대비 기능별 지출

- 다음으로는 중앙정부의 총지출 대비 기능별 지출 비중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중앙정부의 지출 비중이 큰 기능은 일반공공행정(23.20%, 1순위), 사회보호(22.07%, 2순위), 국방(16.82%, 3순위)으로 나타남
 - 특히 코로나19 시기 동안 OECD 국가 평균 중앙정부의 지출이 크게 증가한 분야는 경제활동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4.24%p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회보호와 보건 분야 각각 0.11%p 증가함
- 한국 역시 중앙정부의 총지출 대비 기능별 지출 비중은 일반공공행정(22.60%, 1순위), 교육(18.07%, 2순위), 경제활동(16.54%, 3순위)로 나타났고,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가 높은 편임
 - 한국의 경제활동에 대한 일반정부(15.19%)와 중앙정부(16.54%)의 지출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일반정부(12.95%), 중앙정부(12.60%)에 비해 큰 것으로 확인됨
 - 코로나19 기간동안 OECD 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출은 11.88%(2019년)에서 16.12%(2020년)로 한국과 유사한 규모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코로나19 회복기에 진입한 2021년에 다시 12.60%로 감소함

〈표 2-13〉 OECD 평균 정부총지출 대비 기능별 정부지출 추이(중앙정부 기준)

(단위: %, 총지출 대비)

구분	OECD 평균 ¹⁾					한국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²⁾
일반공공행정	27.72	28.18	27.85	25.60	23.20 (1)	23.47	22.38	22.57	22.60 (0.03p t)	22.60 (1)
국방	5.53	5.58	5.57	5.12	16.82 (3)	12.61	13.21	12.52	11.98	11.98 (5)
공공질서 및 안전	4.55	4.52	4.57	4.10	3.45 (7)	5.92	5.62	5.51	5.27	5.27 (6)
경제활동	11.79	11.66	11.88	16.12 (4.24p t)	12.60 (4)	15.65	16.14	15.81	16.54 (0.73p t)	16.54 (3)
환경보호	0.92	0.91	0.93	0.90	0.73 (9)	2.11	2.07	2.32	2.25	2.25 (8)
주거 및 지역사회	0.69	0.74	0.76	0.72	0.60 (10)	1.24	1.34	1.47	1.44	1.44 (10)
보건	10.32	10.59	10.44	10.55 (0.11p t)	10.72 (5)	2.99	3.06	3.25	3.93 (0.68p t)	3.93 (7)
여가·문화·종교	2.06	2.02	2.02	1.93	1.57 (8)	2.21	2.16	2.18	2.06	2.06 (9)
교육	10.39	10.47	10.54	9.41	8.24 (6)	20.20	20.60	20.50	18.07	18.07 (2)
사회보호	26.03	25.33	25.45	25.56 (0.11p t)	22.07 (2)	13.60	13.41	13.86	15.85 (1.99p t)	15.85 (4)

주 1) 31개 국가의 정부총지출 대비 분야별 재정지출 비율의 평균값임(콜롬비아 제외)
 2) 한국은 2021년도 정부지출 데이터가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함
 3) 볼드 처리된 데이터는 2019년-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2020년도 데이터 내 괄호()는 증가폭을 나타낸 것임
 4) 2021년도 데이터 내 괄호()는 분야별 정부지출 순위임
 자료: OECD 통계(2023년 7월 추출)

4) 중앙정부의 총지출 대비 여가·문화·종교 지출

- OECD 국가 평균 중앙정부의 정부총지출 대비 여가·문화·종교 지출 비중은 2017년 2.06%에서 2021년 1.57%로 감소하며 연평균 -6.63%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한국은 2017년 2.21%에서 2021년 2.06%로 연평균 -1.70%의 감소율을 나타냄
- 31개 국가 중 중앙정부의 총지출 대비 여가·문화·종교 지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헝가리(6.85%, 1위)였고 가장 낮은 국가는 스위스(0.04%)로 약 17배의 차이를 보임
- 한국의 중앙정부 여가·문화·종교 지출은 전체의 9순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14〉 OECD 국가의 정부총지출 대비 여가·문화·종교 지출 추이(중앙정부)

(단위: %, 총지출 대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규모	순위	
헝가리	8.43	7.78	7.24	8.97	6.85	1	-5.04
슬로바키아	2.11	2.42	2.64	2.44	2.78	2	7.14
아이슬란드	3.10	3.28	3.33	3.06	2.71	3	-3.30
핀란드	2.56	2.57	2.43	2.45	2.63	4	0.67
덴마크	2.51	2.45	2.52	2.45	2.44	5	-0.71
노르웨이	2.24	2.24	2.24	2.21	2.43	6	2.12
이스라엘	3.18	2.95	3.00	2.15	2.33	7	-7.52
리투아니아	2.69	1.83	2.23	2.20	2.09	8	-6.04
한국	2.21	2.16	2.18	2.06	2.06	9	-1.70
스웨덴	1.75	1.78	1.77	1.84	2.02	10	3.56
이탈리아	1.74	1.88	1.94	1.58	1.79	11	0.74
체코	1.97	2.06	2.07	1.76	1.74	12	-3.10
에스토니아	3.96	3.36	3.40	3.04	1.67	13	-19.37
오스트리아	1.75	1.73	1.74	1.58	1.59	14	-2.36
OECD	2.06	2.02	2.02	1.93	1.57	-	-6.63
아일랜드	1.79	1.88	1.86	1.59	1.52	15	-4.11
폴란드	1.40	1.45	1.85	1.57	1.48	16	1.42
네덜란드	1.49	1.52	1.44	1.40	1.25	17	-4.23
그리스	1.22	1.27	1.29	1.14	1.19	18	-0.48
룩셈부르크	1.82	1.97	1.98	1.91	1.17	19	-10.47
포르투갈	1.05	1.13	1.17	1.11	1.15	20	2.20
영국	1.16	1.08	1.03	0.84	1.02	21	-3.23
프랑스	1.75	1.79	1.77	1.62	0.94	22	-14.46
스페인	0.96	0.97	1.00	0.89	0.85	23	-3.09
라트비아	3.40	3.20	2.77	2.92	0.82	24	-29.97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규모	순위	
독일	0.78	0.84	0.81	0.91	0.80	25	0.55
호주	0.73	0.74	0.65	0.62	0.71	26	-1.00
일본	0.23	0.23	0.23	0.25	0.25	27	2.53
벨기에	0.23	0.27	0.27	0.22	0.17	28	-7.84
미국	0.12	0.12	0.11	0.09	0.10	29	-5.62
슬로베니아	3.03	3.06	3.08	2.58	0.06	30	-62.91
스위스	2.62	2.60	2.51	2.35	0.04	31	-64.12

주 1) 한국은 2021년도 정부지출 데이터가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함
 2) 콜롬비아는 중앙정부의 지출데이터가 부재하므로 포함하지 않음
 3) OECD 국가 평균은 콜롬비아를 제외한 31개 국가를 포함함
 자료: OECD 통계(2023년 7월 추출)

- 일반정부에 대한 분석인 <표 2-12>와 마찬가지로 OECD 국가의 중앙정부 여가·문화·종교 지출에 대한 상대적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별 지출 순위를 살펴봄(<표 2-15>)
-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여가·문화·종교 지출 순위가 높은 국가는 전체 정부활동 기능 중 6위에 위치한 헝가리와 스페인이었고, 가장 낮은 국가는 9위를 보이는 한국, 독일, 일본 미국이었음
- 일반정부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국 중앙정부의 여가·문화·종교 지출 순위는 OECD 평균인 7위보다 낮아 향후에 우선순위를 높일 필요가 있음

<표 2-15> OECD 국가의 10대 기능별 지출 중 여가·문화·종교 지출 순위(중앙정부/2021년 기준)

순위 구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국가 구분	헝가리	덴마크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한국
	스페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독일
		리투아니아	핀란드	영국	일본
		스웨덴	이스라엘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체코	오스트리아	호주	
		그리스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	폴란드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주 1) 국가별 여가·문화·종교 규모는 <표 2-14> 참고
 2) 국별 정부총지출 대비 10대 기능별 지출의 순위 중 여가·문화·종교 지출 순위를 의미

5) 여가·문화·종교 세부부문별 지출

- 앞서 살펴본 GDP 및 정부총지출 대비 여가·문화·종교에 대한 지출 비중은 재정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실제 여가·문화·종교 재정을 구성하는 세부부문별 지출 비중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함
- 정부기능별분류(COFOG)의 여가·문화·종교는 여가·스포츠 서비스, 문화예술 서비스, 방송·출판, 종교·공

동체, R&D, 기타 등 6개 세부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가의 부문별 지출 비중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세부부문을 확인하고자 함

- 그러나 OECD 통계에서는 32개 국가 중 호주, 콜롬비아, 이스라엘, 한국, 스위스, 미국을 제외한 26개국의 세부부문에 대한 지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여기서는 2021년 기준 26개 국가의 세부부문 지출 현황을 살펴봄
- 먼저 일반정부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가마다 세부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이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표 2-16>에 지출 비중이 가장 큰 분야(파란 음영), 가장 작은 분야(노란 음영)로 확인할 수 있음
- 전체 26개 국가 중 20개 국가에서 문화예술 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았고 특히 라트비아(71.59%)와 리투아니아(59.19%)가 가장 높았음
- 문화예술 서비스 보다 여가·스포츠 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로는 그리스(48.02%), 네덜란드(42.41%), 스웨덴(42.90%), 아이슬란드(50.19%), 이탈리아(35.86%), 포르투갈(37.64%) 등이 있음
- 종교·공동체(일본), R&D(그리스, 리투아니아, 프랑스), 기타(네덜란드, 아이슬란드, 핀란드)에 대한 지출이 아예 없는 국가도 있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R&D에 대한 지출 비중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2-16> OECD 국가의 여가·문화·종교 세부부문별 지출 현황(일반정부 기준)

(단위: %, 2021년 기준)

구분	여가·스포츠	문화예술	방송·출판	종교·공동체	R&D	기타
그리스	48.02	15.56	10.81	12.21	0	13.41
네덜란드	42.41	38.91	12.51	5.25	0.91	0
노르웨이	25.33	38.60	9.09	15.72	6.89	4.37
덴마크	22.76	37.52	12.12	26.76	0.01	0.82
독일	24.63	38.79	27.11	2.24	5.04	2.18
라트비아	14.55	71.59	10.05	0.37	0.05	3.39
룩셈부르크	40.67	42.96	8.43	6.78	0.05	1.11
리투아니아	25.41	59.19	9.94	1.80	0	3.65
벨기에	32.01	39.82	16.22	6.98	0.92	4.05
스웨덴	42.90	42.48	13.43	0.17	0.49	0.52
스페인	36.31	38.40	18.27	4.84	1.07	1.12
슬로바키아	18.53	46.31	23.47	8.85	0.14	2.70
슬로베니아	18.83	49.08	19.61	5.15	1.63	5.70
아이슬란드	50.19	33.80	6.83	8.33	0.85	0
아일랜드	18.60	41.70	35.27	2.02	0.21	2.20
에스토니아	31.51	42.44	8.68	1.78	4.51	11.07
영국	28.57	40.29	33.62	0.78	0.83	-4.09
오스트리아	25.49	42.48	23.52	5.80	2.35	0.35
이탈리아	35.86	34.07	20.23	8.20	0.43	1.21

구분	여가·스포츠	문화예술	방송·출판	종교·공동체	R&D	기타
일본	40.10	56.90	2.02	0	0.48	0.49
체코	31.41	45.59	11.72	2.59	1.76	6.93
포르투갈	37.64	31.95	11.52	1.78	10.74	6.38
폴란드	32.92	48.68	13.78	2.45	1.47	0.69
프랑스	37.55	51.10	9.82	1.35	0	0.17
핀란드	35.67	35.99	17.32	10.81	0.21	0
헝가리	29.23	33.85	11.45	21.41	0.04	4.02

주 1) 26개국에 대한 세부부분별 지출 비중임(호주, 콜롬비아, 이스라엘, 한국, 스위스, 미국 제외)

2) 국가별 비중이 높은 부문(파란 음영), 낮은 부문(노란 음영), 지출이 아예 없는 부문(회색 음영) 표시

자료: OECD 통계(2023년 7월 추출)

- 다음으로는 중앙정부의 세부부분별 지출 비중을 살펴보고자 하며, 일반정부 분석 대상인 26개 국가 중 중앙정부 데이터가 부재한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을 제외한 23개 국가의 현황을 살펴봄
- 이에 따르면, 전체 23개 국가 중 15개 국가에서 문화예술 서비스에 대한 비중이 높았고, 방송·출판은 5개 국가, 여가·스포츠 및 종교·공동체, 기타는 각각 1개 국가에서 지출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일반정부 기준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국가에서 문화예술 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았고, 일반정부와 달리 방송·출판에 대한 비중이 높은 곳(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체코, 폴란드)도 살펴볼 수 있었음

〈표 2-17〉 OECD 국가의 여가·문화·종교 세부부분별 지출 현황(중앙정부 기준)

(단위: %, 2021년 기준)

구분	여가·스포츠	문화예술	방송·출판	종교·공동체	R&D	기타
그리스	7.68	17.64	22.08	23.59	0	29.00
네덜란드	16.50	45.08	36.33	0	2.09	0
노르웨이	11.66	45.29	16.09	13.84	12.20	0.91
덴마크	5.14	27.96	20.80	44.69	0.01	1.40
라트비아	7.85	73.92	17.14	0.08	0	1.01
룩셈부르크	14.16	59.77	18.26	7.79	0.12	-0.09
리투아니아	11.63	63.64	20.21	2.18	0	2.34
벨기에	0	54.18	0	35.28	10.54	0
스웨덴	22.87	43.72	30.69	0.39	1.13	1.20
스페인	8.68	33.33	45.48	12.19	0.08	0.24
슬로바키아	18.78	44.06	26.72	8.10	0.16	2.18
슬로베니아	5.16	45.13	32.08	5.47	2.73	9.43
아이슬란드	3.65	45.21	21.81	26.61	2.72	0
아일랜드	18.13	25.03	50.49	2.89	0.30	3.15
에스토니아	16.20	40.48	14.21	3.00	7.26	18.82

구분	여가·스포츠	문화예술	방송·출판	종교·공동체	R&D	기타
영국	14.34	33.61	48.00	1.09	1.15	1.81
이탈리아	36.62	24.25	26.81	10.88	0.58	0.87
체코	24.29	38.35	24.90	5.69	3.21	3.56
포르투갈	6.43	29.01	27.88	2.29	25.90	8.50
폴란드	13.56	37.85	40.04	4.72	3.83	0
프랑스	10.89	58.32	30.77	0.02	0	0
핀란드	11.13	43.04	34.23	11.18	0.42	0
헝가리	26.48	31.95	12.90	24.54	0.05	4.08

주 1) 23개국에 대한 세부부문별 지출 비중임(호주, 콜롬비아, 이스라엘, 한국, 스위스,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제외)

2) 국가별 비중이 높은 부문(파란 음영), 낮은 부문(노란 음영), 지출이 아예 없는 부문(회색 음영)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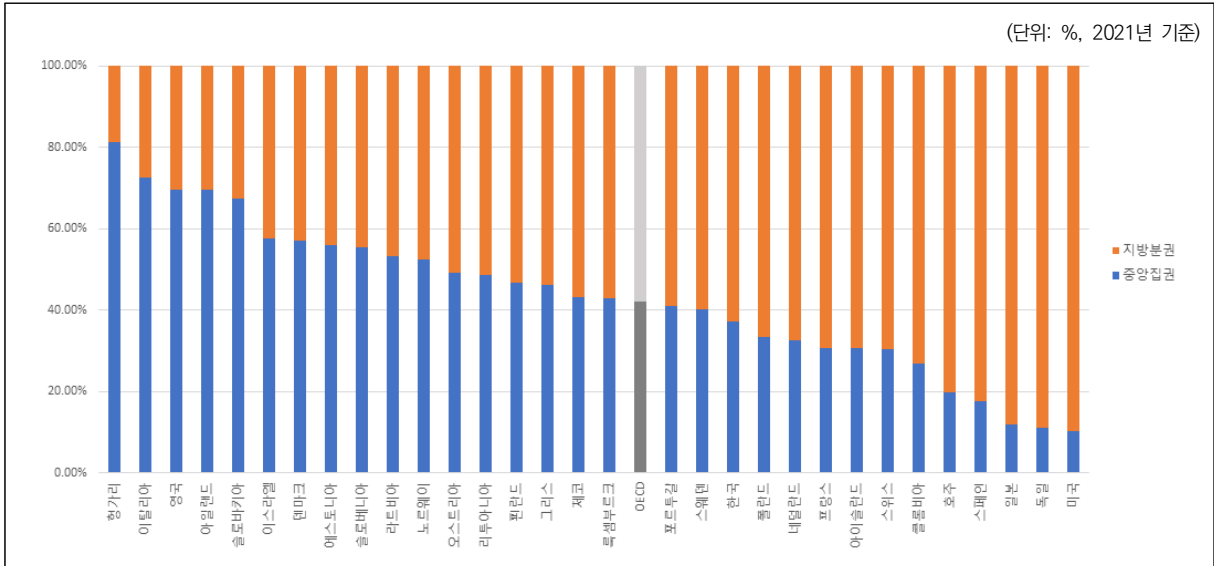
자료: OECD 통계(2023년 7월 추출)

3. 여가문화종교의 중앙-지방정부 분담

- 2023년 기준 한국 중앙정부의 총지출 대비 문화재정(16대 분야 기준) 비율은 1.35% 수준이나, 지방정부의 세출총계¹¹⁾ 대비 문화 및 관광 예산 비율은 3.97% 수준으로 문화부문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 강조되고 있음
- 재정분권에 관해서는 공공부문 및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관점과(Christl et al, 2020; Alonso&Andrews, 2019) 오히려 정부효율성을 저해한다는(Ubago Martinez et al, 2017) 상반된 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이슬이·홍경준, 2018)
- 문화분야의 재정분권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은 지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창의성 및 삶의 질 향상, 지역문화의 개발과 발전 및 관광객 유입을 통한 경제효과 유발 등과 관계되기 때문임
- 지역에서 문화는 중요한 정책수단이자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며(정보람, 2020), 더욱이 지방문화재정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여기서는 OECD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문화재정 분담비율을 살펴보고자 함
- 2021년 기준, 여가·문화·종교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 비율이 높은 국가는 32개 국가 중 11개 국가였으며, 나머지 21개 국가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OECD 국가 평균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재정 비율은 42.13%이고 지방정부 재정 비율은 57.87%로 OECD 국가 전반적으로 문화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11)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총합을 의미(자료: 지방재정 365)

[그림 2-2] OECD 중앙정부-지방정부 여가·문화·종교 재정지출 분담비율



주) 국가별 중앙집권-지방분권 비율은 <표 2-18> 참고
 자료: OECD 통계(2023년 7월 추출)

-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재정 비율이 높은 국가는 헝가리,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덴마크,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노르웨이 등이며, 특히 헝가리(81.32%)와 이탈리아(72.56%)가 가장 높았음
- 문화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큰 국가로는 벨기에, 미국, 독일, 일본, 스페인, 호주, 콜롬비아, 스위스, 아이슬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한국, 스웨덴,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체코, 그리스, 핀란드,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등 21개 국가임
- 특히 벨기에(중앙 5.37%-지방 94.63%), 미국(중앙 10.40%-지방 89.60%), 독일(중앙 11.08%-지방 88.92%) 등 연방국가의 지방정부 역할이 대체로 크게 나타났음

〈표 2-18〉 OECD 중앙정부-지방정부 여가·문화·종교 재정지출 분담비율

(단위: %, 2021년 기준)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헝가리	80.12	19.88	77.63	22.37	74.16	25.84	82.89	17.11	81.32	18.68
이탈리아	68.17	31.83	69.94	30.06	69.90	30.10	70.50	29.50	72.56	27.44
영국	65.75	34.25	64.34	35.66	63.15	36.85	63.78	36.22	69.57	30.43
아일랜드	72.35	27.65	72.04	27.96	71.41	28.59	70.27	29.73	69.51	30.49
슬로바키아	55.46	44.54	56.87	43.13	58.29	41.71	62.83	37.17	67.38	32.62
이스라엘	61.69	38.31	59.27	40.73	60.88	39.12	58.01	41.99	57.62	42.38
덴마크	54.50	45.50	54.74	45.26	55.77	44.23	56.58	43.42	57.13	42.87
에스토니아	60.00	40.00	11.70	88.30	55.35	44.65	55.80	44.20	56.01	43.99
슬로베니아	55.30	44.70	52.90	47.10	53.97	46.03	55.17	44.83	55.58	44.42
라트비아	44.20	55.80	43.27	56.73	41.70	58.30	51.04	48.96	53.24	46.76
노르웨이	48.34	51.66	48.06	51.94	46.53	53.47	49.76	50.24	52.39	47.61
오스트리아	45.92	54.08	45.81	54.19	45.51	54.49	48.74	51.26	49.19	50.81
리투아니아	60.28	39.72	50.36	49.64	49.33	50.67	51.35	48.65	48.57	51.43
핀란드	42.81	57.19	40.95	59.05	39.39	60.61	44.11	55.89	46.73	53.27
그리스	49.75	50.25	48.61	51.39	47.82	52.18	47.22	52.78	46.22	53.78
체코	42.39	57.61	40.16	59.84	42.45	57.55	42.11	57.89	43.13	56.87
룩셈부르크	86.61	13.39	44.08	55.92	45.22	54.78	47.92	52.08	42.99	57.01
OECD	42.02	57.98	38.47	61.53	39.76	60.24	46.15	53.85	42.13	57.87
포르투갈	42.93	57.07	41.77	58.23	42.02	57.98	42.99	57.01	40.93	59.07
스웨덴	37.98	62.02	38.05	61.95	36.68	63.32	39.28	60.72	40.27	59.73
한국	39.17	60.83	40.73	59.27	41.23	58.77	37.10	62.90	37.10	62.90
폴란드	28.33	71.67	23.79	76.21	30.62	69.38	35.94	64.06	33.38	66.62
네덜란드	29.35	70.65	29.65	70.35	29.25	70.75	31.95	68.05	32.56	67.44
프랑스	28.72	71.28	28.59	71.41	27.34	72.66	28.46	71.54	30.74	69.26
아이슬란드	32.39	67.61	32.78	67.22	33.54	66.46	98.34	1.66	30.67	69.33
스위스	26.85	73.15	26.36	73.64	25.52	74.48	27.69	72.31	30.47	69.53
콜롬비아	19.53	80.47	16.43	83.57	14.72	85.28	96.57	3.43	26.88	73.12
호주	19.99	80.01	20.81	79.19	20.52	79.48	20.92	79.08	19.72	80.28
스페인	16.47	83.53	16.58	83.42	16.41	83.59	18.73	81.27	17.61	82.39
일본	9.95	90.05	9.64	90.36	9.20	90.80	13.77	86.23	11.85	88.15
독일	9.31	90.69	9.82	90.18	9.38	90.62	11.46	88.54	11.08	88.92
미국	10.08	89.92	9.80	90.20	9.46	90.54	10.06	89.94	10.40	89.60
벨기에	0.01	99.99	5.40	94.60	5.48	94.52	5.35	94.65	5.37	94.63

주 1) 한국은 2021년도 정부지출 데이터가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함

2) 연도별 중앙정부 지출비중이 높은 국가(파란 음영), 지출비중이 낮은 국가(노란 음영) 표시

자료: OECD 통계(2023년 7월 추출)

제4절 소결

- 본 장에서는 OECD 국가의 경제규모에 따른 정부 크기와 여가·문화·종교에 대한 지출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문화재정 규모가 적절한 수준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일반정부와 중앙정부의 여가·문화·종교 계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GDP 대비 규모, 총지출 대비 규모, 기능별 지출 순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담비율 등을 분석함
- 분석 결과 GDP 대비 여가·문화·종교 지출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일반정부 기준 1.25%, 중앙정부 기준 0.60%이고, 한국은 일반정부 기준 0.99%, 중앙정부 기준 0.43% 수준임
- 정부총지출 대비 여가·문화·종교 지출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일반정부 기준 2.71%, 중앙정부 기준 1.57% 수준이고, 한국은 일반정부 기준 2.78%, 중앙정부 기준 2.06% 수준임
- GDP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문화재정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정부총지출 대비 문화재정의 규모는 일반정부, 중앙정부 모두 OECD 평균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임
- 그러나 정부총지출 대비 전체 10개의 정부활동 기능 중 여가·문화·종교 지출에 대한 순위는 OECD 평균 8위(일반정부, 중앙정부 모두)인데 반해 한국은 일반정부 10위, 중앙정부 9위에 위치하여 정부지출의 우선 순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 문화분야에 대한 공공재정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표 2-19〉 OECD 및 한국의 여가·문화·종교 정부지출 현황

(단위: %)

구분	OECD 평균					한국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GDP 대비 여가·문화·종교 (일반정부 기준)	1.25	1.27	1.27	1.33	1.25 (8)	0.86	0.95	1.03	1.06	0.99 (10)
GDP 대비 여가·문화·종교 (중앙정부 기준)	0.59	0.58	0.57	0.65	0.60 (8)	0.40	0.40	0.45	0.46	0.43 (9)
정부총지출 대비 여가·문화·종교 (일반정부 기준)	2.94	2.98	2.97	2.71	2.71 (8)	2.85	3.07	3.04	2.78	2.78 (10)
정부총지출 대비 여가·문화·종교 (중앙정부 기준)	2.06	2.02	2.02	1.93	1.57 (8)	2.21	2.16	2.18	2.06	2.06 (9)

주) 2021년도 데이터 내 괄호()는 분야별 정부지출 순위임

- 한편, GDP 대비 여가·문화·종교 지출 비중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지출이 가장 큰 국가는 아이슬란드(3.27%, 일반정부 기준)와 헝가리(2.57%, 중앙정부 기준)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으로 일반정부 기준에서 0.27%, 중앙정부 기준에서 0.03% 수준을 나타냄
- 그러나 문화분야에 대한 국가별 재정지출 규모를 해석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역사적 전통이나 민간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에 따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정보람·이학준, 2021)
 - 가령 미국은 민간투자와 기부가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문화분야에 대한 정부재정의 규모가 낮은 특징을 보임
- 다음의 장에서 살펴볼 사례분석 대상 국가(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GDP 및 정부총지출 대비 여가·문화·종교 지출 규모가 적은 것을 두고 해당 국가의 문화서비스와 재화의 공급 수준이 낮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임
- 아울러 1인당 GDP 규모가 유사한 국가의 여가·문화·종교 수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데, 이는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의 여가·문화·종교 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34,984 달러이고, 한국과 유사한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는 스페인(30,116 달러), 이탈리아(35,551 달러), 일본(39,285 달러), 프랑스(43,519달러), 영국(47,334 달러) 등임
 - 참고로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최고 135,683 달러(룩셈부르크)에서 최저 6,131달러(콜롬비아)이며, 한국은 34,984달러로 전체의 20위에 위치함(〈표 2-20〉)

〈표 2-20〉 OECD 국가의 1인당 GDP

(단위: US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규모	순위	
룩셈부르크	110,193	117,255	113,219	116,356	135,683	1	5.34%
아일랜드	69,774	79,108	80,887	85,423	99,152	2	9.18%
스위스	83,352	86,388	85,335	87,100	93,457	3	2.90%
노르웨이	75,497	82,268	75,720	67,330	89,203	4	4.26%
미국	59,915	62,805	65,095	63,028	69,288	5	3.70%
아이슬란드	72,010	74,470	68,941	59,264	68,384	6	-1.28%
덴마크	57,610	61,592	59,776	61,063	67,803	7	4.16%
스웨덴	53,792	54,589	51,939	52,300	60,239	8	2.87%
호주	53,934	57,181	54,875	51,680	59,934	9	2.67%
네덜란드	48,675	53,045	52,476	52,396	58,061	10	4.51%
핀란드	46,412	49,989	48,629	49,161	53,983	11	3.85%
오스트리아	47,429	51,487	50,114	48,589	53,268	12	2.95%
벨기에	44,198	47,549	46,599	45,189	51,768	13	4.03%
이스라엘	40,774	42,063	43,951	44,178	51,430	14	5.98%
독일	44,653	47,974	46,795	46,253	50,802	15	3.28%
OECD	56,890	60,611	59,148	58,208	66,530	-	3.99%
영국	40,858	43,647	43,070	41,098	47,334	16	3.75%
프랑스	38,781	41,593	40,579	39,037	43,519	17	2.92%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규모	순위	
일본	38,834	39,727	40,458	39,918	39,285	18	0.29%
이탈리아	32,407	34,622	33,673	31,835	35,551	19	2.34%
한국	31,605	33,429	31,929	31,727	34,984	20	2.57%
스페인	28,170	30,365	29,554	27,056	30,116	21	1.68%
슬로베니아	23,514	26,117	25,943	25,490	29,201	22	5.56%
에스토니아	20,438	23,064	23,398	23,054	27,281	23	7.49%
체코	20,636	23,420	23,660	22,933	26,378	24	6.33%
포르투갈	21,490	23,563	23,331	22,195	24,262	25	3.08%
리투아니아	16,885	19,186	19,576	20,232	23,433	26	8.54%
슬로바키아	17,538	19,390	19,304	19,267	21,088	27	4.72%
라트비아	15,695	17,865	17,927	17,704	20,642	28	7.09%
그리스	18,582	19,757	19,134	17,647	20,277	29	2.21%
헝가리	14,624	16,427	16,736	16,076	18,773	30	6.44%
폴란드	13,865	15,468	15,732	15,742	17,841	31	6.51%
콜롬비아	6,377	6,730	6,419	5,312	6,131	32	-0.98%

주) OECD 통계의 1인당 GDP는 잠정치(Provisional value), 추정치(Estimated value) 등 정확한 값이 아니므로, <표 2-19>의 1인당 GDP는 통계청(KOSIS)의 '1인당 국내총생산(당해년가격)(OECD 회원국)' 자료를 활용함
 자료: 통계청(KOSIS)

- 한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영국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GDP 대비 여가문화·종교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반정부 기준 프랑스(1.41%)이며, 스페인(1.18%), 한국(0.99%), 이탈리아(0.83%), 영국(0.62%), 일본(0.45%) 순으로 나타났음
- 중앙정부 기준 GDP 대비 문화재정은 이탈리아(0.62%)가 가장 높았고 영국과 프랑스 각각 0.44%, 한국 0.43%, 스페인 0.21%, 일본 0.05%로 나타나 1인당 GDP 3만 달러 국가들 중 한국은 중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표 2-21>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국가 문화재정 현황

(단위: US달러, %, 2021년 기준)

OECD 국가	1인당 GDP	GDP 대비 문화재정		정부총지출 대비 문화재정		중앙-지역 분담수준	
		일반정부	중앙정부	일반정부	중앙정부	중앙	지역
영국	47,334	0.62	0.44	1.28	1.02	69.57	30.43
프랑스	43,519	1.41	0.44	2.39	0.94	30.74	69.26
일본	39,285	0.45	0.05	1.01	0.25	11.85	88.15
이탈리아	35,551	0.83	0.62	1.50	1.79	72.56	27.44
한국	34,984	0.99	0.43	2.78	2.06	37.1	62.9
스페인	30,116	1.18	0.21	2.33	0.85	17.61	82.39
3만 달러 국가 평균		0.91	0.37	1.88	1.15	39.91	60.10



제3장

주요국가 문화재정운용 사례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

1) 국가별 정책적 맥락을 고려한 문화재정 검토

- OECD 통계를 활용한 국가간 문화재정 비교분석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별 국가의 재정구조 특징을 반영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음
- 국가마다 정책기조와 행정체계, 재정구조 및 문화재정의 범위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 여건을 고려한 분석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재정 정책방향 수립 시 참고할만한 주요 국가를 선별하여 행정체계, 재정구조, 문화정책의 방향 및 문화재정 규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거시적인 문화재정 규모를 검토함과 동시에 세부 지출내역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국가별 문화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문화재정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주요국의 세출별, 부처별, 부문별 문화재정 분석

- 주요국의 기능별 세출기준에 따른 문화재정 비율
 - 정부총지출 대비 문화부문에 대한 지출 비율을 통해 국가별 문화분야의 우선순위를 파악함
- 문화행정 업무 소관부처의 문화재정 비율
 - 부처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부처 예산 비율을 통해 국가별 문화관련 부처에 대한 투자 수준을 파악함
- 문화재정의 지출항목별 비율
 - 한국 및 프랑스의 프로그램 단위, 일본, 영국, 독일의 세부 지출항목별 편성 비율을 통해 재정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의 투자 방향을 살펴봄
- 세부부문별 구성비
 - 국가별 문화재정 편성 현황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재편하여 구성 및 비교함

2. 분석 대상

- 사례분석을 위한 주요 국가는 선행연구의 분석 대상과의 연속성 및 한국과 유사한 정부조직 형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
- OECD 국가의 문화재정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에 대한 사례분석이 실시된 바 있고,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한국과 유사한 유교적 행정전통을 지닌 대만, 중국에 대한 분석도 시도됨
 - 김세훈(2003)은 영국, 프랑스, 일본, 대만, 미국, 독일, 스웨덴 7개 국가, 윤주(2008)는 영국, 프랑스, 일본, 대만, 미국, 스웨덴, 이탈리아 7개 국가¹²⁾, 양혜원(2011)은 영국, 프랑스, 일본, 대만, 이탈리아, 스페인 6개 국가, 정보람(2016)은 영국, 프랑스, 일본, 대만, 중국 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음
- 선행연구의 사례분석 대상 국가들 중에서 한국과 유사한 집중형 정부조직 형태를 띄고 있는 국가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연구되어 온 영국, 프랑스, 일본 3개 국가와 그동안 검토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은 독일이 포함됨
 - 정부조직의 유형은 분산형과 집중형으로 구분되는데, 집중형은 총리가 주도하는 내각이 모든 행정기관에 통제권을 갖고 있는 형태로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해당함(김동욱, 2018)
- 아울러 사례분석 대상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Painter & Peters(2010)가 행정전통에 따라 구분한 9개 지역 중 영미권, 프랑스권, 독일권, 동아시아권 국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배관표·박종석·신현기, 2021)
 - 국가별 행정체계는 기존의 제약을 받아 형성되기 때문에 지리적 근접성에 따른 유사한 행정이념 및 전통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행정전통은 영미권(Anglo-American), 프랑스권(Napoleonic), 독일권(Germanic), 스칸디나비아권(Scandinavian), 중남미권(Latin American),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옛 식민지권(Postcolonial South Asian and African), 동아시아권(East Asian) 동구권(Soviet), 이슬람권(Islamic)으로 구분됨(Painter&Peters, 2010; 배관표·박종석·신현기, 2021)

12) 윤주(2008)의 연구에서는 주요 7개 국가(영국, 프랑스, 일본, 대만, 미국, 스웨덴, 이탈리아) 외에도 중국, 스페인, 캐나다, 폴란드, 노르웨이의 문화예산을 검토하였음

3. 분석 방법

- 국가별 행정체계 및 재정구조에 따라 문화재정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다르고 문화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부처의 역할도 상이하므로, 문화재정의 규모를 세출기능 상의 '문화' 분야나 문화전담부처의 예산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
- 문화, 체육, 관광 업무를 소관하는 부처가 통합된 나라가 있는가 하면(영국, 한국 등) 서로 분리된 나라가 있기 때문에(프랑스, 독일, 일본 등), 국가마다 정부 세출기능 상의 '문화'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거나(영국의 '여가·문화·종교', 한국의 '문화 및 관광' 등) 여러 기능으로 나누어 편제되어 있는 특징을 보임
- 따라서 주요국의 사례분석 시 문화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업무 범위와 내용, 재정현황을 분석하는 동시에 국가별 재정구조에 따른 문화예술, 체육, 관광, 문화재 등의 재정규모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음
 - 문화예술, 체육, 관광, 문화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문화재정(문화 및 관광) 세부부문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임
 - 국가별 문화정책과 문화재정의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규정한 '문화재정'의 범위가 아닌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는 문화재정의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비교하려는 것임

제2절 한국

1. 문화행정체계

1)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 대통령 및 국무총리 산하 조직과 18개 부처, 18개 외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문화행정 업무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정부조직법」 제36조에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당시 공보처와 문교부 산하 문화국으로 이원화되었던 것이 통합과 분리의 과정을 거치다 1993년 문화체육부로 통합, 1998년 문화관광부로 변경, 2008년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의 모습을 갖추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는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19개의 소속기관과 예술의전당, 대한체육회, 한국관광공사 등 33개의 유관기관 및 단체가 조직되어 있음

2. 문화재정 운용

1) 국가재정 일반현황

- 회계연도
 - 한국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 예산과정
 - 한국은 예산비법률주의 국가로서 매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국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함
 - 예산의 편성은 ①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②중기사업계획서 제출, ③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④예산요구서 제출, ⑤예산안 편성, ⑥예산안 제출, ⑦예산안 심의, ⑧예산안 확정과정의 과정을 거쳐 진행됨
- 재정구조
 - 수입은 예산수입과 기금수입으로 구분되며, 지출은 기능에 따라 16대 분야 및 12대 분야로 구분함

- 16대 분야의 세출 기준은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이후 프로그램 단위에서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활용되고 있음¹³⁾
- 16대 분야는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통일·외교, 국방,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통신,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로 구성됨
- 예산자료
 - 한국의 예산자료는 5년 단위의 예산계획을 반영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¹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수립하는 정부예산안 자료를 기반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정부예산안 및 「나라살림」 등을 참고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대한민국 재정」, 한국재정정보원의 「주요 재정통계」, 정부재정의 데이터베이스인 열린재정을 참고하여 국가재정 현황을 검토함

2) 문화재정 현황

① 기능별 세출의 문화재정

- 한국의 기능별 세출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16대 분야와 UN의 정부기능별분류(COFOG) 기준에 따른 12대 분야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 각각 문화 및 관광, 문화·체육·관광 기능의 예산이 문화재정에 해당함
- 16대 기능별 세출 기준에 따른 문화 및 관광 재정규모는 2023년 기준 정부총지출(638.8조원) 대비 1.35%(8.6조원) 수준으로 전체 세출의 13번째 순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지난 5년 간 정부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8.0%에 비해 문화 및 관광은 4.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도에 비해 -0.5조원 감소함

〈표 3-1〉 16대 분야별 자원배분 추이

(단위: 조원, %)

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규모	순위	
1. 일반·지방행정	76.6	79.0	84.7	98.1	112.2	2	10.0%
2. 공공질서 및 안전	20.1	20.8	22.3	22.3	22.9	7	3.3%
3. 통일·외교	5.1	5.5	5.7	6.0	6.4	14	5.8%
4. 국방	45.3	48.7	51.4	53.0	55.3	4	5.1%
5. 교육	70.6	72.6	71.2	84.2	96.3	3	8.1%
6. 문화 및 관광	7.2 (1.53%)	8.0 (1.56%)	8.5 (1.52%)	9.1 (1.50%)	8.6 (1.35%)	13	4.5%

13) 2023년 기준 프로그램 예산단위는 16대 분야, 74개 부문, 651개 프로그램, 2,758개 단위사업, 8,5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19년 개편을 통해 기존의 69개 부문을 74개로 확대한 바 있음(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 참고)

14)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서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재정전략 계획인 중기재정운용계획(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MTEF)을 수립하며, 국가별 계획서의 명칭이나 기간, 목표 등은 상이함

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규모	순위	
7. 환경	7.4	9.0	10.6	11.9	12.2	10	13.3%
8. 사회복지	148.9	167.0	185.0	195.0	206.0	1	8.5%
9. 보건	12.1	13.5	14.7	22.7	20.0	9	13.4%
10. 농림수산	20.0	21.5	22.7	23.7	24.4	6	5.1%
1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8.8	23.7	28.6	31.3	26.0	5	8.4%
12. 교통 및 물류	15.7	19.2	21.4	22.8	20.8	8	7.3%
13. 통신	7.3	7.9	8.4	9.0	9.0	12	5.4%
14. 국토 및 지역개발	4.1	4.0	5.1	5.1	4.2	15	0.6%
15. 과학기술	7.3	8.2	9.0	9.6	9.9	11	7.9%
16. 예비비	3.0	3.4	8.6	3.9	4.6	15	11.3%
총지출	469.5	512.0	557.9	607.7	638.8	-	8.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2대 기능별 세출 기준으로 살펴봐도 문화·체육·관광 재정규모는 정부총지출(648.1조원) 대비 1.33%(8.6조원)로 낮음
- 지난 5년 간 정부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인 8.1% 대비 4.5% 수준으로 나타나 재정규모나 증가율 측면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2023년도 총지출 예산은 전년 616.7조원 대비 648.1조원으로 확대되는데 반해,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전년 9.1조원(1.48%) 대비 8.6조원(1.33%)으로 크게 감소한 상황임

〈표 3-2〉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추이

(단위: 조원, %)

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규모	순위	
1. 보건·복지·고용	161.0	180.5	199.7	217.7	226.0	1	8.8%
2. 교육	70.6	72.6	71.2	84.2	96.3	3	8.1%
3. 문화·체육·관광	7.2 (1.52%)	8.0 (1.54%)	8.5 (1.52%)	9.1 (1.48%)	8.6 (1.33%)	11	4.5%
4. 환경	7.4	9.0	10.6	11.9	12.2	10	13.3%
5. R&D	20.5	24.2	27.4	29.8	31.1	5	11.0%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8	23.7	28.6	31.3	26.0	6	8.4%
7. SOC	19.8	23.2	26.5	28.0	25.0	7	6.0%
8. 농림·수산·식품	20.0	21.5	22.7	23.7	24.4	8	5.1%

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규모	순위	
9. 국방	46.7	50.2	52.8	54.6	57.0	4	5.1%
10. 외교·통일	5.1	5.5	5.7	6.0	6.4	12	5.8%
11. 공공질서·안전	20.1	20.8	22.3	22.3	22.9	9	3.3%
12. 일반·지방행정	76.6	79.0	84.7	98.1	112.2	2	10.0%
총지출	473.8	518.2	560.7	616.7	648.1	-	8.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② 부처의 문화재정 규모

- 한국의 문화행정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고 있지만, 세출기준 상의 문화재정은 실제 문화재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67,408억원으로 전체 문화재정의 78.3%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문화재청 15.7%(13,508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5,143억원) 순임 - 소관부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지난 5년 간 문화재청 예산의 증가율이 10.6%로 가장 높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 문화체육관광부 3.6%로 나타났으며,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8.9%로 크게 감소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별도로 살펴보면 정부총지출(638.8조원) 대비 1.05%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3〉 문화 및 관광 소관부처별 추이

(단위: 억원, %)

소관부처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문화체육관광부	58,527 (81.3)	66,444 (81.8)	68,827 (81.4)	73,968 (81.3)	67,408 (78.3)	3.6%
문화재청	9,031 (12.5)	10,178 (12.5)	10,944 (12.9)	12,014 (13.2)	13,508 (15.7)	1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445 (6.2)	4,570 (5.6)	4,768 (5.6)	4,993 (5.5)	5,143 (6.0)	3.7%
합계	72,003 (100.0)	81,192 (100.0)	84,539 (100.0)	90,975 (100.0)	86,059 (100.0)	4.6

주) 2019-2021년 결산 기준, 2022-2023년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한국문화정보원(2023), 『2023 주요 재정통계』

③ 지출항목별 구성

- 현재 중앙정부의 재정은 기능에 따른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에 따라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문화 및 관광' 기능의 지출항목을 프로그램 단위별로 살펴 볼 수 있음¹⁵⁾
 -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부처의 성과관리와도 연계되는데 프로그램은 성과목표이고 단위사업은 성과지표에 해당하여 성과관리와 연계되어 관리됨
 -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기반한 전 부처의 재정사업은 16개 분야, 74개 부문, 580개 프로그램, 2,345개 단위사업, 8,58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2023년 기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개의 부문, 55개의 프로그램, 160개의 단위사업, 51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됨

〈표 3-4〉 문화 및 관광 프로그램 예산 추이

(단위: 억원, %)

세부부문	2019	2020	2021	2022	2023
부문당 예산평균	14,499 (5)	16,036 (5)	16,963 (5)	18,195 (5)	17,212 (5)
프로그램 당 예산평균 (프로그램 수)	1,343 (54)	1,485 (54)	1,542 (55)	1,654 (55)	1,565 (55)
단위사업당 예산평균 (단위사업 수)	450 (161)	501 (160)	533 (159)	562 (162)	538 (160)
세부사업당 예산평균 (세부사업 수)	148 (490)	161 (498)	168 (504)	176 (516)	167 (515)

주) 연도별 예산을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수로 나눈 것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④ 세부부문별 구성

- 문화 및 관광 재정규모가 지난 5년 간 연평균 4.5%의 증가율을 보인데 반해 문화예술, 체육, 문화재,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의 부문별 증감폭은 최소 -3.8%에서 최대 11.7%로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지난 5년 간 예산이 가장 크게 늘어난 부문은 문화재로 2019년 0.9조원에서 2023년 1.4조원으로 확대되었고, 11.7%의 증가율을 나타냄
 - 문화 및 관광 일반(연평균 증가율 7.5%), 문화예술(연평균 증가율 6.6%)이 그 뒤를 이었으며, 소폭이긴 하나 체육 부문도 연평균 증가율 1.6%를 보였음
- 그러나 관광 부문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3.8% 수준으로 재정규모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15)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2007년 「국가재정법」이 시행되면서부터 도입되어 기존의 부처 중심 예산편성에서 정책의 기능 및 프로그램 중심 예산편성으로 전환된 것임

〈표 3-5〉 문화 및 관광 세부부문 지출 추이

(단위: 조원, %)

세부부문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문화예술	3.1	3.6	3.8	4.1	4.0	6.6
체육	1.5	1.7	1.9	1.9	1.6	1.6
문화재	0.9	1.0	1.1	1.2	1.4	11.7
관광	1.4	1.5	1.4	1.4	1.2	-3.8
문화 및 관광 일반	0.3	0.3	0.3	0.4	0.4	7.5
문화 및 관광 (총지출 대비)	7.2 (1.53)	8.0 (1.56)	8.5 (1.52)	9.1 (1.50)	8.6 (1.35)	4.5

주)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2년과 2023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한국재정정보원(2023). 재정통계 BRIEF

- 2023년 기준 문화 및 관광 예산(8.6조원)에서 문화예술, 체육, 문화재,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6.51%, 18.60%, 16.28%, 13.95%, 4.65%인 것으로 나타남

〈표 3-6〉 한국 문화재정의 세부부문별 구성비

(단위: 조원, %)

구분	세부부문별 규모					세부부문별 비율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문화예술	3.1	3.6	3.8	4.1	4.0	43.06	44.44	44.71	45.56	46.51
체육	1.5	1.7	1.9	1.9	1.6	20.83	20.99	22.35	21.11	18.60
문화재	0.9	1.0	1.1	1.2	1.4	12.50	12.35	12.94	13.33	16.28
관광	1.4	1.5	1.4	1.4	1.2	19.44	18.52	16.47	15.56	13.95
문화및관광 일반	0.3	0.3	0.3	0.4	0.4	4.17	3.70	3.53	4.44	4.65

3. 소결

- 나라살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거시적 관점의 정부 재정운용의 방향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 정부예산을 편성해 왔으나 2023년부터는 건전재정으로의 전면 전환을 선언함
-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재정투자 규모는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2023년도 재정투자 규모가 5.4%로(2022년 9.1조원→2023년 8.6조원) 크게 감소한 상황임
 - 정부는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는데, 실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량지출을 계획 기간 동안 연평균 -0.1% 수준으로 감소할 계획임을 포함함

〈표 3-7〉 문화·체육·관광 분야 투자계획

(단위: 조원, %)

세부부문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평균 증가율
□ 문화·체육·관광분야	90,975	85,038	87,329	88,996	90,564	△0.1
○ 문화예술	41,423	39,933	41,312	42,480	43,223	1.1
○ 관광	14,496	12,261	12,261	12,260	12,247	△4.1
○ 체육	19,303	16,118	16,501	16,556	16,952	△3.2
○ 문화 및 관광 일반	3,739	3,792	3,972	4,163	4,367	4.0
○ 문화재	12,014	12,935	13,283	13,537	13,775	3.5

자료: 기획재정부(2022),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나라살림 자료에 따르면 문화분야 재정지원 방향의 우선순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제고 및 예술인 창작권 보장(2019~2020년), 한류의 확산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디지털전환(2021년), K-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2022~2023년)으로 변화하여, 최근 문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확보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성과관리 전략계획(2021~2025)」에 근거하여 6대 전략목표 하에 22개 성과목표, 71개 관리과제, 173개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2023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6대 전략목표의 재원배분 계획은 아래의 〈표 3-8〉과 같이 변화함
 - 각 부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 연도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전략계획에서 제시된 전략목표별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이에 따르면 국민의 문화 및 관광 향유와 관련된 전략목표 1, 4 예산은 각각 -1.12%, -3.39% 감소한 반면, 창작지원 및 콘텐츠 제작지원에 해당하는 전략목표 2, 3 예산이 각각 10.24%, 10.53% 증가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K-콘텐츠 활성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8〉 문화체육관광부 자원배분 계획

(단위: 조원, %)

전략목표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I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 환경을 조성한다	10,992.05	11,919.51	12,255.78	13,021.97	10,505.85	-1.12
II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8,017.77	8,757.35	9,270.53	11,206.06	11,840.81	10.24
III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¹⁾	7,607.78	9,650.13	10,258.86	11,454.71	11,352.87	10.53
IV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²⁾	13,867.88	13,219.16	14,667.11	14,269.61	12,079.22	-3.39
V 생활체육활성화와 스포츠 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14,634.02	16,947.03	17,580.56	19,303.46	16,398.14	2.89
VI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³⁾	641.13	755.62	883.59	1,158.59	1,227.42	17.63
총계	55,760.63	61,248.80	64,916.43	70,414.40	63,404.31	3.26

주 1) 2019년도 :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해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2) 2019년도 :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을 실현한다

3) 2019년도 :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으로 국민의 정책 공감 및 지지도 제고에 기여한다

자료: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br/UOPKOBRA02?evlAcntYr=2023&offcCd=069&tabNo=1>)

- 요컨대, 한국의 문화재정은 16대 기능별 세출 기준에서 1.35% 수준이고, 이 중 문화재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을 제외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정부총지출 대비 1.05% 수준이었음
- 세부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46.5%, 체육 18.6%, 문화재 16.3%, 관광 14.0%, 문화 및 관광 일반 4.7%로 문화예술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세부 지출항목을 통해 살펴본 결과 최근의 문화재정 중점 투자 방향은 K-콘텐츠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음

제3절 영국

1. 문화행정체계

1)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

- 영국은 잉글랜드(England),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스코틀랜드(Scotland), 웨일즈(Wales) 4개 지역으로 구성된 입헌군주제 국가이며 의원내각제를 채택함
- 행정부는 수상(Prime Minister)과 각료들(Ministers of the Crown)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조직은 「정부조직법」 같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리가 정부조직 개편의 권한을 갖고 신속적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편임(김동욱, 2018; 김석은·김유현, 2022)
- 현재 정부조직은 24개의 장관급 중앙부처(Ministerial departments)와 20개의 비장관급부처(Non ministerial departments), 424개의 청 및 위원회들(Agency and other public bodies)로 구성되어 있음
- 문화행정 업무는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 DCMS)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한국과 유사하게 문화, 체육, 관광 업무를 모두 포괄함
-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1992년 설립된 문화유산부(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가 1997년 확대 및 재편되어 현재와 같은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방송, 영화, 음악 등의 영역을 관장하는 형태가 되었고, 2017년에는 부처 명칭에 ‘디지털(digital)’을 포함하며 디지털 관련 업무를 담당함
- 2023년 2월, 영국 정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이전의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에서 디지털 업무가 과학·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로 이관됨
 - 디지털 관련 업무를 과학·혁신·기술부로 이관하긴 하였으나 문화·미디어·스포츠부에서도 여전히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영국은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기반하여 문화정책이 추진되기 때문에 부처 산하 공공기관(arm's length bodies, ALBs)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 특징을 보이며, 현재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에는 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등 42개의 산하 공공기관이 존재함

2. 문화재정 운용

1) 국가재정 일반현황

■ 회계연도

- 영국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일까지이며, 현재는 2023/24 회계연도 집행 중임

■ 예산과정

- 영국은 예산법률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을 매년 법률로써 제정함¹⁶⁾
- 예산의 편성은 3월 예산일(Budget day)에 재무부장관의 예산연설을 시작으로 하여, 예산일 이후 5주 내에 정부가 의회에 세출예산안(Main Estimates) 제출, 하원과 상원의 심의¹⁷⁾, 국왕의 재가 후 세출법(Supply and Appropriation Act) 제정의 과정을 거쳐 추진됨
- 회계연도 개시일이 4월 1일이지만 세출예산법안은 7월 경 통과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전년도 11월 경 하원에서 잠정예산(Votes on Account)을 의결하고, 이를 토대로 집행함

■ 재정구조

- 영국의 예산은 부처별 지출한도(Department Expenditure Limits: DEL)와 연간관리지출(Annually Managed Expenditure: AME)로 구분되며, 지출의 성격에 따라 경상지출(resource)과 자본지출(capital)로 구분함
- 부처별 지출한도(DEL)는 부처별 지출 상한을 통해 계획·관리되는 지출로서 주로 법적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이 해당하며, 연간관리지출(AME)은 사회보장지출, 세액공제 등 법정지출에 해당하는 항목들로 다년도 지출계획 수립이 어려운 지출로 규모가 크고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음(김성태, 2007; 국회예산정책처, 2020)
- 영국은 공공부문의 지출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총관리지출(Total Management Expenditure: TME)을 작성하는데 이는 부처별 지출한도(DEL)와 연간관리지출(AME)을 합한 것임
- 한편, 영국은 부처별 예산편성 현황과 기능별 세출에 따른 현황 자료를 함께 공개하고 있으며, 기능별 세출은 UN의 정부기능별분류(COFOG) 분류에 따라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활동, 환경보호,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보건, 여가문화·종교, 교육, 사회보호로 구분됨

■ 예산자료

- 영국은 격년으로 3년 시계의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세출예산안(Main Estimates)과 봄 예산서(Spring Budget)를 작성 및 발표함
-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지출검토(Spending Review)와 영국재무부에서 공개하는 정부의 세부적인 수입지출 데이터인 공공지출통계(Public Spending Statistics)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¹⁸⁾

16) 예산법률주의는 세입은 조세법률주의, 세출은 지출법률주의에 입각해 운영하는 방식을 말하며,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영국, 프랑스, 독일임

17) 정부예산에 대한 권한은 하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된 세출예산안(Main Estimates)에 대한 하원의 심의가 완료되면 상원은 의례적인 심의를 수행함(국회예산정책처, 2020)

18) 영국의 공공지출통계는 다음의 홈페이지를 참고(<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public-spending-statistics-release-july-2023>)

- 공공지출통계 데이터에서는 부처별 예산(Departmental budgets), 공공부문지출(Public sector spending), 중앙정부지출(Central government spending) 등의 자료를 활용해 기능별 세출 현황과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의 예산 현황을 파악하였음
- 또한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의 세부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영국의회(UK Parliament)에서 공개하는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의 연도별 세출예산안(Main Estimate memorandum),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의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 Accounts)의 예산자료를 참고함

2) 문화재정 현황

① 기능별 세출의 문화재정

- 영국은 UN의 정부기능별분류(COFOG)에 맞춰 공공부문 지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이 기능별 세출에서 '여가·문화·종교' 지출 규모를 영국의 문화재정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이에 따르면 영국의 여가·문화·종교 재정 비율은 2022/23 회계연도 기준 14십억 파운드(£ billion)로 총관리지출(TME) 대비 1.21% 수준이며 전체 세출항목 중 9번째 순위임
- 2018/19 회계연도의 총관리지출 대비 여가·문화·종교 재정 비율인 1.33%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 5년 평균 총관리지출이 7.7% 증가한데 반해 여가·문화·종교는 5.3%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임

〈표 3-9〉 영국의 기능별 세출 추이(2018/19~2022/23 회계연도)

(단위: 십억 파운드/£ billion, %)

기능별 세출	2018/19결산	2019/20결산	2020/21결산	2021/22결산	2022/23결산		연평균 증가율
					규모	순위	
1. 일반공공행정	81.5	80.9	71.9	111.0	163.7	3	19.0%
- 공공 및 일반서비스	12.7	14.4	18.4	28.1	26.8	-	20.5%
- 국제서비스	11.9	11.7	11.2	8.4	8.5	-	-8.1%
- 공공부문 부채 이자	56.9	54.8	42.2	74.5	128.4	-	22.6%
2. 국방	40.2	42.2	44.6	48.7	55.5	6	8.4%
3. 공공질서 및 안전	32.4	34.5	38.9	39.8	43.9	7	7.9%
4. 경제활동	60.8	66.6	196.2	98.4	125.0	4	19.7%
- 기업 및 경제발전	14.1	18.1	131.3	36.9	63.8	-	45.8%
- 과학 및 기술	5.6	6.0	6.6	6.6	7.2	-	6.5%
- 고용정책	2.7	2.3	2.6	4.2	3.8	-	8.9%
- 농업·어업·임업	5.7	5.8	6.3	6.0	6.7	-	4.1%
- 교통	32.7	34.4	49.4	44.7	43.6	-	7.5%
5. 환경보호	11.1	11.8	13.0	13.8	13.9	10	5.8%
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12.1	14.2	13.7	15.2	17.8	8	10.1%
7. 보건	152.9	164.1	218.6	216.2	211.6	2	8.5%
8. 여가·문화·종교	11.4 (1.33)	12.5 (1.41)	12.8 (1.16)	12.9 (1.24)	14.0 (1.21)	9	5.3%

기능별 세출	2018/19결산	2019/20결산	2020/21결산	2021/22결산	2022/23결산		연평균 증가율
					규모	순위	
9. 교육	88.1	90.6	95.5	100.1	105.5	5	4.6%
10. 사회보호	274.8	275.8	299.3	300.0	318.8	1	3.8%
EU 거래(EU transactions)	7.8	5.8	7.0	-2.0	-2.3	-	-
공공부문 지출	773.1	799.2	1,011.4	954.1	1,067.5	-	8.4%
회계조정	85.2	89.5	95.3	87.4	87.4	-	-
총관리지출(TME)	858.4	888.7	1,106.7	1,041.5	1,154.9	-	7.7%

자료: 공공지출통계(Public Spending Statistics), 2023.7

② 부처의 문화재정 규모

- 영국의 문화행정 전담부처는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이므로 여기서는 영국의 정부부처 총예산 대비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예산 비율을 살펴봄
- 2022/2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정부의 경상지출 총예산은 823,955십억 파운드이며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부처별 지출한도(DEL) 1,945십억 파운드, 연간관리지출(AME) 5,710십억 파운드로 정부총지출 대비 0.93%(7,655십억 파운드) 수준임

〈표 3-10〉 영국 부처별 경상지출 예산 추이(2018/19~2022/23 회계연도)

(단위: 십억 파운드/£ billion, %)

구분	2018/19결산	2019/20결산	2020/21결산	2021/22결산	2022/23결산
부처별 경상비 DEL					
보건·사회복지부	125,279	134,184	181,441	183,548	176,631
교육부	70,443	80,861	76,822	74,605	68,795
내무부	11,226	11,870	15,061	14,959	17,602
법무부	8,035	8,302	9,164	9,376	10,100
법무관실(LODs)	557	621	625	694	766
국방부	34,571	36,707	40,178	39,740	39,847
단일정보회계	2,541	2,779	2,717	2,926	3,263
외무·영연방, 국제개발부	9,606	10,585	9,918	7,603	7,425
주택 및 지역사회 평등부(DLUHC)-지방정부	4,834	8,572	20,907	21,262	11,772
주택 및 지역사회 평등부(DLUHC)-주택·지역사회	2,353	2,800	2,710	2,768	4,015
문화·미디어·스포츠부	1,658	1,809	3,096	1,829	1,945
과학·혁신·기술부	399	378	375	503	336
교통부	3,902	11,439	23,671	18,584	17,121
에너지안보 및 넷제로부	357	1,219	1,395	2,481	14,073
환경·식품·농림부	1,996	2,245	4,621	4,289	4,708
기업통상부	910	1,734	21,241	6,421	1,395
노동·연금부	5,966	5,883	6,661	8,972	8,696
세입관세청	3,939	4,257	4,809	5,698	6,329
재무부	247	355	321	403	311

구분	2018/19결산	2019/20결산	2020/21결산	2021/22결산	2022/23결산
내각부	613	685	1,411	1,234	828
스코틀랜드	16,495	17,736	31,037	28,557	25,780
웨일즈	14,011	12,859	18,623	16,252	16,253
북아일랜드	11,006	11,945	15,525	14,438	14,339
소규모 독립기관	1,513	1,735	2,448	2,485	2,468
총 경상비 DEL	332,457	371,561	494,778	469,629	454,799
부처별 경상비 AME					
보건·사회복지부	40,645	30,384	34,221	82,446	-15,504
교육부	22,739	23,753	24,099	20,806	-5,254
내무부	2,695	2,624	2,328	2,420	2,089
법무부	1,301	374	405	578	289
법무관실(LODs)	2	3	-1	1	4
국방부	594	6,908	8,617	17,498	-5,354
단일정보회계	22	21	-4	111	11
외무·영연방, 국제개발부	-69	-141	629	-116	490
주택 및 지역사회 평등부(DLUHC)-지방정부	21,188	18,370	16,704	8,526	11,101
주택 및 지역사회 평등부(DLUHC)-주택·지역사회	198	-176	-76	-862	1,518
문화·미디어·스포츠부	4,507	5,292	4,758	5,262	5,710
과학·혁신·기술부	360	530	303	515	255
교통부	7,456	1,827	1,439	3,454	4,711
에너지안보 및 넷제로부	-106,116	8,483	2,164	114,835	-81,594
환경·식품·농림부	-501	698	-612	433	-552
기업통상부	92	374	-10,395	-1	305
노동·연금부	180,877	190,782	212,378	216,030	230,471
세입관세청	40,232	40,622	116,524	52,123	33,930
재무부	-15,254	2,512	41,124	51,949	132,476
내각부	14,247	11,928	12,556	12,225	16,858
스코틀랜드	19,196	18,318	16,794	18,585	22,693
웨일즈	260	2,521	2,552	2,546	2,963
북아일랜드	9,753	9,477	10,469	10,753	11,567
소규모 독립기관	-94	-190	776	-240	-27
총 경상비 AME	244,330	375,293	497,750	619,877	369,156
총 경상비 예산	576,788	746,854	992,528	1,089,505	823,955

자료: 공공지출통계(Public Spending Statistics), 2023.7

- 같은 시기 정부의 자본지출 총예산은 134,208십억 파운드이며,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의 부처별 지출한도(DEL) 454십억 파운드, 연간관리지출(AME)는 961십억 파운드로 정부총지출 대비 1.05%(1,415 십억 파운드) 수준임

〈표 3-11〉 영국 부처별 자본지출 예산 추이(2018/19~2022/23 회계연도)

(단위: 십억 파운드/£ billion, %)

구분	2018/19결산	2019/20결산	2020/21결산	2021/22결산	2022/23결산
부처별 자본비 DEL					
보건·사회복지부	5,941	7,015	12,704	9,119	9,896
교육부	5,169	4,851	4,728	4,717	5,348
내무부	744	781	788	861	1,090
법무부	431	492	1,068	1,421	1,349
법무관실(LODs)	16	8	5	8	28
국방부	10,294	10,314	11,707	14,180	20,304
단일정보회계	607	637	580	906	1,157
외무·영연방, 국제개발부	3,246	2,184	2,871	1,750	2,141
주택 및 지역사회 평등부(DLUHC)-주택·지역사회	7,424	8,273	9,096	6,142	6,850
문화·미디어·스포츠부	366	583	951	488	454
과학·혁신·기술부	8,274	8,652	10,144	9,715	10,545
교통부	8,274	14,242	17,134	19,151	20,542
에너지안보 및 넷제로부	2,433	2,379	8,995	10,723	6,287
환경·식품·농림부	703	726	891	1,334	1,556
기업통상부	342	292	1,487	755	124
노동·연금부	334	81	468	626	450
세입관세청	349	335	542	662	556
재무부	104	139	8	12	7
내각부	57	36	232	153	424
스코틀랜드	3,872	4,260	5,230	5,224	6,199
웨일즈	2,037	2,131	3,297	2,939	2,791
북아일랜드	1,297	1,346	1,716	1,821	1,895
소규모 독립기관	247	400	274	316	319
총 자본비 DEL	62,562	70,159	94,917	93,022	100,312
부처별 자본비 AME					
보건·사회복지부	-5	-6	-7	-	25
교육부	17,106	20,982	21,144	21,863	24,823
내무부	-	-	-	-	0
법무부	-	-	-	11	5
법무관실(LODs)	-	-	-	-2	2
외무·영연방, 국제개발부	736	956	650	661	290
문화·미디어·스포츠부	453	1,326	278	250	961
과학·혁신·기술부	-71	-53	-57	-67	5
교통부	5,168	10	54	78	-164
에너지안보 및 넷제로부	-110	-118	-117	-122	-123
환경·식품·농림부	0	3	4	3	24
기업통상부	-131	34	19,718	-3,598	2,435

구분	2018/19결산	2019/20결산	2020/21결산	2021/22결산	2022/23결산
노동·연금부	135	309	146	30	70
세입관세청	0	0	0	0	0
재무부	-12,935	-2,064	-7,470	-3,779	3,084
스코틀랜드	787	1,171	777	893	1,005
웨일즈	698	803	889	954	906
북아일랜드	374	340	280	333	524
소규모 독립기관	426	308	1,109	457	26
총 자본비 AME	12,631	24,002	37,397	17,966	33,896
총 자본비 예산	75,192	94,162	132,314	110,987	134,208

자료: 공공지출통계(Public Spending Statistics), 2023.7

- 요컨대, 정부총지출 대비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의 경상지출은 0.93%, 자본지출은 1.05% 수준으로 모두 1% 내외의 소규모이며, 2022/23 회계연도의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은 모두 2018/19 회계연도(각각 1.07%, 1.09%) 대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지난 5년간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경상지출은 5.6%의 증가율을 보여 정부부처 전체의 총예산 증가율인 9.3%의 절반에 불과하며, 자본지출은 14.6%의 증가율을 보여 정부부처 총예산 증가율인 15.6%에 근접한 증가세를 보임

〈표 3-12〉 영국의 부처총예산 대비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예산(DEL)

(단위: 십억 파운드/£ billion, %)

구분	2018/19결산	2019/20결산	2020/21결산	2021/22결산	2022/23결산	연평균 증가율	
경상비 DEL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예산	6,165	7,101	7,854	7,091	7,655	5.6%
	전 부처 총예산	576,787	746,854	992,528	1,089,506	823,955	9.3%
	총예산 대비 비율	1.07	0.95	0.79	0.65	0.93	-3.4%
자본비 DEL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예산	819.0	1,909.0	1,229.0	738.0	1,415.0	14.6%
	전 부처 총예산	75,193	94,161	132,314	110,988	134,208	15.6%
	총예산 대비 비율	1.09	2.03	0.93	0.66	1.05	-0.8%

③ 지출항목별 구성

- 부처 예산의 세부 지출항목별 예산편성은 부처의 중점 투자 방향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지표가 되므로, 여기서는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예산의 세부 지출항목을 살펴보고자 함
-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예산의 세부 지출항목은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예술활동, 문화유산, 스포츠, 방송 및 미디어 분야의 활동영역(sector) 및 기관(ALBs)에 대한 지원과 기타 시민사회, 관광, 갬블링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됨

- 세출예산안(Main Estimates)에서는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의 세부 지출항목을 7개의 부문으로 재편하여 작성하는데, 이는 각각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예술 및 유산, 스포츠, 방송 및 미디어, 시민사회, 기타(관광 등), 디지털 UK 등임
-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 예술 및 유산이며, 2022/23 회계연도부터는 영국 정부의 새로운 비전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디지털UK 예산이 새롭게 추가됨

〈표 3-13〉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세부 지출항목별 구성(2018/19~2022/23 회계연도)

(단위: £ million)

세부부문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연평균 증가율
박물관·미술관·도서관	557.4	575.5	557.1	553.0	625.6	2.93%
예술 및 유산	486.5	496.2	489.9	631.4	586.6	4.79%
스포츠	141.1	137.6	198.1	323.4	491.8	36.64%
방송 및 미디어	78.0	101.8	172.7	162.2	117.6	10.81%
시민사회	294.0	316	248.6	102.1	111.4	-21.54%
기타(관광 등)	123.0	142.9	189.4	239.4	270.9	21.82%
디지털UK	0	0	0	0	41.1	-
경상비 DEL	1,680.0	1,770.2	1,855.8	2,011.4	2244.9	7.52%
박물관·미술관·도서관	123.8	94.6	87.5	117.5	186.7	10.82%
예술 및 유산	60.0	47.3	92.7	183.7	103.5	14.60%
스포츠	42.8	43.3	45.2	215.2	107.6	25.92%
방송 및 미디어	358.6	470.1	387.3	390.3	97.4	-27.81%
시민사회	0.0	-	3.7	30.0	95.0	-
기타(관광 등)	311.0	0.2	13.4	81.8	58.0	-34.28%
디지털UK	0	0	0	0	182.6	-
자본비 DEL	585.0	655.5	629.8	1,018.5	830.9	9.17%

자료: UK Parliament(2022), 세출예산안(Main Estimate memorandum 2022-23)

④ 세부부문별 구성

-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의 세부지출 항목을 문화예술(콘텐츠), 체육, 관광, 문화재로 구분하여 한국의 세부부문별 편성 규모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함

〈표 3-14〉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세부부문별 분류 기준

구분	세부내역		
문화예술	- 박물관 및 갤러리 지원 - 박물관 및 갤러리 ALB 후원 - 도서관 ALB 후원	- 예술분야 지원 - 예술 및 문화 ALB 후원 - 디지털, 방송, 미디어 부문 지원	- 방송 및 미디어 ALB 후원 - 페스티벌(버밍엄 2022 등) - 디지털 UK
체육	- 스포츠 부문 지원	- 스포츠 ALB 후원	- 올림픽 프로그램
문화재	- 문화유산 지원	- 문화유산 ALB 후원	
관광	- 관광 ALB 후원		
문화 및 관광 일반	- 관리 및 연구 - 경마 및 도박 부문 지원	- 도박위원회 - 시민사회 사무소	- 국민서비스

-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예산의 세부내역을 재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2022/23 회계연도 기준 경상 지출, 자본지출 모두 문화예술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각각 70.9%, 62.3%), 체육(각각 7.8%, 12.0%), 관광(각각 4.4%, 6.4%) 순으로 나타남

〈표 3-15〉 영국 문화재정의 세부부문별 구성비

(단위: 십억 파운드/£ billion, %)

구분		세부부문별 규모					세부부문별 비율				
		18/19	19/20	20/21	21/22	22/23	18/19	19/20	20/21	21/22	22/23
경상 지출	문화 예술	982,657	1,055,755	1,934,215	1,393,295	1,592,328	59.2	62.5	62.2	69.9	70.9
	체육	147,261	147,265	319,658	205,972	175,744	8.9	8.7	10.3	10.3	7.8
	문화재	68,320	51,654	37,725	49,078	39,848	4.1	3.1	1.2	2.5	1.8
	관광	130,967	122,975	246,321	150,973	98,123	7.9	7.3	7.9	7.6	4.4
	문화및관광 일반	329,288	312,365	573,883	194,004	338,839	19.9	18.5	18.4	9.7	15.1
자본 지출	문화 예술	291,198	460,273	591,277	369,046	517,358	79.5	83.6	63.2	56.4	62.3
	체육	48,347	46,021	158,340	135,483	107,567	13.2	8.4	16.9	20.7	12.9
	문화재	693	365	2179	1343	2475	0.2	0.1	0.2	0.2	0.3
	관광	23871	40856	178664	152573	52801	6.5	7.4	19.1	23.3	6.4
	문화및관광 일반	2,056	3,180	5,443	-4,070	150,714	0.6	0.6	0.6	-0.6 ²⁾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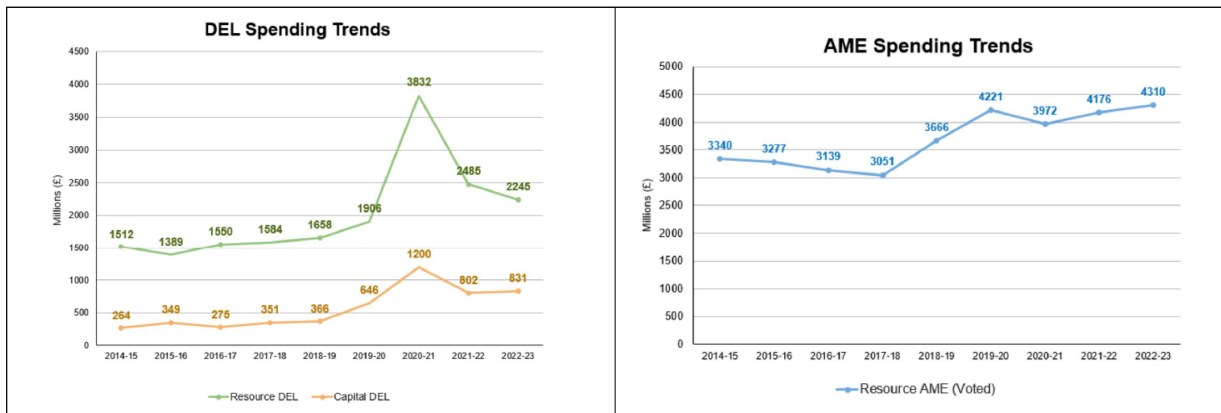
주 1)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예산서 중 부처별지출한도(DEL) 중심으로 각각의 비율을 산정함

2) 비율의 감소는 2021/22 회계연도의 관리 및 연구 예산 삭감(-10,878) 때문임

3. 소결

- 영국은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문화, 체육, 관광분야 활동영역 및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2020/21 및 2021/22 회계연도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예산을 확대한 바 있고, 2022/23 회계연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지출을 삭감할 계획임을 발표, 실제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22/23 회계연도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세출예산안(Main Estimates)을 보면 경상지출 DEL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문화회복기금, 생산활성화계획(Production Restart Scheme), 스포츠 서바이벌 패키지 등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편성되었던 일회성 자금이 중단되었기 때문임
- 자본지출 DEL은 소폭 증가하였는데 경상지출과 마찬가지로 자본지출 부문의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일회성 자금 지원은 중단됐지만, 부처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이 확대되어 감소분이 상쇄됐기 때문임

[그림 3-1]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부처별 지출한도(DEL)와 연간관리지출(AME) 예산 추이



자료: UK Parliament(2022), 세출예산안(Main Estimate memorandum 2022-23)

- 한편,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의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 Accounts)에 따르면 부처의 주요 우선순위는 2020년도 지출검토(Spending Review 2020)와 2021/22 성과이행계획(2021-22 Outcome Delivery Plan)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각각 디지털 연결성을 통한 경제성장,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영역의 성장 지원,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의 혁신성장 촉진, 지역사회 및 청년들의 참여불평등 해소 등임
- 이러한 우선순위 이행을 위해 영국은 다양성과 포용성 전략을 통해 다양한 인력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Lavelling Up), 국가의 Net-zero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영국 문화정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영역은 디지털 연결성(digital connectivity)에 관한 것으로 2022년 3월 온라인안전법률(Online Safety Bill)이 통과됐고, 2022년 6월 「영국 디지털 전략(UK's Digital Strategy)」이 수립 및 발표됨

- 영국 디지털 전략의 6대 핵심 영역은 디지털 기반(디지털 인프라, 데이터, 규제 및 시장, 보안 등), 아이디어 및 지식재산, 디지털기술 및 인재(디지털 교육 강화 등), 디지털 성장자금, 공공서비스·지역균형발전(Leveling up)·Net-zero 등 번영, 국가의 위상 강화 등이며, 디지털UK 추진을 위한 예산이 2022/23 회계연도부터 새롭게 편성됨
-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전반적으로 디지털 혁신에 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2023/24 회계연도 예산서에서 청소년투자기금(Youth Investment Fund) 9,700만 파운드, 지역사회산업(Voluntary Community and Social Enterprise, VCSE) 1,000만 파운드가 증액되어 청소년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도 강조하고 있었음
- 요컨대, 영국의 문화재정은 10대 기능별 세출 기준에서 여가문화종교 재정의 규모가 1.21%를 차지하고, 정부부처 총예산 대비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예산은 0.93%(경상지출), 1.05%(자본지출)를 차지함
- 세부부문별로 살펴보면 경상지출과 자본지출 모두 문화예술(경상 70.9%, 자본 62.3%), 문화 및 관광 일반(경상 15.1%, 자본 18.1%), 체육(경상 7.8%, 자본 12.9%), 관광(경상 4.4%, 자본 6.4%), 문화재(경상 1.8%, 자본 0.3%)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았음

제4절 프랑스

1. 문화행정체제

1) 프랑스 문화부(Le Ministère de la Culture)

- 프랑스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준대통령제 또는 이원정부제로 불리는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¹⁹⁾ 내각은 총리, 중앙부처 장관, 국무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프랑스의 정부조직은 내무부, 환경부, 법무부, 유럽외교부, 국방부, 경제재정부, 문화부, 노동부, 국가교육부(국가교육청소년스포츠), 농림부, 고등교육부(고등교육연구혁신), 해외영토부 등으로 구성됨
- 문화행정 업무는 문화부(Le Ministère de la Culture)에서 소관하며 건축, 회화, 조각, 판화, 음악, 무용, 서커스, 거리예술, 영화, 연극, 오페라, 아르데코, 문화유산 관련 일체의 업무를 관리·감독함
 - 문화부 창설 전까지 문학, 회화, 건축 등 순수예술과 문화재, 공연예술, 영화 등 문화예술 전반의 정책 및 예산집행은 교육부에서 담당함
 - 문화부 주요 임무에 관한 법령²⁰⁾에서 문화부의 목적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의 문화유산 및 창작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프랑스 문화부는 1959년 샤를 드 골(Charles de Gaulle) 정권 당시 작가이자 정치인이었던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에 의해 세계 최초로 창설되었고, 이후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1997년부터 2017년까지 문화부 공식 명칭은 문화통신부(Le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였으나, 현재는 다시 문화부(Le Ministère de la Culture)라는 이름을 사용
- 문화부 산하에는 크게 총사무국(SG), 문화유산 및 건축 사무국(DGPA), 예술창작국(DGCA), 미디어 및 문화산업국(DGMIC), 전승과 국토 그리고 문화민주주의를 담당하는 심의회(DG2TDC), 프랑스어심의회(DGLFLF)를 두고 있음²¹⁾

19) 이러한 프랑스의 국가형태는 1958년 제정된 「제5공화국 헌법」에 근거한 것이며(박종준, 2017), 이원정부제 하에서 대통령은 정치적 권한을 보유하지만 행정권은 총리 휘하의 행정부에 속하는 특징을 보임(김동욱, 2018)

20) 문화부 장관의 권한에 대한 시행령(Décret n° 2017-1077 du 24 mai 2017 relatif aux attributions du ministre de la culture)

21) 문화부 산하 조직의 원문은 다음과 같음. 총사무국(Secrétariat Général, SG), 문화유산 및 건축 사무국(Direction générale des patrimoines et de l'architecture, DGPA), 예술창작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création artistique, DGCA), 미디어 및 문화산업국(Direction générale des médias et des industries culturelles, DGMIC), 전승과 국토 그리고 문화민주주의를 담당하는 심의회(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transmission, aux territoires et à la démocratie culturelle, DG2TDC), 프랑스어심의회(Délégation à la langue française et aux langues de France, DGLFLF)

- 그 중 문화민주주의를 담당하는 심의회(DG2TDC)는 프랑스 문화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방향인 '문화민주주의'를 위원회의 이름으로 내걸고 2021년 1월 새롭게 발족한 것임
- 또한, 부처 신하에는 윤리위원회, 과학기술 및 산업 문화위원회, 국립고고학연구위원회, 문화예술교육고등평의회²²⁾, 예술품목록관리위원회, 총괄 감사단 등 15개 자문단 및 위원회가 존재함

2. 문화재정 운용

1) 국가재정 일반현황

- 회계연도
 - 프랑스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국과 동일함
- 예산과정
 -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매년 예산법(Projet de loi de finances, PLF)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예산을 집행함
 - 예산의 편성은 재무부에서 3개년 중기재정계획을 고려한 예산편성 방향을 수립하고, 각 부처 장관들과 논의 후 예산상한선을 확정 후 각 부처 장관들에게 예산편성지침(letters de cadrage)을 시달함
 -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의회의 공공재정정책 토론회를 거친 후 재무부는 부처간 조정된 예산안을 국회평의회에 제출, 의회 승인 후 대통령 최종 승인을 받아 예산법이 제정됨(국회예산정책처, 2020)
- 재정구조
 - 예산은 일반예산(budget général), 부속예산(budgets annexes),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세출은 정책미션별 32개로 구분하고 각 미션 하위에 프로그램 단위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함
 - 세출 기준이 되는 미션은 연도마다 31~33개로 유동적인데, 2023 회계연도 현재는 32개로 운용되고 있음
 -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2021년에는 한시적으로 보건 위기대응 비상계획을 하나의 미션으로 상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기도 함
- 예산서
 - 프랑스는 최소 3년 간의 중기재정계획을 법률안 형태인 중기재정계획법(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LPPF)으로 제정하며, 가장 최근에는 2022년 말 재정된 2023~2027 중기재정계획법이 있음²³⁾
 - 또한 매년 정부예산안인 예산법(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PLF)을 제정하고 코로나19 등 예산운용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수정예산법(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PLFR)을 제정함
 - 본 연구에서는 각 년도 예산법(PLF) 자료와 관련한 재무부의 보도자료 및 요약자료를 참고하였고, 프랑스 공공재정 데이터베이스인 공공재정플랫폼²⁴⁾을 통해 미션별, 부처별 세출 현황을 파악함
 - 프랑스 문화부의 세부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문화부에서 발표하는 예산자료를 참고하였음²⁵⁾

22) 문화예술교육고등평의회(Haut Conseil de l'é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 HCEAC)의 경우 교육 내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논의를 하기 때문에 문화부, 교육부, 청소년부, 체육부 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는 협의체로서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음

23) 2023~2027 중기재정계획법에 관한 정부자료는 다음을 참고 <https://www.vie-publique.fr/loi/286456-loi-programmation-des-finances-publiques-lpfp-2023-2027>

24) 프랑스의 공공재정플랫폼은 다음을 참고. <https://www.budget.gouv.fr/>

2) 문화재정 현황

① 기능별 세출의 문화재정

- 프랑스는 정책의 미션에 따라 세출을 구분하며, 문화재정은 32개 미션 중 문화(Culture), 언론(Médias, livre et industries culturelles), 체육(Sport, jeunesse et vie associative)에 산재되어 있음
 - 프랑스 문화부는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나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처럼 관광과 체육이 업무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부 예산서 상 주요 항목이 문화민주화(문화향유), 문화유산, 창작(예술지원), 도서 및 문화산업, 언론 및 미디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 기준, 32개 미션별 총지출(385.5 십억 유로) 대비 문화부문 지출(3.5십억 유로) 비율은 0.9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문화를 포함한 언론(0.7십억 유로), 체육 및 건강·청소년지원(1.8십억 유로) 미션의 예산을 합산하여 살펴보면 1.56% 수준으로 규모가 증가함

〈표 3-16〉 프랑스 미션별 세출예산 추이(2019~2023)

(단위: 십억 유로/Md€)

미션별 세출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규모	순위	
외교	2.7	2.7	2.8	2.9	3.1	20	3.5%
일반공공행정	2.7	3.2	3.5	3.6	3.7	15	8.2%
농업·임업·수산업	2.7	2.7	2.8	3.1	3.6	17	7.5%
정부개발원조	3.1	3.3	3.9	5.1	5.9	12	17.5%
퇴역군인지원	2.3	2.2	2.1	2.1	1.9	24	-4.7%
정부위원회 및 행정재판	0.5	0.6	0.6	0.6	0.7	30	8.8%
예비비	0.2	0.1	0.3	0.5	1.9	24	75.6%
문화	2.7 (1.09%)	2.8 (1.07%)	3.0 (0.99%)	3.3 (0.95%)	3.5 (0.91%)	18	6.7%
국방	35.9	37.5	39.2	40.9	43.9	3	5.2%
국가정책방향	0.7	0.8	0.8	0.9	0.9	29	6.5%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	11.5	17.7	19.2	20.6	26.5	6	23.2%
경제	1.7	2.1	2.5	4.1	3.7	15	21.5%
정부재정관리·부채관리·국채발행 등	0.4	0.4	2.8	44.3	60.2	1	250.3%
학교교육	52.3	53.3	54.9	56.5	60.2	1	3.6%
공공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예산 및 공공개혁 관련 정책	7.7	7.6	7.5	7.4	8	10	1.0%
이민 및 통합정책	1.7	1.8	1.8	1.9	2	23	4.1%
미래를 위한 투자	1	2.1	4	7	6.1	11	57.2%

25) 프랑스 문화부의 2023년도 예산안은 *Budger 2023 du ministère de la Culture*를 참고함

미션별 세출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규모	순위	
정의/법무부	7.3	7.6	8.2	8.9	9.6	9	7.1%
언론	0.6	0.6	0.6	0.7	0.7	30	3.9%
프랑스령 국가들에 대한 지원	2.5	2.3	2.4	2.1	2.4	22	-1.0%
의회·헌법위원회 등	1	1	1	1	1.1	27	2.4%
R&D 및 고등교육	27.9	28.4	28.2	29.1	30.6	4	2.3%
복지 및 은퇴자 지원	6.3	6.2	6.2	6	3.1	20	-16.2%
프랑스 활성화	-	0	21.8	13	4.4	13	-
지방재정지원	3.4	3.5	3.9	4.3	4.4	13	6.7%
보건의료	1.4	1.1	1.3	1.3	3.4	19	24.8%
치안	13.6	13.7	13.9	14.7	15.8	8	3.8%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	23.7	26.1	26.1	27.7	29.8	5	5.9%
체육 및 건강·청소년 지원	1	1.2	1.3	1.7	1.8	26	15.8%
공공부문 개혁	-	0.6	0.7	0.8	1.1	27	-
노동 및 고용	12.3	12.8	13.4	14.5	20.7	7	13.9%
보건 위기 대응 비상계획(Plan d'urgence face à la crise sanitaire) ¹⁾	-	0	6	-	-	-	-
공공정책변화	0.3	-	-	-	-	-	-
합계	247.5	261.1	302.6	347.8	385.5	-	11.7%

자료: 프랑스 재무부(각 년도), 예산안 보도자료(Dossier de presse-Projet de loi de finances, DP PLF)

- 2023년도 문화(3.5십억 유로), 언론(0.7십억 유로), 체육 및 건강·청소년지원(1.8십억 유로) 예산은 규모적 측면에서 2019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지만 문화와 언론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6.7%, 3.9%로 정부총지출의 증가율(11.7%)보다 낮아 실제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임(<표 3-17>)
- 정부총지출 대비 문화, 언론, 체육 및 건강·청소년지원 예산 비율은 2019년 1.74%에서 2023년 1.56%로 감소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7%임

<표 3-17> 프랑스 미션별 문화 관련 세출예산 추이(2019~2023)

(단위: 십억 유로/Md€)

세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정부총지출	247.5	261.1	302.6	347.8	385.5	11.7%
문화	2.7 (1.09%) ¹⁾	2.8 (1.07%)	3.0 (0.99%)	3.3 (0.95%)	3.5 (0.91%)	6.7%
언론	0.6	0.6	0.6	0.7	0.7	3.9%
체육 및 건강·청소년 지원	1.0	1.2	1.3	1.7	1.8	15.8%
비율	1.74% ²⁾	1.76%	1.62%	1.64%	1.56%	-2.7%

주 1) 정부총지출 대비 '문화' 미션 예산에 대한 비율임

2) 정부총지출 대비 문화, 언론, 체육 및 건강·청소년지원 예산의 합계에 대한 비율임

자료: 프랑스 재무부(각 년도), 예산안 보도자료(Dossier de presse-Projet de loi de finances, DP PLF)

② 부처의 문화재정 규모

- 프랑스의 문화행정 전담부서는 문화부이므로, 여기서는 프랑스 정부부처 총예산 대비 문화부 예산의 비율을 살펴보고자 함
- 2023 회계연도 기준으로 프랑스 정부부처 총예산은 787십억 유로이고, 문화부 예산은 4.4십억 유로로 총예산 대비 비율이 0.56%로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18〉 프랑스 정부부처 예산 추이(2019~2023)

(단위: 십억 유로/Md€)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재무부/산업부/디지털부	54.2	77.9	285.0	410.4	444.9
교육 및 청년부	71.9	73.2	75.8	77.9	81.6
국방부	47.2	48.9	49.7	51.5	55.1
생태적 전환 및 영토 결합부	31.0	32.9	44.1	45.5	39.9
내부무 및 외교부	26.0	26.6	27.1	28.2	32.4
	2.4	2.3	2.4	2.5	
고등교육연구부	24.8	25.5	24.1	24.8	25.9
노동/고용/통합부	15.9	32.5	13.4	13.4	23.4
총리실	15.3	16.9	18.4	18.8	20.9
연대/자유/장애인부	-	-	-	-	15.8
보건예방부	14.0	17.6	14.9	15.6	3.4
법무부	8.9	9.2	10.1	10.7	11.6
유럽외교부	4.8	5.1	5.4	6.0	6.7
농림축산식품부	4.8	4.8	4.9	5.0	6.0
문화부	3.6 (0.68%)	4.4 (0.74%)	3.8 (0.65%)	4.1 (0.57%)	4.4 (0.56%)
스포츠/올림픽/패럴림픽	0.4	0.6	-	-	1.0
변화 및 공공서비스	-	-	0.4	0.5	0.6
활동 및 공개계정	183.2	196.7	-	-	-
영토응집력 및 지방당국과의 관계	21.0	21.9	5.3	5.6	-
에너지 전환부	-	-	-	-	13.8
부처별 총예산	530.0	597.0	586.0	722.0	787.0

주 1) CP(지불예산) 기준임. 이는 투입승인(AE) 한도 내에서 체결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출상한책임(김은경, 2012)

2) 공공재정플랫폼의 예산에서 단위 조정을 위해 절사한 것으로 부처별 총예산 규모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프랑스 공공재정플랫폼(<https://www.budget.gouv.fr/>)

- 〈표 3-16〉, 〈표 3-17〉에서 2023년도 문화부분 미션의 예산은 3.5십억 유로로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 문화부의 예산은 그보다 조금 큰 4.4십억 유로로 집계된 것을 알 수 있음²⁶⁾
- 참고로 2022년 가을에 발표된 2023년 문화부 예산 초안에서는 2023년 문화부 예산이 약 42억 유로로

2022년에 비해 2억 7,100만 유로(7%) 증가할 계획임을 발표함

- 이는 프랑스의 문화재정이 문화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와의 협력 등을 통해서도 조성되기 때문임
 - 예를 들어, 2022년 프랑스 타 부처에서 지출한 문화 관련 소요 예산은 52억 유로에 달하며 이 중 56%가 교육부에서 지출한 금액임
 - 이처럼 프랑스는 문화부 외 부처라 하더라도 유사 문화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거나 프랑스 문화를 보급 및 교류하는 행사를 주최한다면 문화재정을 운용할 수 있으며, 외교부에서도 유럽연합 내 문화, 언어, 학술 및 과학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여 문화재정 예산의 일부를 차지함
- 따라서 프랑스는 문화부 예산안을 발표하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타 부처 예산의 규모를 함께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처간 협력과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시도함

〈표 3-19〉 프랑스 문화부 재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타부처 예산

(단위: 백만 유로/en millions d'euros)

부처명	2019	2020	2021	2022	2023
농림부	34,17	34,60	32,20	33,10	34,60
국방부	97,10	119,92	102,19	105,49	121,37
환경과 국토부	125,55	142,26	153,82	156,94	141,81
문화부	3,633,09	4,417,78	4,580,54	4,135,56	4,419,88
경제재정부	117,90	109,73	150,37	43,11	53,10
국가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부	2,648,81	2,842,18	2,915,10	2,854,28	2,981,40
고등교육, 연구 및 혁신부	602,78	617,85	617,30	597,42	614,03
유럽외교부	727,96	805,88	763,81	790,66	803,00
내무부	5,51	5,36	4,66	6,16	6,71
법무부	9,24	17,05	34,50	41,13	84,22
해외영토부	2,96	3,50	6,58	8,00	7,96
총리실	1,55	1,36	2,85	4,35	7,80
추가예산	0,38	0,35	0,35	0,35	0,35
총 일반예산	8,006,92	9,117,47	9,364,23	8,776,55	9,276,29

주 1) CP(지불예산) 기준임

2) 2019~2021년 집행액(Exécution) 기준, 2022년 LFI 기준, 2023년 PLF 기준임

3) 문화부 재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 정부지출 중 부처 예산만 발제한 자료임(공공방송, 조세지출은 제외)

자료: 프랑스 의회(각 년도), 예산안 발표자료(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 Culture)

③ 지출항목별 구성

- 부처의 세부 지출항목은 부처의 중점 투자 방향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지표이므로 여기서는 프랑스 문화부 예산의 세부 지출항목을 살펴봄
- 프랑스는 프로그램 예산제를 도입하고 있어 프로그램(programme)—실행(action) 단계별 예산 확인이 가능하며, 문화부의 주요 프로그램은 문화민주화(문화향유), 문화유산, 창작(예술지원), 도서 및 문화산업, 언론 및 미디어 등으로 확인됨
- 프로그램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유산과 창작에 배정된 예산이 가장 많고, 2021년 이후 문화부 정책지원 예산도 크게 확대되었음

〈표 3-20〉 프랑스 문화부의 프로그램 단위 예산편성 현황(2019~2023)

(단위: 억 유로)

프로그램 ¹⁾	2019	2020	2021	2022	2023
문화유산 (프로그램 175)	9	10	10	10	11
창작 (프로그램 131)	8	8	9	9	10
문화부 정책지원 (프로그램 224)	1	1	8	8	8
지식전승 및 문화민주화 (프로그램 361)	13	12	6	7	8
언론과 미디어 (프로그램 180)	3	3	3	4	4
책과 문화산업 (프로그램 334)	3	3	3	3	3
총계	40	37	38	41	44

주 1) CP(자불예산) 기준임

2) 문화부 프로그램 예산의 규모가 작아 단위를 십억 유로에서 억 유로로 조정함

자료: 프랑스 공공재정플랫폼(<https://www.budget.gouv.fr/>)

-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프랑스는 문화부 외에도 스포츠부, 외교부, 재무부 등에서 문화활동 관련 지출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문화부 외의 예산을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램 단위별로 타 부처의 예산편성 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각 부처별로 편제되어 있는 문화활동 관련 지출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3-21〉과 같음

〈표 3-21〉 프랑스 문화부 및 타 부처의 프로그램 단위 예산편성 현황(2019~2023)

(단위: 십억 유로)

부처	프로그램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경제재정부	프랑스 텔레비전	2.5	2.5	2.4	2.4	2.4	-1.0%
	프랑스 라디오	0.6	0.6	0.6	0.6	0.6	0.0%
	아르떼 프랑스	0.3	0.3	0.3	0.3	0.3	0.0%
	프랑스 미디어월드	0.3	0.3	0.3	0.3	0.3	0.0%
	국립시청각연구소	0.09	0.09	0.09	0.09	0.09	0.0%
	TV 5	0.08	0.08	0.08	0.08	0.08	0.0%
유럽외교부	문화 및 외교 영향력	0.7	0.8	0.7	1.21	0.7	0.0%
문화부	지식의 전승과 문화민주화	1.2	1.2	0.6	0.7	0.8	-9.6%
	유산	0.9	1.1	1.0	1.0	1.1	5.1%
	창조	0.8	0.9	0.9	0.9	1.0	5.7%
	책과 문화산업	0.3	0.7	0.3	0.3	0.3	0.0%
	언론과 미디어	0.3	0.4	0.3	0.4	0.4	7.5%
	문화부 정책지원(문화연구)	0.1	0.1	0.8	0.8	0.8	68.2%
국가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부	스포츠	0.3	0.4	0.4	0.5	0.7	23.6%
	2024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	0.07	0.1	0.2	0.3	0.3	43.9%
총계		8.54	9.57	8.97	9.88	9.87	3.7%

④ 세부부문별 구성

- 프랑스 문화재정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재편하여 비교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문화부, 스포츠부, 외교부, 재무부의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단위 예산을 정리한 〈표 3-21〉를 토대로 문화예술(콘텐츠), 체육, 관광, 문화재로 구분함(〈표 3-22〉)

〈표 3-22〉 프랑스 문화재정의 세부부문별 분류 기준

구분	세부내역
문화예술	- (경제부) 프랑스 텔레비전
	- (경제부) 프랑스 라디오
	- (경제부) 아르떼 프랑스
	- (경제부) 프랑스 미디어월드
체육	- (체육부) 스포츠
	- (체육부) 2024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문화재	- (문화부) 유산
관광	-
문화 및 관광 일반	- (문화부) 정책지원(문화연구)

주) 관광부문 재정은 2018년까지 경제부의 사업개발 프로그램 내 실행(action) 단위에서 관광(tourism)이 확인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확인 어려움

- 대부분의 프로그램 단위가 문화예술로 분류되어, 문화예술, 문화재, 체육으로 구분했을 때 문화예술의 비율이 70.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문화재에 대한 비중(11.1%)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스포츠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는데(4.3%→10.1%) 이는 2024년 예정된 프랑스 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한 공공재정 지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23〉 프랑스 문화재정의 세부부문별 구성비

(단위: 십억유로, %)

구분	세부부문별 규모					세부부문별 비율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문화예술	7.17	7.87	6.57	7.28	6.97	84.0%	82.2%	73.2%	73.7%	70.6%
체육	0.37	0.50	0.60	0.80	1.00	4.3%	5.2%	6.7%	8.1%	10.1%
문화재	0.90	1.10	1.00	1.00	1.10	10.5%	11.5%	11.1%	10.1%	11.1%
관광	0.00	0.00	0.00	0.00	0.00	0.0%	0.0%	0.0%	0.0%	0.0%
문화 및 관광 일반	0.10	0.10	0.80	0.80	0.80	1.2%	1.0%	8.9%	8.1%	8.1%

3. 소결

- 프랑스 문화부의 정책 기조는 앙드레 말로가 주장한 ‘모두를 위한 문화(la Culture pour chacun, la Culture pour tous)’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민주화’ 정책을 따름
 - 문화민주화의 핵심은 프랑스 국민이라면 나이, 신분, 지역, 교육 수준, 장애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문화예술 시설 및 정보, 지식에 장벽 없이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2021년에는 문화민주화에 대한 전범위적 지원을 위해 2021년 ‘전승과 국토 그리고 문화민주주의를 담당하는 심의회(DG2TDC)’를 새롭게 조직하기도 하였음
- 문화부 예산에서도 문화민주화 정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361(지식전승과 문화민주화) 단위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언어(프랑스어) 보급, 고등교육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함
 - 프로그램 361의 대표 프로그램인 ‘컬처패스’는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민주주의 심의회(DG2TDC)가 교육부와 협력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2년 기준 문화부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문화민주주의 심의회(DG2TDC) 예산 1억 7천만 유로 중 컬처패스 예산은 1억 4천만 유로임
- 프랑스 문화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컬처패스 등 문화민주화 예산 외 2022년도의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인한 변화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 및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 반영됨

- 코로나19로 인한 변화한 OTT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한 미디어 시청 태도의 변화, 문화시설 등의 방문보다는 집안에 머무는 시간의 증가 등 문화예술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을 말함
- 문화부 장관 리마 압둘 말라크(Rima Abdul Malak)은 2023년 문화정책 및 예산 방향을 발표하며 향후 주목해야 하는 사항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 새로운 세계-행동 프로젝트, 미디어 및 신기술을 활용한 프랑스 콘텐츠의 보급 등을 크게 세 가지로 언급함
- 첫째,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관련으로 2023년부터 기존의 컬처패스(Pass Culture) 프로그램을 유지 및 예산을 확대하고 컬처패스에서 발전된 형태의 프로그램인 '100% EAC'²⁷⁾를 시행하여,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창작활동 장려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 증진의 목적으로 수행함²⁸⁾
- 문화부는 100% EAC 프로그램에 1억 4백만 유로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며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 문화예술교육최고위원회(HCEAC)는 지역문화사업국(DRAC)²⁹⁾과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임³⁰⁾
- 2023년도 문화부의 컬처패스 프로그램 예산은 전년 대비 9만 유로가 늘어난 208만 유로가 소요될 예정임
- 컬처패스 관련하여 국가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부에서도 일부 예산을 소요하고 있고(2023년도 총 5백만 유로), 민간파트너 기부금으로도 900만 유로가 투자될 것으로 추정함
- 둘째, 새로운 세계-행동 프로젝트에 관한 것으로, 프랑스는 문화주권을 공공히 하기 위해 창작 지원과 신기술 확립, 그리고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을 활용한 프랑스어 확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함
- 2021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세계-행동1(Mondes nouveaux-Acte1)'은 예술가들이 지역 주민들 곁으로 가 특정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인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간 총 3천 만 유로의 예산이 책정되었을 정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임
- 문화부는 2023년에 '새로운 세계-행동2'를 기획하고, 특히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조 및 인프라 개발을 주요로 하는 '프랑스 2030'에 2030년까지 총 1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 더불어, 여러 미디어 플랫폼 및 산업 확산으로 인해 언어 사용이 약화됨에 따라 문화부는 문화를 통해 언어의 고유성을 보존하고 프랑스어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방법을 고안하고 있음
- 셋째,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TV, 애플TV 등 OTT 플랫폼의 비약적인 성장과 영향력에 따라, 미디어 및 신기술을 활용한 프랑스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보급할 계획임
-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 루브르 박물관의 작품들을 관람하거나 파리 오페라의 공연을 이머시브 관람 형태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그 예시임
- 문화부는 영화, 드라마 시리즈 등 영상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 목적으로 프랑스 공영 방송국이 2021년부터 연간 5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음

27) EAC는 문화예술교육(E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의 축약어임

28) 컬처패스(pass Culture)는 만 15세부터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연간 최소 20 유로에서 최대 30유로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회원권임, 청소년은 프랑스 영토 내 존재하는 문화예술 기관 중 컬처패스에 등록된 곳을 무제한으로 방문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전자도서 대여 및 영화 관람 등이 가능함(박다솔 자문의견 참고)

29) 지역문화사업국(DRAC)는 프랑스의 지방 행정 단위인 광역(레지옹, Région), 중역(데파르트망, Département), 기초(코뮌, Commune) 중 광역으로 구분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함

30) 2017년 대비 2023년의 문화예술교육 예산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DRAC과 교육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이뤄짐

- 이 외에도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프레스탈리(Presstalis)의 파산을 계기로 언론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업의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2022년 대비 1739만 유로(+9.4%)를 추가로 확보해 언론사의 우편요금 시스템을 정비하고 금액을 보조하기로 결정함
- 이 외에도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고갈 및 위기 대응에 관한 예산 편성(문화부 산하 문화시설 운영비 5,600만 유로 포함)과 함께, 2024년까지 공공기관의 에너지 소비량을 10% 감소시키겠다고 공표함
 - 문화부는 각 문화시설에 예술작품 세트의 재활용과 친환경 소재 사용, 문화 디지털 발자국을 감소시키기 위한 디지털 문화 개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적극 활용 등의 실행지침을 제시하기도 함
 - 탄소저감, 탈탄소화를 위해 문화부는 2023년에 총 6억 6,300만 유로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는 2022년에 비해 11% 증가한 금액임
 - 이 예산으로 문화시설의 에너지를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LED 조명 설치, 지붕 공사, 재활용 센터 지원, 이동식 구조물의 냉난방 시스템 정비, 문화시설 자재 및 폐기물 재활용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요컨대, 프랑스의 문화재정은 32개 미션별 총지출 대비 문화부문 미션 예산이 0.91%를 차지하고 문화, 언론, 체육 및 건강청소년 지원 예산이 1.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랑스 문화부 예산은 0.56% 수준임
 - 그러나 프랑스는 문화부 외 타 부처에서도 문화 관련 정책집행이 이뤄지므로 실제 문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문화부 외에도 적지 않을 것임
- 세부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70.6%), 문화재(11.1%), 체육(10.1%), 문화 및 관광 일반(8.1%)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았음

제5절 독일

1. 문화행정체제

1) 연방 문화미디어청(BKM)

- 독일은 연방 정부와 3개의 자치도시국가(Stadtstaat)를 포함한 16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공화국으로, 문화적, 경제적 분권화 구조가 오랜 전통으로 자리잡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각각 고유의 권한을 갖고 있음
 - 치안, 학교, 대학, 문화 및 지방행정에 대한 책임은 주정부에 있음
-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는 독일은 총리가 내각의 구성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일부 기능(외무, 내무, 재무, 법무, 국방)에 관한 부처의 구성은 연방기본법³¹⁾ 상에 규정되어 있음(김동욱, 2018)
 - 현재 경제에너지부, 외무부, 내무부, 법무소비자보호부, 재정부, 노동사회부, 식품농업부, 국방부, 가족노인연성청소년부, 보건부, 교통디지털기반부, 환경자연보존건축원자력안전부, 교육연구부, 경제협력개발부로 등의 내각 행정기관이 조직되어 있음
- 문화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는 없으나 총리실에 문화 및 미디어를 담당하는 연방 문화미디어청(BKM, 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Kultur und Medien)이 조직되어 있어, 개별 주정부의 소관 범위를 넘는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문화 및 미디어 업무를 담당함
 - 독일은 연방기본법상 문화정책을 지방정부(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규정하여 연방 내각에 문화정책 전담부처를 두고 있지는 않음
- 연방 문화미디어청(BKM)은 독일 연방의 문화분야 정부조직으로서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 영역을 전담하고 있고, 독일 문화분야의 주요 영역인 해외 문화정책(교육 포함) 업무의 상당 부분은 연방외교부(Auswärtiges Amt)에서 소관하고 있음
 - 관광업무는 연방경제기후보호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관할로 위탁을 받은 독일관광청(DZT, Deutsche Zentrale für Tourismus)에서 담당하고, 체육업무는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Heimat) 소속 체육국에서 담당함

31) 독일은 헌법을 연방기본법으로 명명함

2. 문화재정 운용

1) 국가재정 일반현황

- 회계연도
 - 독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1년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과 동일함
- 예산과정
 -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방재무부가 작성한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편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서를 작성·제출하면, 연방재무부에서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을 편성 및 연방내각회의(Kabinettsitzung)을 통해 수립, 수립된 예산안을 토대로 부처간 조정 후 예산집행 전년도 6월경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 확정에 대한 의결이 이뤄짐
- 재정구조
 - 독일 연방정부의 예산 및 결산의 세출은 기능별 세출과 일부 특별목적에 따른 부처별 개별플랜(Einzelplan)으로 구분함
 - 기능별 세출구조는 일반행정(국방 포함), 교육문화연구개발, 사회보장, 보건, 주택, 농업·임업, 산업·에너지, 교통통신, 재무행정 등 9개로 구분되고, 문화재정은 교육문화·연구개발 내 일부로 포함되어 있으며 체육은 보건의 일부, 관광은 산업·에너지의 일부로 편제되어 있음
 - 개별플랜으로 살펴보면 문화재정은 총리실 산하의 문화미디어청(BKM), 체육은 연방내무부 산하의 체육국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해외 문화정책에 관한 예산은 외교부에 나누어 편성되어 있어 문화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부처가 없는 국가의 특징을 보여줌
- 예산서
 - 독일은 중장기적인 연방예산의 총량관리를 위해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Mittelfristige Finanzplanung)을 수립하며 이에 근거하여 연간 연방예산을 편성함
 - 연방예산은 매년 재무보고서(Finanzbericht)를 통해 발표하며 공공재정의 예결산, 기능별 세출예산, 개별플랜 예산 등 국가재정통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연방예산플랫폼³²⁾을 통해 공개함
 - 본 연구에서는 재무보고서(Finanzbericht) 자료와 함께 연방예산플랫폼을 통해 독일 문화재정 현황을 검토하였음

32) 독일의 연방예산플랫폼은 다음을 참고. <https://www.bundeshaushalt.de/DE/Home/home.html>

2) 문화재정 현황

① 기능별 세출의 문화재정

- 독일은 9개의 기능별 세출 기준에 따라 연간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세출 상의 문화, 체육, 관광 부문을 살펴봄
- 독일 연방예산플랫폼에서 제공하는 9개 기능별 세출예산에서는 ‘교육·과학·연구·문화’ 분야 내 문화 영역 예산이 문화예산으로, ‘보건·환경·스포츠·여가’ 분야 내 스포츠 영역 예산이 체육예산으로, ‘에너지·수자원관리·산업·서비스’ 분야 내 관광 영역이 관광예산에 해당함
- 2023년 세출예산 기준으로 볼 때 교육·과학·연구·문화 예산은 총지출 대비 5.88%, 보건·환경·스포츠·여가 4.40%, 에너지·수자원관리·산업·서비스 1.98%임
 - 그러나 기능별 세출의 명칭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여러 기능들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세출기준에 따른 문화재정 산출을 순수한 문화활동에 대한 재정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독일은 문화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연방정부 수준의 부처가 부재한 국가로서 문화재정에 대한 예산 편성이 명확하지 않고 여러 기능에 편재되어 있는 특징을 보임

〈표 3-24〉 독일의 기능별 세출 추이(2019~2023)

(단위: 백만 유로)

기능별 세출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규모	순위	
사회보장·가족·청소년·노동 시장정책	177,132	218,365	281,132	253,716	214,182	1	4.9%
일반 공공서비스	88,153	95,479	100,399	108,785	108,722	2	5.4%
일반재정	34,317	50,219	89,907	31,019	55,435	3	12.7%
교통·통신	22,243	22,960	29,781	28,125	33,483	4	10.8%
교육·과학·연구·문화	23,825 (6.67%)	28,644 (6.46%)	28,985 (5.20%)	28,008 (5.82%)	28,007 (5.88%)	5	4.1%
보건·환경·스포츠·여가	2,967 (0.83%)	19,001 (4.29%)	16,959 (3.04%)	18,489 (3.84%)	20,979 (4.40%)	6	63.1%
에너지·수자원관리·산업·서비스	4,026 (1.13%)	5,509 (1.24%)	5,704 (1.02%)	8,795 (1.83%)	9,436 (1.98%)	7	23.7%
주택·토지관리·지역사회서비스	3,193	1,783	2,269	2,664	3,909	8	5.2%
식품·농업·임업	1,262	1,468	1,952	1,700	2,134	9	14.0%
총계	357,118	443,428	557,088	481,301	476,287	-	7.5%

주) 공공재정플랫폼의 예산에서 단위 조정을 위해 절사한 것으로 부처별 총예산 규모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연방예산플랫폼

② 부처의 문화재정

- 독일은 문화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 부재하고 총리실과 내무부에 문화미디어청(BKM)과 체육국 등 일부 기능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별 개별플랜(Einzelplan)을 통해 문화재정을 파악하기 어려움
- 따라서 문화와 체육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부처인 총리실과 내무부 예산 비중을 먼저 파악한 후, 총리실 및 내무부 예산을 구성하는 세부 편성내역을 통해 전담조직의 예산을 파악하고자 함
- 먼저 문화미디어청(BKM)이 소속되어 있는 총리실 예산은 정부총지출의 0.82%, 체육국이 포함되어 있는 내무부 예산은 전체의 2.75%인 것으로 확인됨
- 총리실과 내무부 예산의 세부 편성내역을 통해 각 조직의 예산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문화미디어청(BKM)의 예산으로 2023년에는 2,177백만 유로가 편성되어 있어 정부총지출의 0.46%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2023년 기준 체육국의 예산은 4백만 유로로 정부총지출의 0.001%로 소규모임

〈표 3-25〉 독일의 부처별 예산 추이(2019-2023)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노동사회부	143,276	159,176	175,130	168,508	166,229
국방부	43,117	46,114	47,237	50,598	50,117
일반조세행정	27,363	66,084	143,271	40,073	42,257
연방채무	12,695	6,995	4,608	15,735	42,178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부	29,111	30,324	37,209	35,839	35,579
보건부	15,332	36,266	48,437	65,474	24,483
교육연구부	17,462	19,541	19,760	20,035	21,462
경제기후부	7,576	8,780	7,849	9,587	14,567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10,517	14,594	12,974	12,373	13,569
내무부	14,390 (4.01%)	14,427 (3.23%)	16,184 (2.89%)	13,750 (2.84%)	13,092 (2.74%)
체육국	4 (0.001%)	4 (0.001%)	5 (0.001%)	4 (0.001%)	4 (0.001%)
경제협력개발부	10,180	12,311	13,384	13,820	12,156
재무부	6,971	7,503	8,424	8,527	9,669
외교부	5,811	6,388	6,647	7,964	7,475
주택도시개발 및 건설부	-	-	-	4,400	7,334
식품농업부	6,129	6,343	6,854	6,496	7,249
총리실	3,121 (0.87%)	4,215 (0.94%)	4,492 (0.80%)	3,866 (0.80%)	3,895 (0.81%)
문화미디어청	1,625 (0.45%)	2,740 (0.61%)	2,976 (0.53%)	2,080 (0.43%)	2,177 (0.46%)
환경, 자연보호, 원자력 안전 및 소비자보호부	2,012	2,251	2,444	2,027	2,449
연방하원	923	938	957	1,003	1,140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법무부	847	882	917	902	1,006
회계감사원	157	158	168	167	186
정보보호 및 자유를 위한 연방위원회	19	29	30	34	45
대통령실	42	41	41	44	44
헌법재판소	327	34	35	36	40
연방상원	27	26	27	32	39
독립통제협의회	-	-	1	4	16
총계	359,034	446,164	560,061	483,378	478,457

주) 공공재정플랫폼의 예산에서 단위 조정을 위해 절사한 것으로 부처별 총예산 규모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연방예산플랫폼

- 그러나 총리실 예산에서는 문화미디어청(BKM)에 대한 지출예산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총리실 예산(3,891백만 유로) 대비 문화미디어청(BKM) 예산(2,177백만 유로)의 비율이 55.96%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있음
- 참고로 문화미디어청의 예산은 주로 연방기록소, 동유럽 독일인 문화역사 연방연구소, 연방예술행정 등 산하기관의 운영, 국내 문화진흥, 프로이센 문화유산재단, 독일국제방송국 'Deutsche Welle' 지원 등 문화미디어청(BKM)이 소관하는 국내 문화정책 업무를 위해 사용함

〈표 3-26〉 독일의 총리실 예산 편성 추이(2019~2023)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문화미디어청	1,625 (52.06%)	2,740 (65.00%)	2,976 (66.29%)	2,080 (53.84%)	2,177 (55.96%)
정보국	954	904	941	1,044	1,030
언론정보실	113	121	103	161	142
구동독 보안 서비스 문서	101	98	95	4	15
연방 기록보관소	85	85	90	194	188
총리실	78	89	98	112	145
BKAmts 사업의 수입 및 지출	69	69	69	74	67
이민, 난민, 통합청	30	33	36	33	43
BKM 사업의 수입 및 지출	26	28	31	33	33
기타 허가	22	31	30	106	31
BPA 사업의 수입 및 지출	12	12	12	13	14
동유럽 독일인의 문화 및 역사를 위한 연구소	1	1	1	5	1
연방 예술청	-	-	1	2	3
총리실 예산	3,121	4,215	4,490	3,864	3,891

주) 공공재정플랫폼의 예산에서 단위 조정을 위해 절사한 것으로 부처별 총예산 규모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연방예산플랫폼

③ 지출항목별 구성

- 9개의 세출기준에 따라 문화, 체육, 관광예산이 포함된 세출항목의 세부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독일 문화재정의 규모를 확인하고자 함
- 먼저 교육·과학·연구·문화 계정 내 ‘문화와 종교(Kultur und Religion)’ 예산이 문화재정 범위에 포함되며, 하위 구성항목이 다른 두 개의 문화와 종교 부문을 편의상 A와 B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문화와 종교A의 하위 항목은 박물관미술관, 음악당, 도서관, 극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와 종교B는 기념물 보호와 관리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A는 문화예술, B는 문화재로 간주할 수 있음
- 2023년 기준 교육·과학·연구·문화 예산(33,479백만 유로) 중 문화와 종교 예산(1,729백만 유로)의 비중은 5.16% 수준임
 -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예산이 확대된 바 있는데 그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1,189백만 유로(4.99%), 2020년 2,307백만 유로(8.05%), 2021년 2,521백만 유로(8.70%), 2022년 1,619백만 유로(5.78%), 2023년 1,729백만 유로(5.16%)로 편성되어 2020년과 2021년에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23년 기준 보건·환경·스포츠·여가 예산(9,425백만 유로) 중 스포츠 및 여가 예산(294백만 유로)의 비중은 3.12%이고, 에너지·수자원관리·산업·서비스 예산(20,976백만 유로) 중 무역 및 관광 예산(178백만 유로)의 비중은 0.85% 수준임
 - 스포츠 및 여가 예산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7.42%, 2020년 2.26%, 2021년 1.47%, 2022년 1.92%, 2023년 3.12%로 코로나19 동안 외부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예산이 감소하였다가 2023년 회복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무역 및 관광 예산 비중의 추이는 2019년 3.56%, 2020년 2.58%, 2021년 2.67%, 2022년 1.68%, 2023년 0.85%로 지속 감소하고 있음

〈표 3-27〉 독일 문화재정의 세부 지출항목별 편성 추이(2019~2023)

(단위: 백만 유로)

구분	세부부문	2019	2020	2021	2022	2023
교육·과학·연구·문화	대학 외 과학·연구개발	13,566	15,236	16,259	16,637	20,272
	대학(Hochschulen)	5,274	4,604	4,688	4,919	5,079
	학생 자금 지원	3,366	6,045	4,912	4,126	5,646
	문화와 종교(A)	1,072	2,187	2,322	1,439	1,550
	기타교육	403	419	579	681	715
	문화와 종교(B)	117	120	199	180	179
	일반교육 및 직업학교(A)	21	28	21	21	32
	일반교육 및 직업학교(B)	1	2	2	2	6
총계		23,820	28,641	28,982	28,005	33,479

구분	세부부문	2019	2020	2021	2022	2023
보건·환경·스포츠·여가	보건 의료	854	16,436	11,951	15,525	6,087
	환경 및 자연보호	927	1,112	1,168	1,357	1,569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보호	964	1,021	3,589	1,250	1,485
	스포츠 및 여가	220	430	250	355	294
총계		2,965	18,999	16,958	18,487	9,435
에너지·수자원관리·산업·서비스	보험	1	2	1,226	2,227	6,898
	무역 및 서비스	1,013	861	851	513	5,953
	지역별 지원	948	1,399	1,795	1,970	3,364
	에너지 및 물 공급, 폐기	522	573	658	2,557	2,271
	광업, 제조, 건설	1,210	2,315	800	1,151	1,998
	무역 및 관광	143	142	152	148	178
	에너지 및 수자원, 무역 및 서비스 관리	117	127	135	148	166
	수자원 관리, 홍수 등	68	86	84	77	148
총계		4,022	5,505	5,701	8,791	20,976

주) 공공재정플랫폼의 예산에서 단위 조정을 위해 절사한 것으로 부처별 총예산 규모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연방예산플랫폼

④ 세부부문별 구성

- 한국과의 비교를 위해 독일의 문화재정을 문화예술, 체육, 관광, 문화재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 독일 연방예산플랫폼을 통해 교육·과학·연구·문화 분야 내 ‘문화와 종교’(Kultur und Religion)를 지출 성격에 따라 문화예술과 문화재로 구분하였고, 보건·환경·스포츠·여가 분야 내 ‘스포츠 및 여가’(Sport und Erholung)를 체육예산으로, ‘에너지·수자원관리·산업·서비스’ 분야 내 ‘무역 및 관광’(Handel und Tourismus)을 관광 예산으로 구분해 살펴봄

〈표 3-28〉 독일 문화재정의 세부부문별 분류 기준

구분	세부내역
문화예술	- 문화와 종교(Kultur und Religion) A
체육	-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Sport und Erholung)
문화재	- 문화와 종교(Kultur und Religion) B
관광	- 무역 및 관광(Handel und Tourismus)

- 2023년 독일 연방정부 문화재정의 세부부문별 구성비를 보면 문화예술 70.3%, 체육 13.4%, 문화재 8.2%, 관광 8.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독일은 문화에 대한 사무가 지방정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중앙정부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대한 공공지출을 강조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기의 예산편성의 변화폭이 큰 특징을 보임
- 문화예술에 대한 비중은 2019년 69.0%에서 2020년 76.0%로 증가한 반면 문화재와 관광은 각각 7.6%에서 4.2%로 감소, 9.2%에서 4.9%로 감소함
- 2021년에도 문화예술 예산이 전년 대비 3.4%p 증가한 79.4% 비율로 확대되었고, 체육 예산의 비중은 전년 대비 -6.3%p 감소함

〈표 3-29〉 독일 문화재정의 세부부문별 구성비

(단위: 백만유로, %)

구분	세부부문별 규모					세부부문별 비율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문화예술	1,072	2,187	2,322	1,439	1,550	69.0%	76.0%	79.4%	67.8%	70.4%
체육	220	430	250	355	294	14.2%	14.9%	8.6%	16.7%	13.4%
문화재	117	120	199	180	179	7.6%	4.2%	6.8%	8.5%	8.2%
관광	143	142	152	148	178	9.2%	4.9%	5.2%	7.0%	8.1%
문화및관광 일반	-	-	-	-	-	-	-	-	-	-

주) 2016-2021년 지출 실적(Ist) 기준, 2022년 지출 목표(Soll) 기준, 2023년 정부 예산안(Regierungsentwurf) 기준 금액

자료 : Finanzbericht 2018-2023, <https://www.bundeshaushalt.de/DE/Bundeshaushalt-digital/bundeshaushalt-digital.html>

3. 소결

- 2022년도 연방 문화미디어청 소개 자료 따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미디어를 위한 환경 보호 및 강화, 문화총회(Plenum der Kultur), 다양성과 참여, 식민주의 과거 규명 및 현대적 기억문화, 문화미디어 분야의 지속가능성, 망명 예술가와 언론인 지원, 코로나 지원 및 창작자들의 보장 개선 등임(Die Bundesregierung, 2021.12.8.)
- 2021년 말 신호등 연정인 새 연립정부의 정책 기초를 담은 ‘연정협약(Koalitionsvertrag, 2021-2025)’에는 문화의 다양성과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다양성 속에서 문화를 국가 목표(Kultur in ihrer Vielfalt als Staatsziel)’로 정착시키려는 문화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함(Die Bundesregierung, 2021.12.8.)
 - 독일은 2021년 말 총선의 결과로 각각 적색, 녹색, 황색을 상징하는 사회민주당(SPD),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자유민주당(FDP)이 일명 ‘신호등’ 연정을 구성하고 연립정부를 수립함
- 새 연립정부의 문화정책 목표는 문화의 다양성으로, ‘클래식부터 만화책까지, 독일어 방언부터 음반가게까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문화를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으며 2022년도 연방 문화미디어청 예산을 전년 대비 10% 증액한 21억 4,000유로(약 2조 8,800억원)로 편성함

- 보다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예술가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예술가사회금고(Künstlersozialkasse)'의 재정적 안정화 및 연방예술지원기금 지침 내 최저 보수에 대한 규정의 제정 등을 통한 예술가의 사회적, 경제적 보장 강화 등이 있음
-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긴급 지원프로그램의 연장 운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 자문기구 '녹색 문화(Green Culture)', 문화활동가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킹을 위한 '디지털 문화 역량 센터(Kompetenzzentrum für digitale Kultur)'에 대한 계획과 문화 및 창조산업을 위한 연방정부 내 전담 기구 등 새로운 기구의 설치를 통한 문화진흥 계획을 제시함
- 또한 가속화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저작권법의 개선 등을 통한 법적 기본조건 개선 및 미디어의 자유와 독립성, 다원성, 다양성 보장과 디지털화에 따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이외에도 식민주의와 나치시대, 냉전시대 과거사에 대한 규명과 문화적 기억을 위한 독일 연방정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문화정책 방향으로 설정함
- 새 연립정부의 연정협약과 문화미디어청의 소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독일 문화정책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문화, 예술, 미디어의 다양성과 성평등, 기후위기 문제에 관한 생태적 지속가능성 등 연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이슈 중심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됨
- 첫째, 문화다양성과 성평등으로 출신, 사회적 배경,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문화적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여성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수 지급과 연방정부 문화기관의 각종 위원회와 기구 구성에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임으로써 문화미디어 분야의 성평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음
- 둘째, 문화미디어의 지속가능성으로 문화미디어 분야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2023년부터 영화와 시리즈 제작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생태적 최소 기준이 적용되고 다른 문화 분야에도 해당 기준을 개발하고 있음. 또한 기후 친화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접점으로 '그린 컬처 데스크(Green Culture Desk)'를 설치할 계획임
- 셋째, 창작자 및 망명예술가 지원에 대한 것으로 예술가들의 사회적, 경제적 보장 강화를 위해 수입상황을 개선하고 '예술가사회금고(Künstlersozialkasse)'의 재정적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망명 예술가와 언론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강화할 계획임
- 요컨대, 독일의 문화재정은 9개 가능별 세출에서 문화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교육·과학·연구·문화 예산이 총지출 대비 5.88%, 체육 분야를 포함하는 보건·환경·스포츠·여가가 4.40%, 관광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에너지·수자원관리·산업·서비스 1.98%이며, 문화미디어청(BKM)의 예산(2,177 백만 유로)은 정부총지출의 0.46% 수준임
- 세부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70.4%), 체육(13.4%), 문화재(8.2%), 관광(8.1%)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남

제6절 일본

1. 문화행정체제

1) 일본 문화청(文化庁, Agency for Cultural Affairs)

- 내각책임제인 일본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국회의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국회의 의결에 의해 지명되고, 총리대신이 각 성의 대신을 임명하여 내각을 구성함
- 일본은 내각부와 부흥청, 11개의 성(省)으로 구성된 정부조직을 갖고 있으며, 11개의 성은 총무성, 법무성, 외부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임
 - 일본의 정부조직은 중앙성청(中央省庁) 혹은 성청(省庁)으로 불리는데, 성(省)은 우리나라의 부처(部)에 해당한다면 청(庁)은 우리나라의 처(處)나 청(廳)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음
-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에서 교육, 과학기술과 함께 문화체육 업무를 소관하며, 문부과학성 산하 외국(外局)인 문화청(文化庁)과 스포츠청(スポーツ庁, Sports Agency)에서 문화, 체육 업무를 담당함
 - 문화청은 「문부과학성 설치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며 업무 범위는 문화예술의 진흥, 국제문화교류, 종교업무 등임³³⁾
 - 스포츠청은 「스포츠기본법」 부칙 제2조를 근거로 설치되어 일본 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함
- 관광 업무는 국토교통성 산하의 외국인 관광청(観光庁, Tourism Agency)에서 담당하고 콘텐츠 업무는 경제산업성에서 사업 단위로 추진하고 있음
 - 관광청은 「관광입국추진기본법」을 근거로 관광입국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관장하며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안전 등을 목적으로 운영함
 - 경제산업성은 2013년부터 추진된 쿨재팬(クールジャパン)을 추진하며 콘텐츠산업 진흥을 지원함
- 문화청 산하에는 국립문화재기구, 국립미술관, 일본예술문화진흥회, 국립과학박물관, 기타 일본예술원, 문화청 국립현대건축자료관 등 독립행정법인과 기타 특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독립행정기관은 국립문화재기구, 국립미술관, 일본문화예술진흥회의 3개 기관이며, 기타 특별기관은 일본예술원, 국립현대건축자료관임

33) 현재의 문화청은 1968년에 문부성 문화국(1966년 설치)과 문화재보호위원회(1950년 설치)를 통합하여 출범하였고, 2021년부터 차관 제도를 도입함. 도쿄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쿄에 제1차관, 교토에 제2차관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문화 창생에 이바지할 목적을 지니고 있음

2. 문화재정 운용

1) 국가재정 일반현황

- 회계연도
 -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며, 현재 2022/23 회계연도 집행 중임
- 예산과정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법률주의로 운용되며, 예산편성은 매년 9월 각 부(府)와 성(省)에서 차년도 정책집행에 필요한 예산요구서(개산, 概算) 기준에 맞춰 재무성에 제출하면, 재무성이 이를 검토한 후에 12월에 차년도 정부예산안(予算政府案)을 확정, 확정된 예산안을 내각에 제출(12월), 국회에 제출(1월), 심의를 통한 최종 확정(3월) 과정을 거침
- 재정구조
 - 일본의 「재정법(Public Finance Act)」 제13조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9개 정부관계기관을 예산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일회계주의 원칙에 따라 보통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함(한국조 세재정연구원, 2009; 국회예산정책처, 2020)
 - 세출구조는 일반세출, 지방교부세교부금, 국채비로 구성되며, 일반세출 내 기능별 세출로서 사회보장관계비, 문교 및 과학진흥비, 연금관계비, 방위관계비, 공공사업관계비, 경제협력비, 중소기업산업대책비, 에너지대책비, 식료안정공급관계비, 기타 경비 및 예비비 등 10개로 구분됨
 - 2021년에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예비비가, 2023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예비비가 새로이 편성된 바 있음
- 예산서
 - 본 연구에서 참고한 자료는 일반회계세입세출개산(一般会計歳入歳出概算)과 영문으로 된 Highlight of the FY 2023 Draft Budget, 일본 재무부의 예결산 데이터베이스³⁴⁾이며, 기능별 세출 및 소관 부처별 예산편성의 변화를 살펴봄
 - 또한 연도별 문교과학기술 예산의 포인트(文教・科学技術予算のポイント) 자료를 통해 문화청 예산의 주요 변동사항을 함께 검토하였음

34) 일본 재무부의 예결산 데이터베이스는 다음을 참고. <https://www.bb.mof.go.jp/hdocs/bxsselect.html>

2) 문화재정 현황

① 기능별 세출의 문화재정

- 일본의 예산서는 일반세출과 국채비, 지방교부세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세출은 13개의 기능에 따라 구분됨
- 이 중 문화재정이 포함된 항목은 ‘문교 및 과학진흥비’이며 2023 회계연도의 정부예산안 기준 전체 정부총 지출 대비 4.7%를 차지함
 - 일본의 문화재정은 전체 정부세출의 1% 내외인 다른 나라보다 많은 수준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교 및 과학진흥비 대부분이 과학과 교육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로 문화분야에 해당하는 예산은 그리 많지 않음

〈표 3-30〉 일본의 기능별 세출 예산 추이(2019~2023)

(단위: 억엔)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규모	순위	
일반세출 ²⁾	619,639	617,184	669,023	673,746	727,317	-	4.1%
사회보장관계비	341,306	356,914	358,343	362,735	368,889	1	2.0%
문교 및 과학진흥비	55,884	53,912	53,925	53,901	54,158	5	-0.8%
과학기술진흥비	13,597	13,565	13,638	13,788	13,942	-	0.6%
과학기술진흥비 외(문교비)	42,428	40,347	40,296	40,113	40,216	-	-1.3%
연금관계비	2,097	1,750	1,450	1,221	970	13	-17.5%
방위관계비	52,574	52,625	53,145	53,687	101,686	2	17.9%
공공사업관계비	69,099	60,669	60,549	60,575	60,600	3	-3.2%
경제협력비	5,021	5,116	5,108	5,105	5,114	10	0.5%
ODA	5,566	5,610	5,599	5,612	5,709	-	-1.2%
중소기업산업대책비	1,790	1,723	1,726	1,713	1,704	12	-3.3%
에너지대책비	9,760	9,008	8,891	8,756	8,540	9	6.5%
식료안정공급관계비	9,823	12,862	12,723	12,701	12,654	7	-3.8%
기타 경비	67,284	57,605	58,164	58,350	58,004	4	0.0%
예비비	5,000	5,000	5,000	50,000	5,000	11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예비비	-	-	50,000	50,000	40,000	6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경제비상대응 예비비	-	-	-	-	10,000	8	0.6%
국채비	235,082	233,515	237,585	243,393	252,503	-	1.8%
지방교부세교부금	159,850	158,093	159,489	158,825	163,992	-	3.0%
합계	1,014,571	1,008,791	1,066,097	1,075,964	1,143,812	-	

자료 : 일본재무성(각 년도), 일반회계세출개산 주요경비별 내역(一般会計歳出概算主要経費別内訳)

- 정부총지출 대비 문교 및 과학진흥비는 2019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연평균 증가율 -3.8%), 특히 과학기술진흥비 보다는 문화교육비 감소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예산의 절대적 규모의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진흥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표 3-31〉 일본의 문교 및 과학진흥비 구성

(단위: 억엔)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정부총지출	1,014,571	1,008,791	1,066,097	1,075,964	1,143,812	3.0%
문교 및 과학진흥비	56,025 (5.5%)	53,912 (5.3%)	53,969 (5.1%)	53,901 (5.0%)	54,158 (4.7%)	-3.8%
과학기술진흥비	13,597 (1.3%)	13,565 (1.3%)	13,673 (1.3%)	13,788 (1.3%)	13,942 (1.2%)	-2.3%
문교비	42,428 (4.2%)	40,347 (4.0%)	40,296 (3.8%)	40,113 (3.7%)	40,216 (3.5%)	-4.2%

② 부처의 문화재정

- 정부총지출 대비 문부과학성 예산의 비율은 앞선 기능별 세출 기준과 유사하게 2019년 5.4%, 2020년 5.3%, 2021년 5.0%, 2022년 4.9%, 2023년 4.6%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능별 세출 상의 '문교 및 과학진흥비'의 대부분이 문부과학성의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임
- 관광청은 국토교통성의 외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국토교통성 예산의 비율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23년도 국토교통성 예산은 정부총지출의 5.3%를 차지함

〈표 3-32〉 일본의 소관별(부처별) 예산 추이(2019~2023)

(단위 : 억엔/億円)

소관별	2019	2020	2021	2022	2023
황실비(皇室費)	117	116	124	73	67
국회(国会)	1,500	1,285	1,312	1,283	1,282
법원(裁判所)	3,256	3,266	3,254	3,228	3,222
회계검사원(會計検査院)	177	171	168	169	158
내각(内閣)	32,521	38,766	3,801	1,072	1,064
내각부(内閣府)			39,669	39,433	48,960
내각본부 등(内閣本府等)	-	-	36,435	36,560	46,058
경찰청(警察庁)	-	-	3,235	2,873	2,902
경찰청(警察庁)	3,421	3,603	-	-	-
디지털청(デジタル庁)	-	-	368	4,720	4,951

소관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무성(総務省)	166,295	167,692	165,952	164,624	168,625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うち地方交付税交付金等)	159,850	158,093	159,489	158,825	163,992
법무성(法務省)	8,129	8,206	7,431	7,438	7,250
외무성(外務省)	7,306	7,120	6,959	6,904	7,434
재무성(財務省)	249,744	246,579	250,248	256,688	299,763
국채비(うち 国債費)	235,082	233,515	237,588	243,393	252,503
방위비증대비용(うち防衛力 強化資金(仮称)繰入れ)	-	-	-	-	33,806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55,287 (5.4%)	54,152 (5.3%)	52,980 (5.0%)	52,818 (4.9%)	52,941 (4.6%)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320,358	330,366	331,380	335,160	331,686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22,361	22,170	21,234	21,043	20,937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12,842	12,435	9,170	9,024	8,809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70,223 (6.9%)	68,983 (6.7%)	60,578 (5.7%)	60,307 (5.6%)	60,524 (5.3%)
환경성(環境省)	3,459	3,537	3,233	3,291	3,258
방위성(防衛省)	52,574	53,133	53,235	53,687	67,880
코로나 및 물가상승 대책비	-	-	50,000	50,000	40,000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예비비	-	-	-	-	10,000
예비비(予備費)	5,000	5,000	5,000	5,000	5,000
합계	1,014,571	1,026,580	1,066,097	1,075,964	1,143,812

자료 : 일본재무성(각 년도), 일반회계세출개산 주요경비별 내역(一般会計歳出概算主要経費別内訳)

- 2023년 기준 문부과학성 예산 중 스포츠청 예산은 322억엔, 문화청 예산은 1,075억엔으로 각각 0.61%, 2.03% 비율을 차지하고, 국토교통성 예산 중 관광청 예산은 0.53% 수준임

〈표 3-33〉 일본의 문부과학성 및 국토교통성 세부 예산 내역

(단위 : 억엔/億円)

소관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61,078	75,760	73,825	67,366	52,941
문부과학본성	59,467	72,103	71,306	65,163	51,498
문부과학본성 소관기관	46	46	53	53	449
스포츠청(スポーツ庁)	313 (0.51%)	1,274 (1.68%)	416 (0.56%)	364 (0.54%)	322 (0.61%)
문화청(文化庁)	1,250 (2.05%)	2,335 (3.08%)	2,048 (2.77%)	1,784 (2.65%)	1,075 (2.03%)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82,080	101,490	81,200	81,257	60,524
국토교통본성	74,969	83,228	71,316	72,245	54,146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国土技術)	65	62	57	59	49

소관별	2019	2020	2021	2022	2023
政策総合研究所)					
국토지리원(国土地理院)	112	111	153	131	86
해난심판소(海難審判所)	9	9	9	9	9
지방정비국(地方整備局)	2,434	2,423	2,409	2,281	2,270
홋카이도개발국(北海道開発局)	538	525	517	480	480
지방운송국(地方運輸局)	213	212	211	205	212
지방항공국(地方航空局)	21	21	22	23	23
관광청(観光庁)	486 (0.59%)	11,624 (11.45%)	3,040 (3.74%)	1,737 (2.14%)	323 (0.53%)
기상청(気象庁)	610	644	810	1,110	485
운송안전위원회(運輸安全委員会)	21	20	21	20	20
해상보안청(海上保安庁)	2,596	2,604	2,629	2,953	2,414

주) 2019-21년 결산자료로 추경예산 포함, 2022-23 예산자료
 자료 : 일본 재무부 예결산데이터베이스

③ 지출항목별 구성

- 2023년 기준 문화청 예산은 11개 항목으로 분류되며, 문화청공통비, 문화진흥비, 문화재보존사업비, 문화재보존시설정비비, 문화진흥기본정비비 등 사업성 예산과 일본예술원, 국립과학박물관 운영비, 국립미술관 운영비, 국립미술관시설 정비비, 국립문화재기구 운영비, 일본예술문화진흥회 운영비 등으로 구성됨
 - 스포츠청과 관광청 예산 역시 공통비와 진흥비 및 시설 운영비로 구성됨
- 주목할만한 사항은 경제산업성의 사업예산으로 포함되어 있던 '쿨재팬 예산'이 2022년에 크게 감소한 후 2023년 예산안에서 삭제되었다는 점임
 - 쿨재팬(クールジャパン)은 일본의 문화부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합동펀드로서 일본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과 해외활동 지원을 하는 아베정권에서 추진한 일종의 국책사업임

〈표 3-34〉 일본의 문화청·스포츠청·관광청 예산 세부항목

(단위 : 억엔/億円)

세부지출항목	2019	2020	2021	2022	2023
(문부과학성) 스포츠청	313	1,274	416	364	322
스포츠청 공통비	12	12	12	12	12
초중등교육 진흥비	0.2	0.2	0.2	0.2	0.2
사립학교 진흥비	0.8	0.8	0.8	0.8	0.8
스포츠 진흥비	90	1,023	162	128	109
스포츠 진흥시설비	24	0	0	0	0
일본스포츠진흥센터 운영비	179	216	207	206	199

세부지출항목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본스모츠진흥센터 시설정비비	3	17	16	17	0
오기나와 북부 연계 축진 특별사업비	1	3	17	0	0
(문부과학성) 문화청	1,250	2,335	2,048	1,784	1,075
문화청공통비	30	32	33	41	43
문화청 시설비	16	0	0.4	1	0
문화 진흥비	222	1,274	923	353	229
문화재보존 사업비	515	534	608	511	442
문화재보존 시설정비비	6	6	5	5	5
문화진흥기반 정비비	20	41	41	29	26
일본예술원	4	4	4	4	5
일본예술원 시설비	0	0	1	3	0
국제관광여행객세 재원 관광진흥비	100	98	69	0	0
국립과학박물관 운영비	26	27	29	25	28
국립과학박물관 시설정비비	0.5	14	9	2	0
국립미술관 운영비	73	77	85	84	77
국립미술관 시설정비비	26	13	13	10	4
국립문화재기구 운영비	85	86	90	89	95
국립문화재기구 시설정비비	14	3	11	3	0
일본예술문화진흥회 운영비	104	115	111	115	0
일본예술문화진흥회 시설정비비	2	4	9	2	117
정보통신기술 조달 등 적정/효율화 추진비	0	0	1	0	0
일본예술문화진흥회 출자	-	-	-	0500	0
(경제산업성) 경제산업본성 ¹⁾	-	-	-	-	-
클래팬 추진비	67	1,387	598	394	-
(국토교통성) 관광청	486	11,624	3,040	1,737	323
관광청 공통비	20	20	21	20	20
관광진흥비	91	11,202	2,858	1,571	52
국제관광여행객세 재원 관광진흥비	190	172	80	80	126
국제관광진흥기구 운영비	140	175	73	65	52
(국제관광여행객세 재원) 국제관광진흥기구 운영비	42	54	7	0.01	71
총계	2,116	16,620	6,102	4,279	1,720

주) 2019-21년 결산자료로 추정예산 포함, 2022-23 예산자료

자료 : 일본 재무부 예결산데이터베이스

④ 세부부문별 구성

- 일본 문화재정의 구성비를 한국과 비교하기 위해 <표 3-35>와 같이 세부 지출항목을 문화예술, 체육, 관광, 문화재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표 3-35> 일본 문화재정의 세부부문별 분류 기준

구분	세부내역		
문화예술	- 문화청 시설비 - 문화진흥비 - 문화진흥기반 정비비 - 일본예술원	- 일본예술원 시설비 - 국립고학박물관 운영비/시설정비비 - 일본예술문화진흥회 운영비/시설 정비비	- 일본예술문화진흥회 출자 - 정보통신기술 조달 추진비
체육	- 초중등교육 진흥비 - 사립학교 진흥비	- 스포츠 진흥비 - 스포츠진흥 시설비	- 일본스포츠센터 운영비/시설정비비 - 오키나와 북부 연계 촉진 특별사업비
문화재	- 문화재보존 사업비	- 문화재보존 시설정비비	- 국립문화재기구 운영비/시설정비비
관광	- 국제관광여객세 재원 관광진흥비 ¹⁾	- 관광진흥비	- 국제관광진흥기구 운영비 ²⁾
문화 및 관광 일반	- 스포츠청 공통비	- 문화청 공통비	- 관광청 공통비

주 1) 문화청, 관광청 항목 모두 포함
 2) 국제관광여객세 재원 운영비도 포함

- 일본은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달리 문화예술, 체육, 문화재, 관광에 대한 지출이 고르게 편성되어 있는 편이고, 특히 문화재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큰 특징을 보임(2023년 기준 31.6%)
- 또한, 2020년에는 관광 예산 비중이 전년(26.7%) 대비 크게 확대된 70.4%로 늘어났고 문화예술 예산은 전년(26.8%) 대비 감소한 17.8%로 나타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재정의 지출이 관광 부문에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36> 일본 문화재정의 세부부문별 구성비

(단위: 억엔, %)

구분	세부부문별 규모					세부부문별 비율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문화예술	561	2,956	1,824	1,522	486	26.8%	17.8%	29.9%	35.7%	28.4%
체육	298	1,260	403	352	309	14.2%	7.6%	6.6%	8.2%	18.0%
문화재	620	629	714	608	542	29.3%	3.8%	11.7%	14.2%	31.6%
관광	563	11,701	3,087	1,716	301	26.7%	70.4%	50.6%	40.1%	17.6%
문화및관광 일반	62	64	66	73	75	3.0%	0.4%	1.1%	1.7%	4.4%

3. 소결

- 일본 문화청은 1999년 제정된 「문화예술기본법」(법률 제148호)에 근거하여 정부의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2년 「제1차 문화예술의 진흥에 대한 기본적 방침」, 2007년 「제2차 기본적 방침」을 수립한 바 있음
- 2017년 12월 발표한 「문화경제전략(文化經濟戰略)」에서는 국가, 지자체, 기업, 개인 등 모든 주체가 문화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타 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필요하다는 배경 하에 6개의 중점 전략을 수립하였음
 - 중점 전략은 문화재(문화예술자원)의 보존, 문화재(문화예술자원)의 활용, 문화창조활동 추진, 문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새로운 수요·부가가치 창출, 문화경제전략의 추진 기반 강화 등임
- 또한, 최근에는 「제1기 문화예술추진 기본계획(2018~2022): 문화예술의 ‘다양한 가치’를 살리고, 미래를 만든다」(2018.3.6.)를 수립 및 발표함
 - 본 계획에 따르면 일본의 문화예술정책 방향은 크게 4개의 목표에 따라 추진되는데, 이는 문화예술의 창조·발전·계승과 교육, 창조적이며 활력있는 사회, 풍요롭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 지역 문화예술 추진 플랫폼임
 - 계획의 기간(2018~2022) 동안 4개 목표에 따른 6개의 전략을 향후 5년간의 문화예술정책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국가전략으로서의 문화예술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였음
 - 6대 전략은 ① 문화예술의 창조·발전·계승과 풍요로운 문화예술교육 충실, ② 문화예술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와 개혁 실현, ③ 국제문화교류·협력 추진과 문화예술을 통한 상호이해·국가브랜딩에 공헌, ④ 다양한 가치관의 형성과 포용적 환경 추진에 의한 사회적 가치의 양성, ⑤ 다양하고 높은 능력을 지닌 전문 인재의 확보와 육성, ⑥ 지역 제휴·협력을 추진하는 플랫폼 형성 등임

〈표 3-37〉 제1기 문화예술추진 기본계획(2018-2022) 4대 목표

4대 목표	주요 내용
(목표1) 문화예술의 창조·발전·계승과 교육	모든 국민들에게 충실한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
(목표2) 창조적이며 활력있는 사회	문화예술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를 통한 혁신과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발전을 통해 국가브랜드 형성에 공헌
(목표3) 풍요롭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	모든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에 참여, 상호이해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되어 풍요로운 사회를 형성
(목표4) 지역 문화예술 추진 플랫폼	지역 문화예술을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이 전국 각지에 형성되어 다양한 인재와 문화예술단체·제기관이 제휴·협력하여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지역문화 커뮤니티 형성

- 제1기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2023년 3월 내각회의에서 「제2기 문화예술추진 기본계획(2023-2026)」을 수립함
- 이는 일본의 문화예술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와 제1기 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를 근거로, 기존의 4개 목표를 중장기 목표로서 가져가되,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하는 7개의 중점과제를 확대 및 16개의 세부 시책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함
- 중점과제 및 시책은 국가 정책방향과 궤를 맞춰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의 문화예술 진흥, 장애인을 위한 예술 및 일본어 진흥 등 문화다양성, 지역창생 및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정책 등과 관계됨

〈표 3-38〉 제2기 문화예술추진 기본계획(2023-2026) 7대 목표

7대 중점과제	16대 주요시책
① 포스트코로나의 창조적 문화예술활동 추진	1. 코로나로부터의 부흥과 문화예술 수준의 향상 등 2. 기반강화, 자율적 운영에 의한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②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일층 촉진	3. '문화재 장인 프로젝트' 추진 등에 의한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의 선순환 구축 4. 국제협력을 통한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세계문화유산·무형문화유산 등) 5. 국토강인화에 기여하는 문화재의 방화·방재 대책 추진
③ 문화예술을 통한 차세대를 책임질 어린이 육성	6. 문화예술교육의 개선·충실, 어린이들에 의한 문화예술감상·체험기회 확보
④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예술 진흥	7. 장애인 등의 문화예술 참여 촉진에 의한 공생사회 실현 8. 국어의 진흥, 국내외에서의 일본어교육 추진
⑤ 문화예술의 글로벌화 전개의 가속	9. 세계를 관점으로 한 전략적 문화예술의 전개 10. 해외와의 제휴에 의한 문화예술의 선순환 창출
⑥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창생 추진	11. 국립미술관·박물관, 국립극장 등 문화진흥의 내셔널센터로서의 매니지먼트 기능의 강화, 박물관 행정의 충실 12. 지역에 있어서의 문화예술진흥거점의 정비·충실 13. 문화관광의 추진에 의한 선순환 창출 14. 식문화를 시작으로 한 생활문화의 진흥
⑦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예술활동의 추진	1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예술활동의 진흥 16. DX(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 대응하는 저작권제도의 구축

- 요컨대, 일본의 문화재정은 13개 기능별 세출에서 문화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문교 및 과학진흥비 예산이 총지출 대비 4.7%를 차지하고 있어 높아 보이지만 과학진흥 및 교육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부처별 예산을 살펴보면 스포츠청 예산(322억엔)은 총지출 대비 0.61%, 문화청 예산(1,075억엔)은 2.03%, 관광청 예산(323억엔)은 0.53% 수준이고, 세부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재(31.6%), 문화예술(28.4%), 체육(18.0%), 관광(17.6%), 문화 및 관광 일반(4.4%)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제4장

결론

제1절 주요 결과

1. OECD 국가의 문화재정 현황

-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향후 운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OECD 국가의 문화재정 현황 및 주요국(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문화재정 운용사례를 살펴보았음
- 먼저 OECD 국가 문화재정 분석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여가·문화·종교 예산(일반정부 기준)은 0.99%로 여전히 OECD 국가 평균(1.2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GDP 대비 여가·문화·종교 지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아이슬란드(3.27%),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0.27%)이었으며, 한국은 전체 32개 국가 중 24위로 낮은 위치를 차지함
- 정부총지출 대비 여가·문화·종교 예산(일반정부 기준)은 한국이 2.78%로 OECD 국가 평균인 2.71%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10개의 정부활동 기능 중 여가·문화·종교 지출에 대한 순위는 OECD 평균 8위인데 반해 한국은 10위에 위치하여 정부지출의 우선순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는 앞으로 문화분야에 대한 정부의 공공재정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OECD 국가 문화재정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담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전체 32개국 중 중앙정부의 역할이 큰 국가는 헝가리, 이탈리아 등 11개 국가이고 나머지 21개 국가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비율이 높았음
 - 특히 벨기에, 미국, 독일 등 국가형태가 연방제를 띠는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비율이 압도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02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34,984 달러) 규모와 유사한 경제규모의 국가들(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과의 문화재정 수준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표 2-21〉 참고), 한국의 문화재정 지출 수준은 GDP 3만 달러 국가들 중 중위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한국의 GDP 대비 문화재정 수준은 아직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1인당 GDP 3만 달러 그룹의 중위수준에 위치한다는 것은 이전 선행연구들이³⁵⁾ 진행된 시점에 비해 일면 나아졌음을 의미함
- 한국은 정부총지출 대비 문화재정이 1%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문화재정을 확충해왔고 OECD 평균과도 가까워지고 있으나,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문화 부분에 대한 공공지출이 높지 않고 국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 속에서 감소가 요구되는 실정임

35) 김세훈(2003), 윤주(2008), 양해원(2011), 정보람(2016)을 의미함

- 따라서 국제적 수준에 맞는 문화재정 규모를 확충함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운용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재정 집행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나아가 투자 대비 성과를 고려한 문화재정의 전략적 운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2. 주요국가의 문화재정 현황

- OECD 국가의 재정규모 검토만으로는 한국 문화재정 정책수립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과 유사한 정부조직 유형을 지니고 있는 주요국가(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문화재정 운용사례를 검토하였음
- 분석 국가들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3~5년 단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연도별 예산안을 작성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그밖에 국가나 정부형태, 회계연도, 예산운영 형식과 세출구조 등 전 분야에서는 차이를 보였음
- 특히 정부부처에 문화체육관광 업무를 포괄하여 담당하는 부처가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문화재정 예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표 4-1〉 주요국가의 국가재정 일반현황

구분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국가형태	단일국가	단일국가	단일국가	연방국가	단일국가
정부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준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회계연도	1.1~12.31	4.1~3.1	1.1~12.31	1.1~12.31	4.1~3.1
예산운영 형식	예산비법률주의	예산법률주의	예산법률주의	예산법률주의	예산비법률주의
중기재정운용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출검토 (spending review)	공공재정계획법 (LPFP)	중기재정계획 (Mittelfristige Finanzplanung)	경제재정 운용과 개혁의 기본방침 (3개년 중기재정전망)
예산서(연간)	정부예산안	봄예산서	예산법(PLF)	재정보고서	일반회계세입세출개산 (一般会計歳入歳出概算)
세출구조	16개	10개	32개	9개	10개
문화전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스포츠부	문화부 (체육부)	문화미디어청 (체육국)	문화청 (스포츠청, 관광청)
협력부처	문화재청 과기부	-	농림부 국방부 등	-	-

- 한국과 영국은 문화체육관광 업무를 한 개의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어 정부총지출 대비 문화부처 예산이 각각 한국 1.05%, 영국 0.93%(경상지출), 1.05%(자본지출)로 1%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문화행정 업무를 문화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정부총지출 대비 문화부처 예산은 0.56%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으나,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이 특정 미션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문화부 외 타 부처에서도 문화관련 업무를 협력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음(표 3-19) 참고
 - 따라서 문화관련 업무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타 부처의 예산을 모두 포함한다면 프랑스의 실질적인 부처별 문화예산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함
- 반면, 문화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 단위의 정부부처가 없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 부처의 산하기관 형태로 문화청을 조직하고 있었으며, 정부총지출 대비 문화청 예산이 각각 0.46%(독일 문화청), 0.0009%(일본 문화청)로 매우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4-2〉 주요국가의 문화재정 운용사례 결과 요약

구분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가능별 세출의 문화재정 (총지출 대비)	1.35% ¹⁾	1.21%	(문화) 0.91% (문화 등) 1.56% ²⁾	(문화) 5.88% (문화 등) 12.26% ⁴⁾	4.7%
부처의 문화재정 규모 (총지출 대비)	1.05%	(경상) 0.93% (자본) 1.05%	0.56%	(문화청) 0.46% (문화청 등) 0.46% ⁵⁾	(문화청) 0.0009% (문화청 등) 0.0015% ⁶⁾
주요 지출항목 (문화전담 부처 중심)	- 문화예술 - 문화재 - 체육 - 관광 - 일반	- 박물관미술관도서관 - 예술 및 유산 - 스포츠 - 방송 및 미디어 - 시민사회 - 기타(관광 등) - 디지털UK	- 문화유산(p175) ³⁾ - 창작(p131) - 문화부 정책사업(p224) - 지식전승 및 문화민 주화(p361) - 언론과 미디어(p180) - 책과 문화산업(p334)	- 문화와 종교A - 문화와 종교B - 스포츠 및 여가 - 무역 및 관광	- 스포츠진흥비 등 5개 - 문화진흥비 등 11개 - 관광진흥비 등 5개
세부부문별 구성	- 문화예술 46.5% - 문화재 16.3% - 체육 18.6% - 관광 14.0% - 일반 4.7%	- 문화예술 70.9% - 문화재 7.8% - 체육 1.8% - 관광 4.4% - 일반 15.1% - 문화예술 62.3% - 문화재 12.9% - 체육 0.3% - 관광 6.4% - 일반 18.1%	- 문화예술 70.6% - 문화재 11.1% - 체육 10.1% - 관광 0.0% - 일반 8.1%	- 문화예술 70.4% - 문화재 8.2% - 체육 13.4% - 관광 8.1% - 일반 0.0%	- 문화예술 28.4% - 문화재 31.6% - 체육 18.0% - 관광 17.6% - 일반 4.4%

주 1) 16대 분야 기준

2) 문화, 언론, 체육 및 건강·청소년지원 예산의 합계 기준

3) 'p숫자'는 프랑스의 프로그램 예산제에 따른 프로그램 번호

4) 문화, 체육, 관광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세출 기능의 합계 기준

5) 문화미디어청 및 체육국 예산의 합계 기준(체육국 예산이 작아 합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0.46% 수준임)

6) 문화청, 스포츠청, 관광청 예산의 합계 기준

- 또한 세출 기준 및 문화부 예산상의 문화재정 범위가 국가별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대칭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별 문화부처 예산의 세부 지출항목을 재편하여 살펴보았는데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문화예술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문화재, 체육, 관광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일본의 경우 문화재(31.6%)에 대한 비중이 문화예술(28.4%) 보다 높은 특징을 보였고, 코로나19 대응 기간에도 문화예술에 대한 지출보다는 관광에 대한 지출 비중을 확대하는 양상을 보였음
 - 일본 문화청의 정책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문화청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영역 중 하나가 문화재(문화예술 자원)의 보존과 활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3. 주요국가 문화재정의 중점 투자 방향

- 세부 지출항목을 통해 국가별 중점 투자 방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고 이를 국가별로 요약하면 한국의 K-콘텐츠 활성화, 영국의 디지털UK, 프랑스의 컬처패스(Pass Culture), 독일의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성, 일본의 다양성과 디지털에 대한 강조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영국은 2022/23 회계연도 예산서에서 디지털 전략과 함께 청소년투자기금(Youth Investment Fund), (Voluntary Community and Social Enterprise, VCSE)을 강조하기도 하였음
 - 프랑스 문화부의 2023 회계연도 예산서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컬처패스(pass Culture) 확대 프로그램인 100% EAC 프로그램에 1억 4백만 유로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임을 밝혀, 청소년이 정부 문화정책의 중요한 대상으로 부상하였음
 - 독일은 문화정책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문화, 예술, 미디어의 다양성과 성평등, 기후위기 문제에 관한 생태적 지속가능성 등 연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이슈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하는 상황
- 주요국가들 모두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성평등, 기후위기 의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동향은 문화분야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출 필요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요구되는 한국의 상황에 시사점을 제공해줌
- 향후 문화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방향 및 문화재정 투자의 필요성을 돌봄이나 치유 등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현재의 동향을 고려하여 복지의 관점에서 재편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 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다양성, 기후위기 등 글로벌 이슈를 중심으로 한 문화정책 방향 설정을 통한 문화재정 확충의 당위성을 마련할 수 있음
- 한편, 본문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으나 독일의 지방정부 문화재정, 일본의 민관협력투자기금, 프랑스의 기업메세나 등 국가별 시사점을 도출할 만한 문화재정 운용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음
-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서 연방의 문화예산과 주와 지자체의 문화예산에 관한 문화재정보고서(Kulturfinanzbericht)를 발행하고 있고, 2005년부터 연방·주·지자체의 문화 및 문화 인접분야의 지출 데이터와 연방·주·지자체의 총 문화재정 규모 및 상호 분담비율, 국내총생산(GDP)와 총 공공지출 대비 문화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문화 분야별 지출규모 등을 분석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결과(2005년, 2010년,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 등)를 제시하고 있음
- 일본은 아베정권 때 일본문화의 부흥을 위해 내세운 쿨재팬 정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13년 출범한 쿨재팬기구를 민관합동펀드로 운영한 바 있고³⁶⁾, 2017년 발표한 「문화경제전략」에서 국가, 지자체, 기업, 개인의 문화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강조, 그리고 1990년 설립된 예술문화진흥기금을 정부 출자금과 민간 기부금을 통해 조성하는 등 민관협력 방식의 재정을 운용함

36) NEWSTOF(2023.1.9.), 파산 위기 빠진 일본의 국책 문화지원사업 '쿨재팬기구',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44>)

- 프랑스는 2003년 8월 메세나와 협회 및 재단에 관한 법률³⁷⁾을 제정하면서 민간의 문화활동 지원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법률에 기부자의 특정 세금 공제 혜택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 현재 한국은 문화분야에 대한 공공지출의 한계를 인식하고 민간분야의 투자 활성화 및 협력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다른 나라의 사례분석 시 중앙정부 외 다양한 재정운용 주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7) Loi n° 2003-709 du 1 août 2003 relative au mécé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 (1).

제2절 시사점

- 국가재정정책 전반에 개혁이 요구되는 가운데 문화재정은 감축과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분야 중 하나로서, 전체 문화재정 총액 확충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문화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 그동안 문화재정 운용은 문화예술의 중요성이나 시장실패에 기인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에 방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시적 관점의 국가재정제도 하에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운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윤용중, 2008)
- 특히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재정총액이 한정된 상황에서 문화분야는 다른 보건·복지·노동, 교육 등 타 분야와 경쟁관계에 놓여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문화계 내부의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가의 재정운용 사례를 검토하며 문화재정의 세부 지출항목과 정부에서 발표한 문화분야에 대한 정책계획 등을 중심으로 보다 질적인 분석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첫째, 국가별 맥락에 따라 문화재정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OECD 및 주요국가의 문화재정 비율이 낮은 것을 해당 국가의 문화서비스 및 재화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맥락을 고려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가령 독일의 문화미디어청 예산은 0.46%로 매우 소규모이지만 독일의 문화재정은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지출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문화재정 규모가 낮다고 단순 해석하기 어려움
 - 이는 문화 분야 외 타 분야의 재정규모를 비교할 때도 지적되는 사항으로 재정규모에 대한 양적 분석은 거시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임을 인지할 필요 있으며, 문화재정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에서도 향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시도되어야 함
- 둘째, 국가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정지출 방향에 따라 문화재정 운용방식이 달라지므로, 문화재정의 규모와 문화행정의 체계 외에도 국가의 전반적인 재정정책 상황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임

-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각 국가는 재정위기 상황에서의 문화재정 운용을 달리 추진해왔는데 영국은 문화회복기금을 신설하여 위기에 대처하였고, 독일에서는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의 일부로 문화에 대한 지원 확대를 발표한 바 있음
- 반면 일본에서는 관광 예산을 확보하여 외래관광객 수용 확대를 통한 경제회복을 꾀하고자 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가별 지향하는 재정지출 방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음
- 마지막으로 한국의 문화재정 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긴 하였으나 GDP 대비 비율로 보았을 때 여전히 OECD 국가에 비해 낮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음
- K-콘텐츠의 전세계적인 관심 증대와 국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 상승으로 인해 문화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가 전반의 긴축재정 기조 하에서 재량지출 중심으로 구성된 문화재정의 감축이 요구되고 있음
- 문화예술은 끊임없는 실험과 성공-실패의 반복 과정을 거쳐 우수한 작품이 나온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의 감소는 그러한 실험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그러므로 국가재정운용의 방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전략적인 문화재정 운용 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 한편, 본 연구는 거시적 관점의 적정 재정규모를 검토하고 미시적 관점에서 국가별 재정구조 및 세부지출을 분석하여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였음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님
- 첫째, OECD 통계의 정부지출 데이터는 국가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으로 국가간 상대적 규모를 비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각 국가에서 정의하는 문화재정의 범위가 충분히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해석상의 유의를 요함
- 여가·문화·종교 계정을 구성하는 6개 세부부문은 여가, 문화, 체육, 종교 등으로 이루어져 한국의 문화재정 범주에 포함되는 관광 부문이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세부부문별 지출 현황 분석(〈표 2-16〉, 〈표 2-17〉)과 관련하여 한국의 데이터 부재로 분석에 포함되지 않음
- 둘째, 문화재정 운용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4개 국가에 대한 사례분석에서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나 운영 사례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아 향후 이에 관한 별도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셋째, 현재 한국은 공공지출의 악화로 문화분야에 대한 민간부문 재정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른 나라의 민간부문 재정규모에 대한 분석이 요청되나 이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아 후속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함
- 한국의 GDP 대비 문화재정 규모는 OECD 국가 평균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주요국가의 문화재정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2003년 이래 약 20여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OECD 평균에 근접하다는 점은 괄목할만한 성과임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문화재정 확충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의 운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함

참고문헌

- 국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2).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3 대한민국 재정
- 기획재정부(2004),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
- _____(2022),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 김동욱(2018), 『정부조직 설계』, 경기: 문우사
- 김석은·김유현(2022). 더 나은 영국 재건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 한국의 정부조직개편에 주는 시사점,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제14권 제2호, pp. 117~146.
- 김성태(2007),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 국가예결위
- 김세훈(2003). 주요 외국의 문화예산 비교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은경(2012). 「프랑스의 재정」, 서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재진(2023), 재정준칙,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관리의 초석, 『재정포럼』
- 도세록(2009).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2: OECD 통계품질 관리정책, 『보건복지포럼』
- 독일 연방재무부, 각 년도, 재무보고서(Finanzbericht)
- 박기백(2008). 정부지출의 국제비교, 『재정포럼』(2008.11), 31-47.
- 박승규(2019). 삶의 질 결정요인 파악을 통한 문화 재정지원의 경제적 영향 분석, 『문화경제연구』, 22(1), 101-127.
- 박종준(2017). 주요국 정부조직 관련 법제 분석-프랑스,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박형수(2005).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재정포럼』(2005.2), 26-53.
- 배관표·박종석·신현기(2021). OECD 회원국들의 문화행정체계 비교, 사회과학연구, 32(1), 175-194.
- 신현재·김병섭(2019). 삶의 질 결정요인 파악을 통한 문화 재정지원의 경제적 영향 분석. 『문화경제연구』, 22(1), 101-127.
- 양혜원(2011). OECD 주요 국가의 문화예산 비교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_____(2013). 문화재정과 삶의 질 간의 관계 연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7(1), 8-29.
- 원영훈·윤지웅(2020). 정부지출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OECD Better Life Index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6(3), 95-137.
- 윤광재(2008). 정부재정규모에 대한 국가간 비교분석 연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

- 보』, 18(4), 93-118.
- 윤상호(2016). 정부규모와 경제발전: 공무원수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윤소영·정보람(2015). 문화융성시대의 문화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 29(1), 4-26.
 - _____(2018). 문화분야 재정구조 개선 및 신규과제 발굴,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윤소영·정보람·김정훈·정원희·황아람(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화재정 대응방향,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윤용중(2008). 재정제도 변화와 문화 재정의 과제, 『문화경제연구』, 11(2), 3-25.
 - 윤 주(2008). 2008년 주요 외국의 문화예산(II) 비교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일본내각(2018), 문화경제전략(<https://www.cas.go.jp/jp/seisaku/bunkakeizaisenryaku/index.html>)
 - 일본문화부(2018). 예산개요(令和5年度 予算の概要)
 - 일본재무성(2023), 일반회계세출경비별내역(般會計歳出概算主要経費別内訳)
 - _____(2023), Japanese Public Finance Fact Sheet
 - 정보람(2016). OECD 주요국가의 문화재정 비교,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_____(2020). 지역문화재정 실태와 문화분권 및 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25(3), 63-89.
 - 정보람·이학준(2021). 분야별 정부지출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문화재정을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24(2), 29-51.
 - 프랑스 문화부(2023), Budget 2023 du ministere de la Culture Projet de loi de finances 2023
 - 프랑스 의회, 각 년도, 문화부 예산안(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 Culture) 발표자료
 - 프랑스 재무부, 각 년도, Dossier de presse-Projet de loi de finances
 - 한국재정정보원(2023). 2023 주요 재정통계
 - _____(2023). 재정통계 BRIEF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3). 2023 주요국 예산안: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 국외 자료

- Bjørnskov, Christian, Axel Dreher, & Justina AV Fischer. 2007. "The bigger the better? Evidence of the effect of government size on life satisfaction around the world." *Public Choice*, 130(3-4), 267-292.
- DCMS(2023).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1 to 2022
- Hessami, Zohal. 2010. "The size and composition of government spending in Europe and its impact on well-being." *Kyklos*, 63(3), 346-382.
- IMF(2014). GFSM 2014
- OECD(2019). 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 2019

- _____(2021). Government at a Glance 2021
- _____(2023). Government at a Glance 2023
- Pierre Moulinier(2011), Histoire des politiques de «democratisation culturelle»(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 p.3.
- UNESCO(2009),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 UK Parliament(2022), 세출예산안(Main Estimate memorandum 2022-23)

■ 웹사이트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https://www.openfiscaldata.go.kr/>)
- 독일 연방예산플랫폼(<https://www.bundeshaushalt.de/DE/Home/home.>)
- 영국 공공지출통계(<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public-spending-statistics-release-july-2023>)
- 일본 재무부 예결산데이터베이스(<https://www.bb.mof.go.jp/hdocs/bxsselect.html>)
- 프랑스 공공재정플랫폼(<https://www.budget.gouv.fr/>)

집필내역

연구책임

황아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연구총괄

연구자문

이성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곽소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과장

박다솔 프랑스 리옹2대학 공연예술학 석사

OECD 주요국가 문화재정 비교분석 연구

발행인 김세원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녕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3년 10월 16일

발행일 2023년 10월 16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SBN 978-89-6035-970-3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3.e1>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황아람(2023), OECD 주요국가 문화재정 비교분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3.e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 2669 9880

www.kcti.re.kr

